

# 또다시 불붙는 에바다

## 96년 이후 투쟁 1000일, 해결된 것 없어

[편집자주] 지난 96년 11월 27일 농아학생들의 시위로 시작된 평택 에바다복지회의 인권유린과 비리사태가 해결된 것 없이 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에바다 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만들고 7월 1일부터 명동성당과 평택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고 투쟁 천일 쉼을 맞는 다음달 18일 전국적인 규모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길고 긴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에만도 에바다농아원에서는 싸움에 동참하던 원생들의 의문사가 이어지고 학생들 편에 서서 싸웠던 교사는 해직됐으나 비리재단은 건재하다. 이에 에바다 사태를 이해하고 에바다 사태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공대위의 '요구안'을 요약해 실는다.

## ■ 에바다 정상화와 비리재단 퇴진을 위한 우리의 요구안 ■

### 인권유린의 현장 에바다...

6억 7천여 만원의 국고지원금 횡령과 근무하지 않고 봉급만 챙긴 13명의 친인척 유령직원, 이들 재단에게 장애인은 그들을 먹여주는 도구였을 뿐이었다. 주민등록증을 이중 발급해 국고를 이중으로 횡령했으며 그 확인된 숫자가 88명에 이르고, 장애인 수첩도 이중으로 발급했을 뿐 아니라 후원금을 모두 빼돌렸고, 어린 농아학생들은 재본 공장에서 새벽 1시까지 강제노역을 당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농아 어린이 70여명 인신매매, 미군에 의한 성추행 방치 등 이들의 만행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에바다에는 농아원생 구타사망 의혹·실종·번사체 발견 등이 잇달았으며 사태 이후 여러명의 원생들 손목에 담뱃불로 지진 자국이 5~6개씩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양심선언을 막으려는 극도에 달한 폭력행사 그 자체였다.

### 비리재단을 옹호하는 국가...

비리재단 최실자 일가가 저지른 이런 온갖 추악한 비리들은 지도감독 관청인 평택시의 관련 공무원들과 결탁되지 않았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범죄다. 평택시는 94년, 96년 각각 정기행정감사에서 '횡령사실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태 이후 김선기 평택시장과 평택시 측은 끊임없이 거짓말과 허위보고를 일삼아왔다. 97년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김선기 시장은 현 이사들을 국회보고 때 고의로 누락시켰고, 사태가 해결되었다는 허위내용의 유인물 11만장을 만들어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가가호호 돌리기도 했다. 98년 국정감사에서는 비리를 계속 지적해 오던 이성재 의원이 자신이 관선 이사로 농아원에 들어가

사태해결을 하겠다고 했지만 김선기 시장은 국정감사 시정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월 15일, 에바다 공대위는 김선기 시장과 비리재단이 97년 국정감사 후에 작성한 '비리재단을 인정하고 존속시키기로 한' 비밀 합의문을 발견했고, 이는 지난 7월초 SBS 8시 뉴스에 독점보도되기도 했다. 이 합의문은 지금까지 평택시와 재단의 결탁의혹을 입증하는 자료일 뿐 아니라,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김선기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비리재단과 연루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 농아아이들 꿈과 희망 무시하는 김대중대통령

국민의 정부, 인권대통령 김대중은 에바다 문제해결을 세 차례나 약속했다. 그러나 언론에 500여 차례나 보도됐고 UN인권위원회에도 상정됐던 에바다 사건에 대해 김대중 정부가 해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제 어린 농아 학생들과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투쟁은 1000일에 이르고 있다.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비리재단 완전 퇴진하라!
- 시설비리 척결하고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 청와대 특별 수사팀을 파견하라!
-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립하라!
- 에바다 재단을 공익법인화 하라!

## 【 행사와 등정 】

▶ **기아특수강 해고자 전원복직과 공안탄압 중단을 위한 전북비대위 기아특수강 본사 상경집회**  
 ■ 7. 21(수) 오후 2시 / 군산천막농성장 오전9시 집결

▶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 통일대축전 전북추진본부 결성식**  
 ■ 7. 22(목) 오전 10시 / 전주 가톨릭센터 1층

▶ **군산 기아특수강 정문 집회**  
 ■ 7. 23(금) 오후 4시 / 군산 기아특수강

### 독자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구독문의: 0652-231-9331 /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 ·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 지문날인 거부 2차 선언자 대회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 경찰, 이미 1170만명 지문 전산화 완료 “새 주민증 수령 거부 국민운동 벌일 것”

주민등록 지문날인 거부 선언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한편에서는 경찰이 이미 모두 1170만명의 열 손가락 지문을 전산화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이미 지난 90년부터 지문 전산화 작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65년생 이하 남성 800만명과 여성 370만명 등 포함 1170만명의 열손가락 지문 모두를 전산화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지난 5월 서울의 대학가 시위 때에 불심검문을 하면서 전자지문감식기를 역이나 고속터미널, 대학가 주변에 가지고 나가 지문을 전자감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준)>(이하 운동본부)는 19일 성명을 내 “정부와 경찰이 불법적으로 지문 전산화 작업을 벌여왔다”고 규탄했다. 운동본부는 그 근거로 △지난 30년 동안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채취해 왔다는 점 △이러한 지문을 경찰에 넘겨줄 법률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있더라도 그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조치라는 점 △지문 등 개인정보를 전산화시킬 경우의 인권침해 소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10년 가까이 이 작업을 진행해왔다는 점 등을 들었다.

운동본부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공개하고 불법적인 지문전산화를 진행한 경찰과 행정자치부 관계자를 처벌하고 지문전산화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정부와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정보를 폐기하고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와 같은 요구가 무

시될 경우 지문날인 거부운동의 전국적 확산은 물론, 법률적인 대응과 새 주민증 수령을 거부하는 범국민적 저항운동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1면에서 이어짐]

나와 있는 저쪽의 노동자들이 불쌍하다”고 말했다. 한상열 목사는 “내 밥 줄만 생각하지 말고 같은 노동자로서 해고자들의 이름과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기아특수강 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 김상배 위원장과 김정기 교섭위원

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는 재판부가 문정현 신부의 단식투쟁과 전북지역 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전주 군산 서울 등지에서 계속 집회를 열고 해고자들에 대한 전원복직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문정현 신부는 단식 8일째인 지난 15일 오후 3시경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돼 군산의료원에 옮겨졌으며 19일 현재 익산 원광대학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 함께 떠나요 인권캠프! <제1회 청소년 인권캠프>

- 때: 7. 22(목)~23(금)
- 곳: 김재 수류성당 교육관
- 주최: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출발장소: 전주 전동성당 마당, 22일 9시 반

##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법

1. 지문날인 거부의 방법
  - 지정된 날에 동사무소에 가지 않거나 나가도 날인을 거부한다.
  - 지문날인 거부선언을 공개적으로 한다.
2. 지문날인 거부선언(택1)
  - 각 통신망(참세상:go 지문거부, 나무누리:go acro, 천리안:go forum, 하이텔:go newconf) 지문날인 거부 서명게시판에 선언. 지문날인 거부 홈페이지(<http://fprint.jinbo.net>) 서명게시판. 인터넷 메일주소 [fprint@jinbo.net](mailto:fprint@jinbo.net)로 인터넷 메일 발송. fax 02-796-8004.
3. 지문날인을 거부하면 ...
  - 주민등록증을 경신할 수 없다.
  -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2000. 5.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2000. 6. 1일부터는 국가신분증이 없는 상태가 된다.
4. 행정처벌이 있는가?
  -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에 응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지는 않는다(만 17세가 되는 신규발급자 제외).
  -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부과대상자를 모두 모아 '무료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조작간첩 양심수 이화춘씨 옥중편지>  
**“감옥 사정 달라진 게 없다”**

[편집자주] 전북 익산 출신의 양심수 이화춘씨는 지난 94년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7년형을 선고 받고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5년째 수감돼 있다. 이씨는 박홍 총장의 주사 파 발언 등 공안세력이 비이성적 공안 바람을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구속됐다.

국가보안법의 해악에 대해서는 제가 세삼 거론할 필요는 없을 테지요. 저는 비유를 들어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미친개와 조급도 다르지 않다는 것일요. 미친개가 배주에 시내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면 그 미친개를 때려잡지 않고는 어느누구도 미친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일이지요. 미친개는 어느 특정인만을 골라서 물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미친개  
 얼마전 김대중 대통령의 양심수 사면 발언을 계기로 시작된 사면 논의가 저에게는 썩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사면의 전제에는 준법서약이 따리를 틀고 있기에 저와는 상관없는 말이기도 하거나와 이러한 굴욕적인 사면이 거듭될수록 준법서약이 제도로서 정착되어지는 것이기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상전향제도와 조급도 다르지 않은 준법서약제도를 놓고 어떤 분들은 어쨌든 사상전향제보다는 진일보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를 서슴없이 말하는데 저는 그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진일보한 듯 그럴 듯 해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반대인 계약이라고 혹평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사상전향제도가 진정으로 폐지되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밖에서 감옥 안의 사정

을 잘 모르는 분들은(감옥을 살았다 해도 전향대상인 아닌 사람들도 마찬가지) 대통령이 선언을 했으니 완전히 폐지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과거 비전향수에 대한 처우규정은 토씨 하나 변한 게 없습니다. 그동안 정치적으로는 온갖 수사가 난무했지만 현실적으로 법무부당국의 인식의 변화와 비전향 정치범에 대한 처우지침은 아무것도 내려온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전 여전히 비전향 공안수일 뿐입니다. 웬만한 일반수는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전화조차 사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감옥 안 전향공작 여전  
 다음으로 과거에는 학생이나 노동자, 경미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은 전향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향서를 강요받지 않았는데 지금도 누구나 예외 없이 준법서약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준법서약서를 만들면서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박상천씨는 준법서약이란 교통법규를 지키겠다는 정도의 것에 다름이 아니냐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더니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은 한술 더 뜨더군요. 자신도 대통령에 취임하며 선서를 했다고 말합니다. 국민들을 우롱하는 궤변에 다름아닌 것이지요. 준법서약이 그렇게 당연한 것이라면 셀 수도 없이 많은 인권을 저버린 흉악범들에게 준법서약을 요구한 적이 있는가, 수많은 양민을 학살한 학살의 우두머리 전두환과 그 하수인들에게 준법서약을 요구한 적이 있는가, 왜 유독 양심수들에게만 준법서약을 강요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내면세계는 그 어느 것, 그 누구에게로부터도 침해당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입니다. 앞으로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견으로 미리 준법

서약을 받는다는 것은 형벌의 대원칙은 그만두고라도 이 사회가 법치국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준법서약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세계까지 간섭하고 지배하려는 국가권력의 횡포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사상전향제도에 다름아닌 준법서약제가 결코 이 땅에 정착되어서는 안될 반민주적 반사회적 제도가 분명하다면 누군가는 감옥에 남아서 몸으로 부딪쳐 깨뜨려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배 푸는’ 사면 달갑지 않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저의 지난날, 이 땅의 민주사회를 위해 더 성실히 더 철저히 활동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다짐의 몸짓이기도 합니다.  
 왕조시대 제왕이 은전을 내리듯 달갑잖은 사면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준법서약을 전제하지 않는 사면도 환호하지 않습니다. 국보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또 다시 감옥은 꼭 할 것이며 그 중에는 제가 또 끼어 있을 테니까요. 하여 제가 바라지 않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완전하게 철폐되어 당당하게 옥문을 나서고 약법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지난 사면 때 준법서약 의사 여부를 확인하려 온 검사가 가족 생각을 해야 하지 않느냐며 준법서약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더군요. 울컥 화가 치밀어 내 가족을 누가 나보다 더 사랑하고 걱정하겠느냐고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준법서약을 거부하는 당위성에 대해 길게 얘기해봤자 쇠귀에 경외기이겠기에 “나는 석방되면 바로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할 것인데 그 법을 지키겠다고 할 수 없다”는 한마디만 하고 돌아서 나왔지요. 그렇습니다. 간혀있으니 마음 뿐이긴 합니다 늘 성원을 보내며 석방 후에도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999. 7. 13  
 빛고를 옥에서 이화춘 드립니다.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57 호  
 1999년 7월 27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 문만식

· 주소) [560-040]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52-231-9331 · 팩스) 0652-231-9332  
 ·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inp.or.kr · Homepage : http://inp.or.kr/onespark

**안풀린 의문사 진상**  
**‘평화와인권’ 교도소장 상대로 소송**

지난해 발생한 전주교도소 재소자 배재문씨 의문사 사건에 대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가 전주교도소장장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냈으므로 이 사건의 진상규명 문제가 새 단계에 들어섰다.  
 정보비공개 취소소송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이 단체 사무국장 문만식(30)씨를 원고로 27일 제출한 소장에서 “피고인 전주교도소장이 99년 4월 27일자로 원고에 대하여 98년 11월 20일 발생한 전주교도소 수

용자 배재문씨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전주교도소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문 사무국장은 지난 4월 15일 전주교도소장 앞으로 행정정보공개청구서를 보내 “인권단체들의 ‘진상조사단’ 파견조사 협조요청을 교도소가 거부한 것은 유감”이라며 “배씨 재소기간 중 신분장부 수용자명부 징벌부 사망장 등 진상에 관한 기록 자료, 법정소란 후 배씨를 면담한 당직자와 면담내용, 당시 보관하고 있던 끈의 조각을 지시한

직원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교도소측 책임 물을 것”  
 문 국장은 이밖에 △98년 11월 19일과 배씨 사망일(교도소측 발표)인 20일의 의료일지와 밤참 제공 여부 △배씨의 집필 장소와 집필 도구 소지 경위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과 징계 내용 등 모두 18개 항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문 국장은 “유가족과 우리가 사건에 여전히 의혹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당연한 것”이라며 “배씨 사망에 대한 교도소측의 직·간접적인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문날인은 반문명 제도”**  
 지난주 도내 첫 ‘지문날인 반대’ 캠페인

지문날인제에 반대하는 캠페인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4일 열렸다.  
 전주 코아백화점 앞에서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는 청년진보당 전주완산지구당, 정보통신연대INP,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 회원들은 “지문날인제도는 이미 60년대 탄생 때부터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이용돼 왔다”며 “지문날인은 즉시 폐지돼야 할 반인권 제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캠페인에 참가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지문날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또한 지문날인제가 나쁘다며 반대 서명에 동참하는 시민이 있는 한편 고령자들은 대개 “국민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캠페인을 주최한 이들 단체 회원들은 “시민들의 관심이 뜻밖에 많았다”며 “앞으로 캠페인을 계속하고 따로 조직도 만들어 지문날인 반대운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내에선 활동 못한다?**  
 도교육청 학교장에 공문 시달

전라북도 교육청이 최근 도내 각급 학교장에 “단위 학교에서는 공식적인 노조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내 말썽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은 노동조합비 일괄공제 문제 등 노사관계 쟁점사안에 대한 처리 방안을 담은 <교원의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 공문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교내에서 분회 간판 부착이나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차상철)는 이와 관련해 “조합원인 교사가 학내에서 노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학교 정상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조합활동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대립하고 있다.

# “하늘같은 분이 어떻게...”

## 기아특수강(주) “면담은 아무나 하나”

기아특수강(주) 간부와 주채권자인 한국산업은행 간부는 ‘하늘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지난 21일 <기아특수강 해고자 원직복직과 공안탄압 중단을 위한 전북사회단체 비상대책위> (상임대표 문정현 신부·비대위)는 법정관리 상태에 놓여있는 기아특수강(법정관리인 전선기)의 주채권자인 한국산업은행 총재를 면담하기 위해 상경했다. 비대위 참가단체 대표들을 포함한 30여명이 관광버스에 올랐다. 산업은행 앞에는 전해두 해고자들과 한화오트론·현대중기산업 해고노동자들 100여명도 비대위가 주최한 집회에 결합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비대위는 사전에 공문을 띄워 면담 날짜를 통보하고 해고자 복직 요구를 담은 ‘항의서한’을 꼼꼼히 준비했다. 그러나 비대위 면담대표단은 약 3시간 동안 서너차례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치른 뒤에야 산업은행의 ‘높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23일 오후에는 군산 기아특수강(주) 정문에서 또 한 차례 비대위 집회가 열렸다. 500여명의 전투경찰이 동원됐고 집회신고 장소에는 회사가 준비한 거대한 철제 바리케이트가 쳐졌다. 이날 비대위 대표들은 “기아특수강 이사가 상임대표인 문정현 신부를 제발로 찾아와 협상중재를 요청해 놓고서 뒤늦게 판전을 피우고 있다”며 이사가 직접 나서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 7일 회사 간부 면담을 요구하려 가던 문 신부를 회사 직원들이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몇 차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나서야 면담요구를 마지못해 받아들였고, 이사가 직접 나와 해명할 것을 요구하자 “하늘 같은 분이 어떻게...”라며 거절했다.

비대위 사무국장인 해고자 조성옥씨는 “면담이 결국 이뤄져도 그들은 정작 당사자인 우리 해고자들을 피하고 있다”며 회사의 ‘주인과 노예의식’을 비난했다.

## 보안법 철폐·동포돕기 강조

### ’99 통일축전 전북추진본부 결성

지난 7월 22일 전주 가톨릭센터에서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 통일대축전 전북추진본부’ (이하 ‘통족 전북본부’)가 결성됐다. ’99 통일대축전은 올해로 열번째를 맞는 범민족대회와 함께 남북해의 3자가 연대하는 거족적인 통일의 장으로 마련됐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전농전북도연맹 등 10여 개 사회·학생 단체들로 구성된 통족 전북 본부는 이날 결성식

을 통해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이라는 기치 아래 8월 15일 통일대축전 본행사까지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결성식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통족 전북본부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북녘동포돕기를 통한 민족화해 분위기 조성 △분단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민족대단결에 기초한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 확산 및 민간차원의 자유로운 통일논의 보장 등의 중심과제를 천명했으며 “특히 국가보안법 철폐와 북녘동포돕기 운동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통족 전북본부는 통일 강연회 (29일),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거리문화제 (8월 6일), 평화군축토론회 (8월 9일), 통일마라톤대회 (8월 14일) 등의 행사를 가지면서 15일 판문점에서 있을 ’99 통일 대축전에 참가할 예정이다.

## 거부해도 몇몇하다

### 인권단체들, 지문날인 거부 서명자 모집

도내 인권·사회단체들이 주민등록 지문날인 거부 선언에 참여한 시민을 모집하고 있다. 정보통신연대INP 등 단체들은 “지문날인을 거부하더라도 과태료 등 행정처벌은 없다”며 피해가 가는 경우 무료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서명 : 전주 255-9151, 231-9331, 272-1275)

### 【 행사와 등정 】

▶ 전주권 그린벨트 전면해제 철회 촉구 기자회견  
■ 7. 29(목) 오전 10시 / 전주 가톨릭센터

▶ 민족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통일강연회  
■ 7. 29(목) 오후 7시 30분 / 전주신협중앙회 5층

▶ 기아특수강 해고자 전원복직 촉구대회  
■ 7. 30(금) 오후 4시 / 군산 기아특수강(주) 정문

▶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결의대회  
■ 8. 1(일) 오후 5시 / 전주 코아백화점 앞

독자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구독문의: 0652-231-9331 /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 ‘그린벨트 해제’ 철회 촉구

## 전북환경운동연합 성명

지난 13일 정부는 그린벨트 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전주권 그린벨트 전면해제를 발표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대표 전봉호)은 이에 대해 “정부의 이번 방침은 지역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환경파괴 정책”이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성명을 내 “이번 방침은 건설교통부가 용역을 주고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원래 계획대로 짜맞추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도시팽창 억제와 자연환경보존의 보루 역할을 해왔던 그린벨트를 대책없이 무너뜨려 국토 황폐화를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지역주민들이 그린벨트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린벨트 구역은 철저히 묶고 그 밖은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해 그린벨트 주민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불러일으킨 데 있다”면서 그린벨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로소득을 가져오는 투기적 개발을 제한하고 개발지역에서 개발이익금을 환수하여 재산권에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등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린벨트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이용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한 제도를 바꾸면서 관련 민간단체의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이번 그린벨트 제도 개선 논의를 볼 때 “내년 선거에 즈음하여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의혹을 나타냈다.

환경운동연합은 29일 오전 전주 가톨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권 그린벨트 전면해제 철회를 촉구하기로 했다.

## 【현장인터뷰】

### ■ 현자서비스 전북지부장 박종철씨 ■

- 지난 4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67일간의 수배생활 직후 해고통보를 받은 현대자동차서비스 노동조합 전북지부의 박종철 위원장을 만나봤다.

○ 수배는 해제되었나요?

▶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지난 2일 전주 북부서에 자진출두해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 후 김·경에서는 가타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 그런데 3일후 회사측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 해고사유는 뭐니까?

▶ 불법쟁의 주동, 업무방해 등 7가지 이유를 들어 통보했다. 회사는 우리 노조가 단결이 잘되는 강성노조이니까 자꾸 나를 조합원들과 격리시키려 한다. 고소를 해서 구속시키려고 했는데 구속이 안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해고’의 칼을 들이대는 거다. 물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본사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는 상태다. 만약 거기에서도 안되면 행정소송과 민사 등 끝까지 해볼 것이다.

○ ‘판매소사장제 전환 반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판매소사장제는 영업사원 한 명 한 명에게 대리점을 내리는 거다. 그리고 판매수익의 4-6%를 주겠다는 건데 한마디로 정식사원을 계약직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겉으로는 사장이지만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대리점을 내기 위해 2억 4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가족까지 보증을 세우고 있다. 판매실적이 부족하면 자기 돈으로 막을 것이다. 판매소사장제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첨단적 방법의 하나이다. 물론 노조 무력화의 효과도 거둘 것이다.

○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나요?

▶ 우리는 집회 한 번 하면 90% 이상이 모인다. 지난 4월 27일 회사가 노조와 협의없이 판매소사장제로 돌리고 나서 현재까지 92일째 준법투쟁을 하고 있는데 흔들림이 없다. 지난 4월 27일부터 매일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원이 돌아가면서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이번 싸움에서 지면 우리 끝이다. 조합원들도 그런 마음으로 싸우고 있다.

○ 가장 힘든 점은?

▶ 해고 무효싸움과 판매소사장제 전환 무효화 싸움을 함께 하려니까 좀 힘이 든다. 이길 수 있는 방법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 그대로 하면 쫓겨라 생각한다.

○ 김대통령의 ‘선처’ 약속에 대한 기대는?

▶ 나 개인적으로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한편으론 기만적이라 느낌도 강하게 든다. 파업유도 발언 파문은 싸우기에 좋은 기회였는데 겨우 ‘구속자 석방 선처’로 넘겨버렸다는 게 화가난다. 정치권에 휘둘리고 있는 것 같아서... 국회의원이 노동자 파업 플랑을 보면 자기문제로 삼을 만큼 노동자가 힘을 키워 정치세력화할 필요를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낀다.

# 인권과 복지에 대한 신창원의 역설(逆說)

인권주평

윤 찬 영(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사회복지학)

드디어 신창원이 잡혔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형법이 견지하고 있는 원칙 중의 하나이다. 이 말의 뜻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엄격하고 단호하게 벌칙을 부과해야 하며, 범죄인은 선도하여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성선설과 평등주의 입장에서 법적 정의와 인간존중의 이념을 함치한 실천 원리이다. 그러나 보통사람들에게는 죄인과 그의 행동을 분리시켜 인식하기란 쉽지 않다. 범죄인은 인간적으로

혐오 또는 증오의 대상이 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창원에 대해서만큼 많은 사람들이 범죄 따로 사람 따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의 죄질은 나쁘지만 ‘연연중에 그를 응원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다.’

드디어 신창원이 잡혔다. 이로써 2년 반 동안의 드라마는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부터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는 우리가 차마 보이고 싶지 않았던 차마 속에서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불잡혀 이제 그 차마 속에 대해 입을 열고 있다. 우리사회의 썩어빠진 단면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에 경찰과 마스크에 서는 신창원의 흉폭함과 파렴치함을 부각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다.

신창원은 이제 하나의 사회적 신드롬으로 자리잡고 있는 듯하며, 그와 그의 행적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그동안 신창원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다. 이 비싼 대가를 낭비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진지하게 그 교훈적 의미를 더듬어 보고 싶다.

지난 '90년대 초반 교도소 탈주범 일

당이 서울시내를 휩쓸면서 한 동안 잠안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던 적이 있다. 그 때 주범 중의 하나인 지강현은 유전무죄(有錢無罪)요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명언 중의 명언을 남기고 홀리데이(Holiday)라는 팝송을 틀어달라면서 영원한 휴가를 떠났다. 그리고 그 이후 지존과와 막가파, '90년대 뜨뜨머리에 신창원이 서게 되었다. 신창원은 “법은 만인 앞에 불평등하다”는 태제를 선포하였다. 이들을 임격정이나 흥길동, 장길산 그리고 로빈 훗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기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고 함량이 미달인 것은

## 신창원을 보면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가 보인다.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창원에 대해 범죄인치고는 후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일까? 신창원을 보면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가 보인다. 특히 복지와 인권 측면에서 개혁과제를 선명하게 보여 준다. 신창원의 성장과정, 그 간의 행적, 그의 의식의 단면들을 보면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보장, 가정보호정책, 학교사회복지, 교정복지, 여성복지 등의 필요성을 쉽게 읽을 수 있으며, 우리 사회가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해 왔는지 알 수 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지 않다

우선,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하다는 원리가 한낱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서양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자본과 노동의 갈등을 통해서 깨달았다. 따라서 실질적인 평등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세력이 형성되고 이들을 통해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

법 내지 사회복지법들이 도입되고 실시되어 온 것이다.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지 않았으면서도 애써 평등하다고 외쳐 왔다. 앞으로도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상황이 개혁되지 않으면 신창원류의 사건과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농촌을 철저히 파괴시킨 경제성장정책이 없었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었다면, 가족의 기능을 유지·강화해 주는 보호정책적 서비스가 주어졌다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학교사회복지프로그램이 있었다면, 교

도소가 사회를 방위할 뿐만 아니라 범죄인의 사회적응력을 키워 주는 교정복지프로그램을 제대로 실시했다면, 많은 여성들이 몸을 팔지 않도록 사회적

지원체계가 존재했다면, 신창원은 그 과정 어디에선가 보통의 청년으로 살아 갈 수 있었을 것이며 사회 발전에 생산적으로 기여했었을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또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가 정상적으로 충족되지 않고 또한 그 피해자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끼게 될 때, 노예처럼 자신의 감정과 감각을 죽이고 살거나 종교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살이나 동반자살과 같은 자기파괴적 행태를 보이거나 범죄를 통하여 사회에 대해서 무차별적 공격을 가하는 사람들도 많다.

신창원을 미화하려는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사회 곳곳에 널려 있는 부패와 불평등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부자이든 빈자이든 한 시도 편할수 없으며 함께 산다는 것을 포기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점을 대오각성해야 한다.



#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58 호

1999년 8월 2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 문만식

· 주소) [560-040]전주시 원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52-231-9331 · 팩스) 0652-231-9332 ·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inp.or.kr · Homepage : http://inp.or.kr/onespark

## '자주대오재건위' 조작의혹

### 기무사·경찰, 군인 등 원광대 출신 11명 조사

국가보안법에 의한 학생운동조직 사건이 일어났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29일 구성된 '원광대 프락치 공작을 통한 조직 조작사건 규탄 전북시민사회단체 비대위'(대표 리수현 신부의 3명)는 '경찰 정보원을 이용한 사건 조작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또 이들 피의자들이 대부분 학생운동과 단절된 상태여서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전 7시경 익산 신동에서 원광대학교 출신 양말희씨(정보관리학과 졸업·91학번)와 학생 임장현

씨(치의예과·96학번)가 보안수사대 수사관들에게 강제연행된 데 이어, 전날 군에 입대한 박인호씨(법학과·91학번)가 기무사에 연행되는 등 28일과 29일 이들 동안 원광대학교 학생과 이 학교 졸업자 10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돼 전북경찰청 보안수사대와 각 부대 기무사에서 조사받고 있다. 또 군복무중인 오재중씨(법학과·93학번)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관련자 명단: 하단). 연행자들 중 박인호씨 등 군복무자 5명을 제외한 5명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30일 오

전 5시경 석방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29일 연행자들을 면회한 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 관련자들이 지난 95년의 '원광대학교 자주대오' 사건 이후 <원광대학교 자주대오 재건위>(이하 재건위)를 구성해 활동해 왔다는 혐의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은 일부 피의자들이 <사회주의 혁명대오>라는 조직을 구성해 활동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한편 경찰이 이적단체 혐의를 두고 있는 재건위의 '공개조직'으로 보고 있는 '푸른공동체 21'은 '실업극복운동 사회봉사활동 의식개혁운동 등 공동체 사회 건설을 위한 여러 캠페인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적단체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푸른공동체 21'은 특히 "경찰이 조직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불법적으로 정보원을 이용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회의 등을 녹취해 왔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3일 오전 10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사무실에서 사건 '조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 ■ 관련자 명단 ■

- 정 선 (교육학과졸·89·주부)
- 양말희 (정보관리학과졸·91·주부)
- 이진홍 (법학과졸·군제대)
- 양찬영 (치과대·94)
- 임장현 (치과대·96)
- 박인호 (법학과·91·군인)
- 김익환 (법학과·92·군인)
- 임형택 (한문교육학과·92·군인)
- 정기환 (전기공학과·94·군인)
- 주용석 (물리학과·96·군인)
- 오재중 (법학과·93·군인·체포영장)

## '양심이 그를 가두고 있다'

### 양심수 이화춘씨 석방촉구 기자회견

이화춘씨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8·15특사를 앞두고 지난달 29일 오전 전주 가톨릭센터에서 열렸다.

양심수 이화춘(42)씨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지난 94년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7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교도소(5021)에 수감중이다.

<이화춘 석방대책위원회>(대표 이수현 신부, 한상열 목사·대책위)는 "이화춘씨는 일본에 있는 숙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은 것이 안기부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으로 조작됐다"며 이화춘씨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준법서약서가 인간의 내면을 간섭·침해하는데다 유독 양심수에게만 강요되고 있다"며 준법서약서를 거부하고 있는 이화춘씨를 조건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까지 이화춘씨 석방 탄원에 서명한 사람은 종교·농민·노동계 등 모두 1천여명이다.

【현장 인터뷰】

■ 군산개정병원 김은혜 위원장 ■

지난 4개월간 힘든 싸움을 진행하면서 군산 개정병원 노동조합은 위원장이 두 번이나 바뀌는 진통을 겪으면서도 현재 80% 이상의 높은 참여로 당차게 싸우고 있다.

지난 7월 7일 위원장으로 당선된 김은혜 위원장을 서천 서해병원 앞 집회장에서 만나봤다.

○ 위원장이 된 동기는?

류용 전 위원장이 정보과 형사들 말만 듣고 우리가 원하는 싸움은 하지 않은 채 밖으로만 돌려 싸워야 할 시기를 많이 놓쳤다. 보다 못한 우리들이 투표로 전 위원장을 불신임했고 새로 다른 위원장을 뽑았다. 그러나 새로 당선된 위원장의 집안식구들에게 형사라고 하면서 "위원장을 하면 온 집안 식구들에게 헐거울 것"이라는 협박전화 가 계속 걸려왔고 새 위원장은 가족에게 많이 시달려야 했다. 결국 가정적으로 별 문제될 것이 없는 내가 다시 위원장을 맡게 되어 7월 7일부터 일하게 됐다.

○ 그간 진전된 것은 있나?

이상용 이사장 본인이 제안한 협상자리에서 민주노동조합 군산지부 지도위원에게 허리띠를 휘두르는 몰상식한 행동을 해 고소를 당한 후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사장과는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개정병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상용 이사장 퇴진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상용 이사장은 현재 개정병원 외에도 서천 서해병원과 부여 성요셉 병원, 강진 성모병원 이렇게 세 개의 병원을 가지고 있는데 서해병원을 제외한 두 개의 병원 모두 개정병원처럼 휴업 후 자동폐업 형식으로 병원을 삼킨 브로커다. 이상용 이사장 자신도 '나는 의사가 아니라 장사꾼이다'라고 공언하고 다닌다. 우리가 보기엔 사기꾼이다. 이상용 이사장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동반자를 찾을 것이다. 현재 이사장을 강제노동, 불법 파견근무, 체불임금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와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 힘든 점은?

이상장이 병원의 전기·수도세를 내지 않아 수도가 끊겼고 곧 전기도 끊길 예정이다. 솔직히 우리 노동조합은 병원 창설 이후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지냈기 때문에 이번 싸움이 처음이다. 그런데 그 첫 싸움이 병원 자체를 사수해야 하는 힘든 싸움이 된 거다.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몰라 많이 해냈다. 그러나 4개월을 거치면서 많이 단련됐고 또 흠이 되지 않았다. 이대로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간다면 승리할 거라 믿는다. 우리 노조는 지금껏 '나홀로' 노동조합이었다가 민주노총을 비롯한 지역의 여러 노동단체와 함께 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다. 책임을 다하고

있다.

대호물류 군산출장소장 실형 선고

사장은 도피행각·풀어야 할 문제 산적

지난 5월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됐던 노호욱 대호물류 군산출장소장이 7월 27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주나 중간관리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기는 처음이다.

그러나 군산지역 카캐리어 노동조합(위원장 오상수)은 대호물류의 실제 경영주인 이성열 사장이 도피행각을 그치고 대화의 자리에 나설 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카캐리어 노조는 노소장 뿐 아니라 불구속 기소된 공범 4명에 대한 처벌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조합원 장성민씨에 대한 경찰의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신청을 준비중이다. 해고자들에 대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과 위자료 지급, 노조탄압 중단 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행사와 등정】

▶ 전주권 그린벨트 전면해제 철회 촉구 기자회견·거기행진 및 집회

■ 8. 4(수) 오전 10시 / 전주가톨릭센터·코아백화점

▶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군속 토론회

■ 8. 9(월) 오후 7시 / 전주서학동성당

▶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거리문화제

■ 8. 13(금) 오후 6시 / 익산제일은행 앞

▶ 석방 양심수 환영대회

■ 8. 14(토) 오전 10시 / 전주교도소 앞

▶ 북녘동포돕기와 통일열원 단속 마라톤대회

■ 8. 14(토) 오후 4시 / 전주 다가공원

▶ 조성만 열사 추모비 제막식

■ 8. 15(일) 오후 3시 / 전주해성고등학교

독자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구독문의: 0652-231-9331 /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인권3법 제대로 만들어야

평화와인권, 의문사특별법안 등 문제점 지적

2일 시작된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인권관련 법안에 대한 비판적 지적이 나왔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평화와인권)는 2일 '인권3법안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민회의가 국회에 제출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이하 민주화운동법안)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이하 의문사특별법안)이 "그 적용범위의 제한 등 민주화 이념에 모순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민주화운동법안이 그 적용범위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하고 있기에 근거해서 민주화운동을 개념정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법률안에 따를 때 국가공권력(검찰권력 사법권)의 형식을 빌어 사형집행을 당했거나 인신의 구속을 당한 자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는 자는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인혁당사건과 진보당사건 등이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평화와인권은 "독재정권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다가 피해를 입은 것이건 독재권력의 음모에 따라 희생당한 것이건 그들의 명예는 모두 회복돼야 한다"며 이 법안의 적용대상에 '민주화운동관련자' 뿐 아니라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희생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문사특별법안에 대해서도 "이 법안대로 민주화운동관련 의문사와 그렇지 않은 의문사를 구별하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데다 민주화의 이념에도 모순된다"고 지적하고, 이 법안에 따라 설치될 진상규명위원회는 의문사를 포함해 공권력의 과거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도 함께 벌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권침해행위를 청산하려면 의문사 뿐만 아니라 적어도 고문과 장기간 불법구금은

조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의 밑바탕에는 장기간 불법구금과 고문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것이 일어나는 제도적 환경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근본적으로 의문사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깔려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권관련법안은 이 두 법안과 인권법(안) 등 모두 세 가지다.

주민중 갱신 강요

게시·방송까지 "너무한다"

최근 주민등록증 갱신작업과 관련해 읍 면 동사무소 등지에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리하게 갱신을 강요해 주민들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피시통신과 인터넷에는 이러한 피해사례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의 강모씨(26세)는 어머니가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 딸은 지문날인을 거부해서 발급하지 않겠다"고 전하자 동사무소 직원은 강씨의 동의도 없이 현행 주민증에 있는 지문을 스캔하고는 강씨의 어머니에게 "사진만 가져오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사는 정모씨는 "제발 발급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이 아파트 계단에 붙어 있는 것은 물론 매일 저녁 동호수와 이름까지 방송해댄다"며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분노했다.

또 홍모씨는 "동장 이름으로 '이번 주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을 말소하겠다'는 협박장이 집에 날아들었다"며 "그렇게도 나를 꼬치꼬치 알고 싶어 한다면 차라리 냉동인간이 돼 버리고 싶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지문날인 거부운동본부(준)는 지난 29일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최근 주민

등록증 갱신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태는 주민등록증 갱신을 홍보하는 행정안내를 넘어서 읍·면·동 행정기관은 물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읍·면·동 공무원들에게 할당량을 부과하여 공휴일까지 쉬지 않고 근무하게 하는 행정자치부의 행정지침이 문제"라면서 "이번 사태의 주범은 행정자치부와 중앙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이러한 행정지침 철회와 지문날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운동본부에서는 유사한 피해사례를 모집하고 있다(0652-231-9331, 02-778-4001).

조건없는 전원석방을

전북연대회의 8·15석방 촉구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전북결의대회'가 지난 1일 전주코아백화점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전북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이수현 한상열 김승환) 주최로 진행됐다.

이수현 신부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양산된 양심수들을 조건없이 이번 8·15사면에서 모두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가보안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돼 수많은 조작사건을 만들어냈으며 정권의 필요에 따라 진보세력을 탄압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전주백화점 앞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끝을 맺었다. 9월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정부가 취할지, 그리고 8·15사면에서 얼마만큼의 양심수들이 석방될지 주목된다.

【평화와인권】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애정을 후원으로 보내주시시오.

인권주평

# 외국인노동자, 3종의 착취대상

이 희 운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장·나실교회목사)

지금 전세계는 급격하게 하나의 경제 체계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은 우리나라에서도 보편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온상 속에서 커나기던 한국경제는 국가를 뛰어넘는 초국가적인 투기자본의 먹이가 되어 가고 있다고들 한다. 그와 반면에 아시아에서는 비교적 임금이 높은 한국에 저소득국가의 외국인 노동력이 몰려들어 상당수의 3d업종을 지탱해 주고 있는 현실이다.

전북지역에서도 강제 정읍 납원 임실 등의 농공단지, 그리고 전주 팔복동 등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나 불법 체류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남편 아내 자녀 부모를 남겨두고 한국에 꿈을 찾아 왔지만 1년쯤 지나고나면 그 꿈이 잘못이었음을 깨닫고 만다.

우선, 그들이 한국에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한국에 소개해 주는 송출업체에 1년 내지 2년의 수입에 해당하는 소개비를 빚내어 선불로 주고서 한국에 들어온다. 1차적으로 그들 나라의 송출브로커들에게 착취를 당하는 것이다.

둘째로, 한국정부는 반인권적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불평등한 노동정책을 고수하며 2차적인 외국인노동자 착취를 저지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제1장 제5조(근등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앞장서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통제하고 있는 현실이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중앙협의회를 통하여 외국인노동자를 배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영세기업의 사장들에 의하여

3차적인 착취가 행하여진다. 물론 훌륭한 기업가들이 성실성의껏 대우해주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부도사건, 산재 등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외면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전북지역에서의 몇몇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침해사례를 아래에 소개해 본다.

## 외국인 노동자 상담사례

1. 피터트(베트남)는 1997년 2월부터 동년 11월까지 정읍에 있는 조양전구에서 근무하다가 이탈하였다. 귀국을 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적립금을 확인

하도록 추진중이었으나 회사에서 노동부와의 약속날짜(1999년 7월 2일)까지 지키지 않았으며 1999년 3월부터 회사임금체불로 인해 자동 불법체류자가 되어 현재 여수 출입국관리소 보호소에 감금되어 있다. 외국인노동자가 임금체불도 당하고 회사의 불법행위로 불법체류자가 되어 감금되는 현실은 너무도 좋지 않다. 더구나 보호소의 의료서비스가 되어있지 않아 허리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의 반인권적인 법운용으로 인한 인권유린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3. 자마루딘(인도네시아)은 98년 6월 28일 임금체불 사건으로 의뢰하였다. 문제회사인 김제 선양금속은 96년 6월 8일부터 97년 3월 15일까지 자마루딘의 임금을 체불하고

사장이 송금할 120만원을 가지고 도주하여 행방불명이 된 상황이었다. 익산노동부와 김제경찰서 등의 협조를 얻어 사장을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 인도네시아 에이전시에 연락하여 선양금속에서 보증금식으로 내놓은 돈 중에서 일부를 자마루딘 통장으로 입금하고 종결하였다.

이상의 몇몇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는 우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지독한 노동착취는 물론 체 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 외국인노동자를 관리한다는 경찰서의 의사계에 서마지도 왜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지, 예방에는 힘쓰지 않고 사용자들만 이야기를 나누고 만다는 것이다.

OECD에도 가입된 한국정부, 기업체, 송출업체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근로기준법에 맞게만 적용된다면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한 단계 높이고, 소위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한다.

## 외국인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걸맞는 대우를 ...

하였으나 11월에 적립금(2,778,176원) 전액을 회사에서 찾아간 후였다. 1999년 1월 조양전구 총무부장과의 대화를 했으나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1999년 1월 11일부로 노동부에 진정을 냈으며 2차에 걸쳐 출석요구에 응하고 상담소에서 회사에 직접 찾아가 봤지만 지급할 의향이 없어 보였다. 노동부에서는 처리기간이 넘어가 검찰로 고발조치가 되었고 노동부와의 적절한 협조 아래 1999년 7월 28일 150만원을 받고 합의하여 종결처리 되었다.

2. 핫산라자(파키스탄)는 1996년 5월 7일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김제 동화회사에서 12시간씩 2교대하면서 성실히 근무하던 중 허리에 충격을 받고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추진했으나 회사의 미숙함으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결정이 되었고 의뢰를 늦게 받아 이의신청기간도 지나게 된 상태에서 사건을 맞게 되었다. 민사해결이 어려워 임금체불건만을 해결하고 귀국



#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59 호

1999년 8월 10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주소 [560-040]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전화) 0652-231-9331 ·팩스) 0652-231-9332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넷.진보넷) ·E-mail : onespark@inp.or.kr ·Homepage : http://inp.or.kr/onespark

## 도내 경찰폭력 기승

### 평화집회에 폭력일관, 부상자 속출

도내에서 합법적인 집회에 대한 경찰의 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4시 군산 기아특수강회사 앞 집회가 끝난 6시경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전투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처장 이승준씨(40) 등 집회참가자 7명을 군산경찰서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군산지부 조직부장 최재석씨(31)가 넘어진 상태에서 전경의 방패에 찍혀 허리를 다쳐 군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군산경찰서(서장 이명섭) 앞에서 연행에 항의하던 군산 개정병원 비대위 조직부 차장 신대욱씨(27)가 전경 10여명에게 경찰서 현관으로 끌려가 인면을 집중적으로 구타당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신씨는 오후 7시 30분경 차량시동을 켜 채 경찰서쪽을 향해 노동가요를 크게 트는 방법으로 항의하다 전경들로부터 '뜨라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뒤 끌려가 구타당했다. 신씨는 머리 여러 곳이 붓고 눈이 심하게 멍들어 군산의료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밤 9시경에는 대치과정에서 전경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고형석(28)씨가 경찰에 연행됐다. 고형석씨는 군산경찰서 경비실에 끌려가 10여명의 전경에게 약 10분간 집중적으로 구타를 당했다.

경찰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밤 9시 반 경찰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전체 병력을 동원하여 차량이 질주하는 도로 건너편까지 토끼몰이하며 40여명의 집회참가자 중 남자들만을 골라 한 사람에 6-7명의 전경이 붙어

발로 짓밟고 방패로 찌는 등의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군산건설일용직 노조 사무국장 김용환(39)씨와 개정병원 조합원 이석수(26)씨가 심하게 부상을 당해 구급차에 실려갔다. 경찰은 이밖에도 항의대열 50여명을 물리력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기아특수강 해복투 차량에서 엠프를 강제로 떼어냈다.

이에 앞서 오후 2시경 군산 미군기지

에서 열린 금요집회에서도 경찰의 폭력과 목숨이 난무했다. 이날 20여명의 금요집회 참가자들은 한 사람이 전경 5-6명으로부터 둘러싸여 목덜미를 조이고 팔다리를 비트는 방식으로 거의 1시간 동안을 붙잡혀 있었다. 경찰은 또 미군부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준 다며 전경을 동원해 집회참석자의 차량을 서둘러 옮기려다, "차량 열쇠를 가져오게 하겠다"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해대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상도 못할 경찰의 만행에 분노한 '기아특수강 전원복지과 공안탄압 중단'을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비대위)'는

## 군산미공군, 문정현 신부 외 2명 불법연행·감금 1시간 감금, 성적모욕 등 '심각한 인권유린'

군산미공군이 문정현 신부의 2명을 불법적으로 연행, 1시간 동안 감금한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6일 저녁 7시,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상임대표 문정현 신부와 시민모임 김민아 간사, 회원 오두희(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집행위원장)씨는 군산미공군기지 정문 앞에서 평화적으로 연좌농성을 하고 있었다. 이는 이날 오후 2시에 있었던 제84차 금요집회가 군산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의해 무산된 것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저녁 8시 반경 미군 헌병대 20여명이 방패, 곤봉, 헬멧으로 중무장을 한 채 단행하던 정문을 열고 나오더니 다짜고짜 문정현 신부를 수갑을 채워 끌고 갔다. 이에 곁에 있던 두 여성이 항의하자 미헌병대 10여명은 두 여성을 엎드리게 하고 뒤로 수갑을 채워 연행해갔다.

연행된 사람들은 각각 분산·감금되어 미군에게 몸수색을 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두희씨는 남성 미군들이 보는 앞에서 여성미군이 고무장갑을 끼고 몸수색하는 것에 '성적 모욕감'을 느낀다며 남성들을 내보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미군은 이에 아랑곳없고 실실 웃으면서 계속 그 자리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사진과 캠코더를 찍었다.

이들은 1시간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군산경찰에 인계되었다. 군산경찰은 이들을 "미공군 정문을 개방하자 무단침입"했다며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위반으로 불구속 처리했다.

# “전주시도 해제 반대해야”

## ‘전주권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 결성

지난달 13일 정부가 그린벨트 제도 개선방침 발표를 통해 전주권 그린벨트 전면해제를 결정한 이후 이에 대한 반대 운동이 본격화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대표 전봉호) 등 도내 14개 사회운동단체들은 ‘전주권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을 결성하고 지난 4일 전주 가톨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전주시 권역의 그린벨트 전면 해제 방침을 철회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이용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이밖에도 △투명성과 민주성의 원칙에 기반한 제도개선 △국토관리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 등을 촉구하고 “전주시가 그린벨트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식해 정책을 시행하고 정부에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주시청에서 코아백화점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전주를 포함한 6개 중소도시의 그린벨트 전면해제와 대도시의 부분해제를 위한 환경지침 마련 등 개발제한 구역 제도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 ‘동성애 = 변태성욕’?

## 동성애자 인권연대, 교과서 수정 요구

동성애자 인권연대(대표 임태훈·동인련) 회원 33명이 동성애와 관련한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이 잘못됐다고 교육부에 수정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냈다.

동인련은 지난달 28일 오전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8년 개정된 교육부 발행 고등학교 <국민윤리>와 <교련> 등 교과서의 동성애 관련 내용들이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이 교과서로 교육받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조장해 심한 경우 비관자살까지 야기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서들은 실제로 동성애를 성도착증이나 이상성욕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성애자를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동인련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정신의학회(APA)는 동성애를 더 이상 질병이나 치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고등학교 성교육 교과서의 교사용 지침서에서도 성적지향성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교과서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은 전혀 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인련은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

적지향성으로 보고 있는 세계적 흐름을 무시한 채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수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를 성적소수자에 대한 비민주적이고 야만적인 억압으로 규정해 모든 가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 자주대오재건위 ‘조작’ 규탄

‘자주대오재건위’ 사건이 조작됐으며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 4일 오후 5시 전주 코아백화점 앞에서 열린 규탄집회에는 학생과 사회단체 회원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집회에서 ‘희망공동체 전북연대’ 학생부인 ‘푸른공동체 21’은 “보안수사대가 불법적인 프라치 공작으로 자주대오재건위 사건을 조작했다”며 박인호씨 등 기무사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는 관련자 5명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한상렬 목사(전북종교인합의회 대표)도 규탄사를 통해 “경찰이 이기와 출세욕 때문에 조작한 사건이 분명하다”며 “전북지역 학생운동은 공안세력이 과거의 잣대로 탄압하기에는 이미 그 성격이 변화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오전 11시 전북도경 기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를 비호하며 앞잡이 노릇을 자임하는 경찰을 규탄한다”며 “경찰의 폭력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군산경찰서장은 퇴진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7일 오후 2시 군산경찰서 앞에서 항의집회를 연 데 이어 9일부터 매일 오후 2시 군산경찰서 앞에서 계속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연행자 중 군산노동자의집 간사 윤철수(24)씨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지난 8일 영장실질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윤씨가 전직 구속되었다.

### 【 행사와 동정 】

#### ▶ 폭력경찰 규탄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결의대회

- 8. 9(월)~13(금) 오후 2시 / 군산경찰서 앞
- 8. 12(목) 오후 4시 / 전북도 지방경찰청 앞

#### ▶ 석방 양심수 환영대회

- 8. 14(토) 오전 10시 / 전주교도소 앞

#### ▶ 북녘동포돕기와 통일열원 단속 마라톤대회

- 8. 14(토) 오후 4시 / 전주 다가공원

#### ▶ 조성만 열사 추모비 제막식

- 8. 15(일) 오후 3시 / 전주해성고등학교

#### ▶ 문규현 신부 방북 10주년 기념미사

- 8. 16(월) 오후 2시 / 서울 상도동 성당

# 책임회피에 폭행까지

## 고 이상관씨 유족들, 규탄 철야농성

산재로 인한 고통 속에 비관자살한 고 이상관씨(27) 유족들의 근로복지공단 규탄 철야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또 이상관씨 죽음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유족과 공단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상관씨 유족 및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대위’는 지난 5일 제4차 근로복지공단 규탄집회를 갖고 책임자 처벌 및 유족보상, 산재보험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산재보험 운영으로 산재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놓고도 공단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공단은 유족과의 면담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에 항의하는 유족을 폭행하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유족 및 대책위의 요구에 대해 “유족의 요구는 현행 법상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유족보상청구서를 제출하는 법적 절차 외 다른 방법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족 및 대책위는 9일 이상관씨 49재를 맞아 농성장에서 추도식을 가졌다.

고 이상관씨는 창원 대우중공업 국민차 사업부에서 일해 오다 지난 2월 허리를 다쳐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 뒤 무릎과 골반 통증이 심해져 요양연기신청을 냈으나 공단이 통원치료를 결정해 공단 진주지사로 옮겨 이곳에 사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 씨 부모는 “걸음도 못 걷는데 왜 통원치료를 하느냐? 두 달만이라도 입원 치료를 더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6월 22일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차츰 몸이 더 안좋아진다...이 고통과 괴로움을 잊고 싶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 【 현장인터뷰 】

## ■ 기아특수강 해복투 조성옥씨 ■

- 지난 5일 현재 단식투쟁 23일째를 맞은 기아특수강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조성옥씨를 만났다. 조성옥씨는, ‘기아특수강 해고자 전원복직과 공안탄압 중단을 위한 전북비대위’ 사무국장 일도 하고 있다.

#### ○ 단식한 이유는?

▶ 문정현 신부님이 우리 일로 목숨을 건 단식을 하셨다. 당사자인 우리도 단식할 필요 있다고 생각했다. 또 현재 회사와의 협상에서 내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번 내가 협상대표단에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협상에 나오지도 않았다. 회사에게 내가 복직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 ○ 두 번이나 해고당하게 된 경위는?

▶ 92년 9월에 입사해 12월에 1차 해고당했다. 이력서에 고졸이라고 썼다 해서 위장취업이라 했는데 나는 대학 중퇴자로 사실상 고졸이다. 93년 3월 전주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판결로 5월에 복직되었다. 94년 4월 불법유인물 배포 혐의로 또다시 해고되었다. 민주노조를 건설하지는 내용이었는 데, 이에 항의하자 회사는 당해 5월 3일 복직각서를 써주고서 현재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 회사에서는 조성옥씨가 민주노동자회라는 ‘불법단체’를 만들었다고 한다. 또 민주노동자회 회원들 위주로 정리해고 시켰다. ‘불법단체’를 만든 이유는?

▶ 93년 8월에서 9월 두 달동안 산재로 두 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그러나 산재책임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도 없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다.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는 데도 한 달에 한 명씩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노동자들이 어용노조 밑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대로 된 민주노조 건설이 시급했다. 이에 동의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건데 회사는 사내 노조 외에는 어떤 조직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닌가?

#### ○ 왜 전원 복직되어야 하는가?

▶ 98년 9월에 있었던 기아특수강의 정리해고는 막 통과한 ‘정리해고법’을 악용한 대표적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직되어야 한다. 평상시 눈에 가시였던 사람들을 IMF분위기를 틈타 모두 정리해고 시켰다.

또 지금 회사는 창사 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어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 리콜제에 의해 해고자를 우선 채용해야 함에도 이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 ○ 기아특수강 해고자들의 기나긴 싸움이 지역에 미친 영향이 있다면?

▶ 정리해고의 문제, 즉 생존권의 문제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자기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싸워줬다. 조직논리에 상관없이 ‘지금 현재의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연대와 투쟁의 틀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큰 틀로 보면 정리해고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주평

# 자연 태풍과 사회 태풍

김 의 수 (전북대 교수·철학)

홍수와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한반도에는 또 다시 수많은 인명 피해와 이재민, 그리고 엄청난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 여러 해 제 반복되는 자연 재해에 원망이 앞서기도 하고, 전 세계에 걸친 기상 이변을 보며 인류적인 각성의 필요성을 실감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선은 복구 작업부터 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번에도 정성껏 수재민 돕기에 동참한다. 언론은 재해 보도와 수재민 돕기 캠페인, 그리고 인재의 원인 폭로까지 담당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며칠만으로 끝난다는 데에 있다. 언론은 며칠동안 운동이 문제로 떠돌아다니다가 곧 다른 문제로 넘어가고, 그러면 국민들의 관심은 다시 그쪽으로 휩쓸려 가고 만다. 홍수와 태풍이 며칠동안 신문과 방송을 휩쓸고 지나가면 언론에는 새로운 태풍이 소재로 등장한다. 사실 한국의 언론에는 쉬임 없이 태풍이 몰아친다. 며칠 단위로, 길어야 몇 주 단위로 태풍이 몰아친다. 다음 차례는 대통령의 8·15담화가 될 것이다.

### 한국사회에 몰아치는 태풍들

이 번의 태풍은 지난 번 태풍의 쓰레기들을 말끔히 씻어 버린다. 그렇게 한국 사회의 태풍은 새로운 태풍에 의해 밀려난다. 내가 두 달 전에 다루었던 이재복목사 사건은(여권의 고위층들이 연루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 후 고급 옷 로비 사건에 파문했고, 고급 옷 로비 사건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승진했던 김태정씨는 조폐공사 파업 유도 파문으로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민심이 흉흉해지자 김대중 대통령은 그 동안 그토록 버티오던 특별

검사제의 전격 수용으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나 특검제를 도입하여 파업유도라는 공안당국의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제대로 처리하기 전에 이미 앞뒤 안 맞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졌다.

이상의 일들은 모두 태풍들이었다. 정국을 감타하고, 국기를 흔들며 놓는, 그리고 민심을 노도가 되게 만든 태풍들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태풍은 어김없이 이어졌다. 신창원 태풍이 그것이었으며, 그것이 몰고 온 파도를 타고 전격적으로 공개됐던 여권의 신당 창당 얘기가 연이은 태풍이었다.

**자연 재해 속에 인간의 잘못으로 생겨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모순 투성이 사회를 개혁해 나가기 위해서도 똑같은 일이 요구된다.**

### 식상한 인권(사면)과 정치보따리

어지럽다. 한국 국민은 어지러운 일상을 살고 있다. 도대체 정신을 차릴 겨를이 없다. 급년 8·15에는 어떤 태풍이 불어올까? 매년 8·15에는 인권(사면)보따리가 선사된다. "국민의 정부"와 "인권 대통령"이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나고도 아직 사면해야 할 양심수가 수없이 많다는 사실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고, 이번에도 준법서약서가 논란이 되고 있으니 서글픈 일이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인권기구 설치, 주민등록증 지문 날인 폐지 등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8·15에는 대통령이 정치보따리도 풀어놓는다.

작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의 획기적인 정치구상으로 "제2의 건국"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이름이 너무도 거창하여 국민들은 감히 이 구상에 대해 왈가왈부 비판을 가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도 그것은 지금 별로 힘있는 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금년에도 김대중 대통령은 획기적인 정치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미 그 내용의 일부가 알려졌고, 그것은 정계 개편과 정치 발전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신당 창당과 여권 합당이라는 구상이 표면화되면서 김영삼까지 끼어 드는 신3김 시대가 운위되고 있고, 국민 대중은 식상해 하고 있다.

자연 재해 속에 인간의 잘못으로 생겨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모순 투성이 사회를 개혁해 나가기 위해서도 똑같은 일이 요구된다. 공무원들, 정치가들, 사법기관, 언론이 각각 제 할 일을 하게 해야 한다. 그들이 제 역할을 못하므로 국민들은 각종 시민·사회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들을 새로운 세력으로 교체해 나가야 한다. 인재는 얼마든지 있다. 국민들이 주인으로 나서기만 하면 된다.

### 독자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구독문의: 0652-231-9331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60 호

1999년 8월 17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주소) [560-040]전주시 원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전화) 0652-231-9331 ·팩스) 0652-231-9332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넷.진보넷) ·E-mail : onespark@inp.or.kr ·Homepage : http://inp.or.kr/onespark

## 최호경 이화춘씨 석방

### 8·15 사면, 정치수배자도 준법서약 요구

지난 8·15 대통령 특사에서 전북 지역에서는 장기수 최호경씨 등 6명이 전주와 군산 교도소 문을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 반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최호경씨는 가족과 민가협, '최호경 석방 추진위원회' 등 회원들의 환영을 받았다. 최씨는 인사말에서 "김대중 정권을 물리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국제사회주의자 사건으로 2년형을 받은 뒤 1년 3개월을 복역하고 나온 박효근씨는 "이번 사면은 김대중 정권에 게 어떠한 개혁에 대한 기대도 절대 걸어서는 안된다는 사무친 깨우침을 주었다"며 강한 어조로 이번 사면을 비판했다.

익산 출신 양심수인 이화춘씨도 7년 가운데 5년을 복역한 뒤 이날 광주교도소에서 나왔다.

한편 전주교도소에는 노동당 가입 전력이 장민철씨(45)와 한총련 소속의 장형욱씨 등 두 명이 준법서약을 하고도 출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서 준법서약과 관계없이 전체 형기의 반 이상 복역하지 않은 양심수들을 석방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정치수배자의 경우 자진 출두해서 한총련을 탈퇴하거나 법질서 준수서약을 사면으로 밝힐 것을 수배해제의 전제로 삼아 수배해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결수의 경우에도 구속취소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또 전남대 한총련 치사사건에 관련된 3명도 석방에서 제외됐다.

현재 기결 양심수는 82명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8·15 사면의 내용이 알려진 직후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사면조치가 '기만적'이라며 일제히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민가협(상임의장 임기란)은 13일 '8·15 사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장기수 손성모 신광수씨, 한총련 3-5기 의장들, 김광식

을 비롯한 노동자 등 양심수 199명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김현철은 '이상한 관용' 정신이 발휘돼 사면됐다"며 "김현철 사면조치를 철회하고 양심수 전원석방 및 수배해제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영도)도 13일 성명을 내고 "사면권은 사법권 독립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며 "정부의 김현철씨 사면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미 대통령의 사면권을 일정한 한계로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면법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입법청원한 바 있다.

## 미군 공여토지 일부 반환결정 환영할 만한가

### "한미행협 개정이 해결책"

16일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영평 미군 다목적 사격장 일부토지 106만평과 서울 미공군장교클럽 381평, 전북 옥구군 타고마가지 9,433평, 경기도 여주군 비곗거리 563평을 한국 정부에 반환하기로 한·미 당국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영평 사격장의 경우 지금까지 토지보상 44건, 토지반환 소송 68건이 제기됐었고 국방부가 주한미군측과 87년부터 협상을 시작해 12년만에 반환이 이뤄졌다. 옥구군의 타고마가지는 이미 폐쇄된 기지로 "폐쇄 직후 반환됐어야 한다"는 게 '군산미군기지 우리찾기 시민모임'(상임대표 문정현·시민모임)의 주장이다.

한편 군산미공군기지(220만평)의 경우 현재 지역 주민 사유지를 다량 점유하고 있는데다 인근 100만평의 국방부, 개인소유 토지가 미군공여지로 설정돼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문산읍의 경우 미군기지의 비협조로 제방을 높이지 못해 지난 수해 당시 피해가 더욱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민원이라 하더라도 미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마냥 이해하고 기다려야 할 뿐 아니라 주한미군측 협조만 기다려야 하는 게 지금 형편이다. 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한미행협정 개정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주한미군측의 이번 12년만의 일부 반환을 선뜻 반길 수만은 없다"며 한미행정협정 전면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 조성만 열사 추모비 제막식

조성만 열사 추모비가 지난 15일 오후 조 열사 모교인 전주 해성고등학교 교정에 세워졌다. 조 열사가 산화한 지 11년만의 일이다. 제막식은 이날 오후 3시 해성고 교정에서 유가족과 동문 교직원 전주교정의구현사제단 교우회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추모비는 해성중고등학교 교문을 들어서면 보이는 화단의 맨 앞쪽에서 방문자를 마주보도록 세워졌다. 추모비석에는 앞면에 조 열사를 기리는 판화그림과 '통일열사 조성만 추모비'라는 글씨가, 뒷면에는 조 열사의 약력이 새겨져 있다. 이날 추모사는 추모비건립추진위원장 고흥석 교수가 읽었다.

### 추모사

우리 민족은 외세와 독재, 그리고 자본에 저항하여 치열하게 투쟁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애국인사들이 마지막 항거 수단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60년대 이래 지금까지 4·19, 5·18 열사를 제외하고 331분이 산화하였습니다. 이 분들의 삶은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살아온 삶이 아니라 동료와 조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아온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죽음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 합니다. 제국주의와 분단 독재에 대해 누구보다도 적개심을 가지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린 이 분들을 우리는 열사라 칭하며 그 정신을 계승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년전 1988년 5월 15일 오후 3시 40분경 명동성당에서 5월 광주민중항쟁 8주기를 맞아 '양심수 전원 석방 및 수배 해제 축구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때 명동성당 교육관 옥상에서 한 젊은이의 파울음이 들렸습니다. 앞쪽으로 향해 있던 사람들이 일거에 자세를 돌려 교육관 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옥상에는 한 젊은이가 '조국통일과 공동올림픽 개최'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뿌린 유서가 하얀 깃털처럼 허공 위를 뱅뱅뱅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준비했던 칼로 자신의 배를 그은 뒤 다시 한번 피끓는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자신의 몸을 날려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고난의 땅 팔레스티나 목수의 아들·예수를 늘 생각하던 젊은이 조성만 열사는 그 누구도 통일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외치며 스스로 목숨을 바쳐 분단 독재를 고발하였습니다.

조상만 열사가 이 땅을 떠난 지 11년 우리 조국은 아직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민족으로 남아있습니다. 민

족분단의 폐해는 엄청납니다. 정치적으로는 독재정치가 반영구화되어 양심적이고 의로운 사람들이 투옥되고 인권 유린과 고문과 학살이 공공연하게 자행됩니다. 경제적으로는 빈부의 양극화와 경제구조의 대외종속성을 심화시켜 왔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구조적 부정부패가 민성화되고 도덕적 퇴폐와 범죄의 증가·포악화, 불신풍조의 만연 등의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민족분단의 폐해는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외세에 종속되어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성만 열사는 통일이 단지 소원이었던 우리에게 통일은 절박하게 제기되는 민족의 소명임을 자신의 생명을 바쳐 가르쳐 주었습니다. 열사의 고귀한 뜻을 가슴에 새기고자 1300여명의 추모위원들이 정성을 모아 열사의 모교인 이 자리에 추모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조성만 열사의 조국통일을 향한 숭고한 녀이 우리들 가슴 속에 부활하여 척박한 한반도 땅이 민족의 강령인 자주·민주·통일을 향한 투쟁의 대열에 견결하고 흐트러짐없이 동참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열사여, 당신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평화와인권〉 기금 마련을 위한 삼계탕집(이름)을 엽니다.**

곳 : 전주 서학동성당(전주교대 앞)  
 때 : 8월 21(토) - 22(일) 오후 9시까지

**“뜨거운 어름에 지친 몸도 지키고 우리의 지친 언경도 지킵시다”**

#### 【 행사와 동정 】

경찰폭력으로 연행되어 구속된 윤철수(군산노동자의집 간사)씨에게 따뜻한 편지를 보내 주십시오.  
 주소: 군산시 사서함 10호 113번 (우 573-706)  
 면회신청: 017-659-5715(유기만)

- ▶ **폭력경찰 규탄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결의대회**  
 ■ 8. 17(화) 오후 5시 / 군산 구시청 사거리
- ▶ **기아특수강 해고자 전원복직 촉구대회**  
 ■ 8. 20(금) 오후 4시 / 기아특수강(주) 앞
- ▶ **예바다 투쟁 1000일 기념 문화축제**  
 ■ 8. 19(목) 오후 6시 / 서울 마로니에 공원

## 국회 통과 앞둔 국민의 정부 악법들

###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법안

#### ■ 사학재단 이익 반영

정부가 제출한 교육관계법 개정안들이 국회 교육위에서 개안된 채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교육 시민단체들과 대학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날치기 통과된 법안들은 초중등교육법안 고등교육법안 사립학교법안 등이다.

초중등교육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을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격하시켰다. 고등교육법안은 대학의 교무위원회 위상을 의결기구로 하려던 신설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에 평교수를 1/2이상 참여시키려 한 조항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법안은 공익대표의 이사회 참여비율을 1/3이상으로 규정한 원안을 삭제함으로써 사학재단의 독단적인 운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민교협(공동대표 박겨용 등 5명) 전교조(대표 이부영) 등으로 구성된 '교육 5적 퇴진과 교육관계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교육 시민 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학교운영의 민주화 퇴보 △사립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결여 △비민주적 의사결정 등의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 등은 사립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개안안이 날치기 통과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허남 의원(자민련)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

#### ■ 부자나라 동포만 우대 - 본회의 통과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해외동포들에게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국내에 2년까지 머물며 경제활동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외국국적동포의 개념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이주한 중국 러시아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 약 265만명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대해 이미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는 조선족 교포들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 등 민간단체들은 이 법안이 "가난한 동포에 대한 차별"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평등한 해외동포특별법으로 다시 만들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외노협의 이윤주 사무국장은 "이 법안의 취지는 재외동포들의 권익향상과 법적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현재의 법안대로라면 애초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일부 지역 동포들의 국내투자를 노리는 방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일제시기 해방을 향한 수십년의 역사를 주인없는 공백기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노협에 따르면 현재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동포는 약 550만명으로 이중 대상에서 제외된 동포는 중국동포(조선족) 약 200만명, 구소련지역 동포(고려인) 약 50만명, 무국적 재일동포(조선적) 약 15만명이다.

### 인권위원회법안

#### ■ 사실상 법인 - 독립성 없어 법무부 속박 아래

정부여당의 철학과 원칙 부재로 인권위원회법이 1년이 넘게 표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청와대 당장협의에서 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하되 인권위원과 직원에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지 않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소식이 들려와 시민단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전국 7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2일 성명을 내고 "공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무원 인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인권위원과 직원을 공무원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며 공무원이 없는 국가기구란 것이 실제로 법인이 아니고 무엇이나"며 "정부여당의 '민간인 국가기구' 안이란 것은 법무부의 완강한 저항과 막강한 권세에 휘둘러 그들의 의지와 궤변에 동조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인권위원회법안이 국회차원의 본격적 심의조차 없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졸속 처리된다면 공대위는 국내외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일체의 참여와 협력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지문날인 헌법소원 ■

### 사람을 찾습니다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에서는 ①10손가락 지문날인제도와 ②경찰의 지문전산화 그리고, 현재 채취하고 있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③전자지문 채취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각각 헌법소원을 진행하고자 이에 동참할 사람을 찾습니다.

- ▶ 현재 17세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통지를 받으신 분 (단 이 경우 미성년자라서 부모님 동의가 필요함)
- ▶ 7월 이후 전자지문채취를 하신 분
- ▶ 소송에 관한 모든 비용과 책임은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에서 집니다. (문의전화 : 0652-231-9331)

특별기고

#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다시 묻자

문 정 현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상임대표)

### 조성만을 통해 다시본 미국

내 나이 회갑이 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군에 대한 의식이 참으로 부끄럽기만 하다. 80년대 이후 미군시설을 점거하고 방화하며, 미군은 한국 땅에서 철수하라고 절규하며 명동성당 교육관옥상에서 활복 투신하여 돌 바닥에 떨어져 죽은 나의 제자, 신앙의 동료 조성만 요셉을 통하여 미국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이 젊은 이들에게 끊임없는 눈물로 감사의 제를 올리며 살고 있는 터이다.

군산 옥서면 '울프 팩(Wolf Pack)'이라는 이름의 '제8전투비행단'이 50년이 넘게 330만평의 엄청난 땅을 사용료도 없이 무기한 사용하고 있다. 그뿐 아니다. 소음공해, 미군범죄, 사유재산무단 점유 등으로 국민에게 오는 손해는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다. 그 원인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때문이다. 이러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고 우리 땅을 되찾기 위하여 '군산미군기지 우리 땅찾기시민모임'을 만들었다. 내가 상임대표직을 맡고 있다. 84회 금요집회가 있던 날이다. 엄청난 전경이 투입되었다. 미군과의 문제인데 매년 한국 경찰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 미군의 불법연행

오후 7시경 나는 여성활동가 3명과 함께 다시 미군부대를 방문하였다. 정문은 이미 닫혀있다. 닫혀진 정문에 앉아 평화적인 침묵시위를 하였다. 1시간이 조금 지나자 써치라이트를 감

하게 비추며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미군이 위협적인 자세로 다가와 문을 열더니, 그 순간 나를 잡아채 끌고 갔다. 그리고 팔을 뒤틀며 뒤로 결박하여 수갑을 채웠다. "왜 신부님을 연행하느냐"고 항의하는 두 명의 여성에게도 뒤로 수갑을 채워 알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갔다.

### 경찰은 미군의 시녀

빈 책상 하나 놓여 있는 골방에서 굳이이라도 읊을 듯 고무장갑을 끼고 온

버젓이 보는 앞에서 미군에 의해 뒤로 결박되어 1시간 이상 수갑을 차고 강제 구금되어 있다니... 또 그들에게 당한 모욕감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온 몸에 전율이 흐른다. 악질적 범죄를 저지를 미군범죄자에게는 각종특혜를 주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미군은 한미행정협정으로 보호받고 한국국민은 짐승 취급을 받고 있다.

### 미군은 이땅에서 나가라

이제 우리는 '미국은 우리에게 누구인가?'하고 다시 물어야 한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서슴없이 일으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지 않았는가! 내 나이 회갑이 넘었다. 앞으로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미군은 이

땅에서 철수하라고 절규하며 명동성당에서 투신하여 죽어간 나의 제자 조성만 열사를 생각하며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다져 본다.

### 독자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구독문의: 0652-231-9331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몸을 수색하더니, 이 사람 저 사람이 카메라, 권코더를 들고 와 찍어댄다. 몇 시인지 몰라 소지품을 입으로 끌어 시계를 보려 했지만 그것도 빼앗긴 채 폭력적으로 감금을 당했다. 같이 연행당한 여성에게는 폭력까지 행사하여 팔과 다리에 피멍이 들었다. 1시간이 지난 후 한국 경찰이 나타났다. 수갑을 채운 채 한국경찰에게 인수인계를 당해 군산 경찰서로 호송되어 새벽 2시에 풀려났다. 한국 경찰은 미군의 시녀나 다름이 없었다.

### 실체를 보자

이러한 미군의 폭력적이며, 반인권적인 행위를 당한 나는 분노가 치밀어 왔다. 한국 땅에서 그것도 한국경찰이

**미군은 한미행정협정으로  
보호받고 한국국민은  
짐승 취급을 받고 있다.**



#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61 호

1999년 8월 24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 주소) [560-040]전주시 원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52-231-9331 · 팩스) 0652-231-9332  
·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inp.or.kr · Homepage : http://inp.or.kr/onespark

## 전국여성노조 29일 창립

### 비정규직 일용직 여성노동자 조직화 목표

기존 노동조합으로부터 소외돼 있던 여성노동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한 여성노동조합이 만들어진다.

전국여성노조건설 전북추진위원회(위원장 박미란·전북추진위)에 따르면 전체 여성노동자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이 64%에 이르고 임시 일용직 여성이 67.1%나 되는 실정이다. 여성노동자의 전반적인 고용약화와 취업구조 변화로 여성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율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일용직·파견직 또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비공식부문 노동을 하고 있으며 회사측의 부당한 탄압에도 조직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IMF 이후의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은 여성들을 먼저 정리해고와 비정규화로 내몰고 있으며 심지어 노조가 있는 곳에서조차 여성우선해고를 정당화하거나 묵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북추진위는 87년 11.1%였던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율이 97년에는 5.6%로 남성노동자조직율(87년 15.3%, 97년 14.9%)에 비해 더욱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현실은 기존의 노동조합만으로는 여성노동자 조직화가 불가능함을 반영하는 것이며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3권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추진위는 지적한다.

한국여성노동운동단체협의회 등에 의해 추진중인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비정

규직·영세사업장·가내노동자 등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노동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게 된다. 민주노총과는 독립적인 체계를 가지고 연대하면서 이밖에도 △여성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모성보호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조치 확대를 위한 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구체적인 활동계획으로는

△여성고용촉진과 근로조건 개선 △법률상담·협동조합활동 등 조합원의 생활개선사업 △여성·비정규직·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정책요구와 법·제도 개선 투쟁 등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여성노조는 8월 29일 창립총회와 함께 출범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추진위는 지난 18일 전주 코아백화점 앞에서 여성노조를 알리는 거리캠페인을 가졌고, 올 하반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거리캠페인과 간담회 등을 진행하면서 조합원 조직과 여성노조 홍보를 위한 사업들을 전개할 예정이다.

## "김현철이 독립운동가 썸 되나"

### 국민회의 도지부농성 등 사면반대 행동 잇달아

한 주 동안 김현철씨 사면을 규탄하는 집회 등 항의가 잇달았다. 전북종교인협의회(회장 한상열목사·종협)는 지난 19일 오전 국민회의 전북도지부에서 8·15 김현철씨 특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3일 동안의 단식기도를 가졌다.

종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현철씨가 독립운동을 하거나 민주화투쟁을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아들이란 지위를 이용해 검은 돈을 챙기다 구속됐는데 무슨 사면이냐"며 "김현철씨를 변칙사면한 김대중대통령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협은 또 "당연히 국고에 귀속돼야 할 대신 자금 잔금으로 벌금과 추징금을 내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뉘우치지 않고 있음이 확연하다"며 김씨의 회개를 촉구했다.

종협은 21일 오후 '김현철 변칙 사면 김대중대통령 반성 촉구대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20일 오후에는 정읍지역 시민단체들이 김현철씨 사면 철회를 주장하며 거리시위를 벌였다. 감오농민혁명계승사업회(회장 김현) 정읍민주연합(상임의장 정인덕) 정읍경실련(공동대표 김택술 김천영 서성환) 등 정읍지역 3개 시민단체는 20일 오후 5시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 명동의류 앞에서 '사면 규탄대회'를 가진 뒤 거리시위를 벌였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90%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김현철씨 사면은 국민의 뜻은 물론 사법정의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 독자편지

지난 6일 밤 9시 50분께 군산경찰서 앞에서 한 시민이 자 노동자인 김용환씨(40·군산지역 건설노동조합 사무국장)가 경찰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했다. 김씨는 어깨뼈가 부러지고 허리와 무릎 등 온몸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당시 김씨는 일을 마치고 아내와 가족이 기다리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경찰과 사회단체 회원들이 어지럽게 뒤엉켜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현장에 접근했다가 경찰로부터 모해를 맞았다. 김씨는 아직도 군산의료원(336호)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평화와인권 독자인 김씨의 부인이 편지를 보내왔다. [편집자주]

## [평화와인권]에게 드리는 글

두 아이의 엄마, 이번 경찰서 앞에서 경찰에게 무참히 맞은 사람의 부인입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살기도 힘들어 TV에서나 주변에서 시위하는걸 보면 "얼마나 힘들까, 남일이 아니지만 지금은 내일은 아니야" 하며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일주일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오는 '평화와인권' 주간지를 보면서 후원금 한 번 주지 못한 게 미안해 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보지만, "그 또 그 얘기... 그 또 그 얘기겠지"하며 지나쳤습니다만 오늘은 눈에 띈 '평화와인권'을 뒤적뒤적 읽었습니다. 한 시민이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무시되고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하고 난 분노 끝에 말합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해 부들부들 온몸을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씨랜드 사건으로 몇십명의 아이들이 죽어간 문제, 중고등학생들이 옥상에서 자살하여 죽어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고민하지 않는 사회.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이니까 그럴까요? 연예인이 사귀는 남자와 헤어진 얘기는 중요하고 한 시민이 경찰서 앞에서 무참히 구타받로 짓밟힌 것은 재수없어 생긴 일일까요?

이건 이 사회에서 하찮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이 죽은 것에 비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사회는 길거리 쓰레기 없는 사회가 아니라 한 생명을 가진 인간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이며 그 누구도 누구를 향해 인권이 유린되어선 안되는 사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평화와인권'에 종사하며 힘쓰는 분들에게 우리 아이들과 감사함을 고개숙여 전하며 부족한 주부이지만 '평화와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임을 깨달았습니다.

군산에서 김복숙 드림

# 국보법개정 반대서명까지

## 민가협 등 한나라당사 앞 항의시위

한나라당이 해묵은 색깔논쟁을 시작하면서 63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국가보안법 개정 반대서명작업'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고문, 불법체포, 장기구금 등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데 앞장서온 공안검사 출신의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한나라당이 반성은커녕 또다시 색깔시비를 벌이는 데 대해 엄중 항의한다"며 "한나라당은 색깔시비 중단하고 '야당답게' 국가보안법 개정 등 인권개혁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성을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회창 총재는 미리 약속되어 있는 인권단체 회원들과 면담약속을 파기하고 "국가보안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아직 당론으로 정한 바 없고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논의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 만날 필요가 없다"고 말을 뒤집으며 나타나지 않았다. 참가단체들은 23일 집회에 이어 매일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독자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구독문의: 0652-231-9331 /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 ·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 [행사와 등정]

<평화와인권> 기금마련을 위한 심계탕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찰폭력으로 연행되어 구속된 윤철수(군산노동자의집 간사)씨에게 따뜻한 편지를 보내주시시오.

주소: 군산시 사서함 10호 113번 (우 573-706)

면회신청: 017-659-5715(유기만)

###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자전거행진

■ 8. 26 (목) 오후 3-5시 / 호남제일문-코아백화점

###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전북 결의대회

■ 8. 28 (토) 오후 2시 30분 / 전주 코아백화점

# "정신지체인도 당당한 시민"

## 강제불임수술에 대한 공동성명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왔던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수술 문제가 사회 표면에 떠오른 가운데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상담소 등 3개 단체가 이를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규탄하면서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21일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이들은 "정신지체인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당당한 시민"이라고 환기시킨 뒤 "조금 힘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의사를 당당히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잦아에 의해 자신의 삶이 바뀌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정신지체인 강제 불임수술은 한 번도 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면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문제일 뿐이지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이 사건에 대해 정부가 "사회적 약자인 정신지체인의 인권유린을 방조한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토대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것 △장애인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권법 제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함께 주장했다.

## <자료> 8·15석방 양심수 기자회견문

지난 8·15 특사로 석방된 양심수들이 23일 오전 명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양심수 석방을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全文)이다. [편집자주]

### 국가보안법 및 준법서약제, 보안관찰법 철폐와 모든 양심수 석방을 위한 8·15석방자 기자회견문

1. 금년 8·15 사면은 '양심수 사면'이 아니라 '김현철 사면'이었다.

권력형 부정비리사범의 전형은 형기의 1/4밖에 살지 않고도 사면에서 가장 좋은 잔형면제처분을 받았으나 구속된 통일민주애국인사인 양심수는 형기의 1/2를 기준으로 사면에서 가장 나쁜 형집행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초장기수 신광수 손성모선생, 한총련 3·4·5기 의장을 비롯한 수십명의 기결양심수와 2백여명의 미결양심수가 지금도 철창 안에 갇혀있다. 또한 정치수배자에게도 준법서약서가 강요되고 양심수 군문제는 제자리걸음이다. 더욱이 범민족 통일대추전 지도부에 대한 긴급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 다.

'물방울 하나에 온 우주가 비낀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사면으로 김대중정권의 반인권 비민주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김대중정권은 위와 같은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즉시 석방하라!
- 석방양심수의 잔형을 면제하고 김현철을 구속 처벌하라!
- 정치수배문제 양심수군문제 미복권자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라!
- 범민족통일대추전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당장 철회하라!

2. 우리 석방양심수와 구속양심수는 다음과 같은 실천행동을 결의한다.

- 사상전향제의 확대개악관인 준법서약제 폐지를 위하여 석방양심수와 구속양심수가 다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 김현철의 잔형면제와 석방양심수의 형집행정지의 부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과 근거문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 석방양심수 중 보안관찰대상자는 제2의 국가보안법인 보안관찰법을 거부하는 운동(보안관찰법 어기기운동)을 단호히 전개한다.

3. 만약 김대중정권이 9월 정기국회에서 반민주약법등인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제, 보안관찰법의 철폐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상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집단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김대중정권은 그때 가서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기 바란다.

1999. 8. 23

'99. 8.15석방 양심수 일동

**■ 지문날인 헌법소원 ■**

## 사람을 찾습니다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에서는 ①10손가락 지문날인제도와 ②경찰의 지문전산화 그리고, 현재 체류하고 있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③전자지문 채취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각각 헌법소원을 진행하고자 이에 동참할 사람을 찾습니다.

- ▶ 현재 17세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통지를 받으신 분 (단 이 경우 미성년자라서 부모님 동의가 필요함)
- ▶ 7월 이후 전자지문채취를 하신 분
- ▶ 소송에 관한 모든 비용과 책임은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에서 집니다. (문의전화 : 0652-231-9331)

### 기획연재 김대중 정부 출범 1년 6월의 사회변화 : ① 교육 BK21(Brain Korea 21) 무엇이 문제인가?

김대중 정부 출범 1년 6월이 지난 지금 교육 노동 의료 등 한국 사회 각 분야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윤활동 보장'이라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목표' 아래 새롭게 재편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 평화와인권은 이러한 사회 재편이 특히 소외 계층의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번 주부터 이러한 변화를 점검하는 연재를 시작한다. 먼저 교육분야를 세 차례 연재한다. 아래 글은 김세균(서울대) 교수가 민교협 교육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주]

지의 일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소수 재벌에게로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중소기업들을 빈사상태로 내몬 국가의 그간의 경제발전정책이 오늘날 한국경제의 체질을 얼마만큼 허약하게 만들고 있는가를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 교육부의 정책은 바로 그러한 경제정책의 우를 다시 답습하는 것이다.

1. '학문연구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대학원교육을 크게 왜곡  
특정대학들을 특정분야의 연구와 교육이 중심으로 행해지는 대학으로

**교육노동유연화 정책은  
교원들의 연구활동을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한 경쟁'으로 변질시키고, 그들의  
신분을 임시직 근로자직으로 전락시킨다**

교육부가 '21세기 지식 사회를 대비한 고등인력 양성사업'으로 추진하려 하는 '두뇌한국21' 사업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전국의 많은 대학교수들로부터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BK21 사업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대학의 균등발전 전략을 추구하기보다는 철두철미 '불균등발전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간 한국에서는 대학이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지는 가운데 대학간의 차이와 불균등 발전이 심화되어 왔으며,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국공립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더 많은 등록금을 내고 다녀야 하는 불이익을 당해왔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교육부가 이제는 '그야말로 '목적의식적으로' BK21사업과 같은, 대학들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면, 선정된 소수의 연구중심대학 대 탈락된 다수의 대학들간의 격차는 앞으로 더욱 커지고, 탈락된 다수 대학에 다니는 교수와 학생들이 입는 불이익 역시 더욱 크게 증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불문가

만들겠다는 발상자체가 이미 학문연구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교과과정을 BK21사업의 추진에 적합하도록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BK21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와 대학원생들은 연구의 구체적인 주제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척시킴에 있어 처음부터 크게 구속당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인문사회과학의 발전을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

2. 교육관료에 의한 대학통제와 대학관리 강화로 대학의 자율성 훼손  
BK21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연구인력양성사업단'을 구성해 교육부에게 사업계획을 제출해 심사를 받고 제도개혁을 위한 협약을 정부와 체결해야 하며, 선정된 이후에도 사업

성과와 제도개혁 관련사항에 대한 점검 및 중간평가를 교육부로부터 받아야 한다. BK21사업을 통해 정부는 연구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미끼로 하여 선정된 특정대학들을 거의 모든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통로를 획득하게 된다.

3. '교육노동유연화정책'으로 대변되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대한 교수들의 저항 무력화

교육부는 1999년부터 교수업적평가제를, 2000년부터 연봉제와 정년보장제도의 개선을 실시하고, 교수계약제는 2002년부터 도입하여 2003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방안의 강구는 교육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노동유연화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노동유연화정책은, 다른 모든 노동유연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교원들의 연구활동 등을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한 교원들간의 경쟁'으로 변질시킴으로써, 교원들간의 연대와 협력관계의 조성을 어렵게 만들고, 교원들의 신분을 임시직 근로자직으로 전락시켜 교

원들이 신분에 대해 항상적으로 불안에 빠지도록 만든다. 다른 한편으로는 업적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보수를 약속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급 봉급 총액을 삭감하고 비용을 최대한 절감한다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4. 참여하는 대학의 학문공동체의 내부적 해체·왜해

특정대학의 교수(와 대학원생) 전체가 그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해도 그들 전체의 참여란 불가능한데다가 특정 연구분야에서 어느 학과가 BK21사업 추진의 '주관학과'가 되는가에 따라 혜택 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나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BK21 사업에의 참여는 참여하는 대학의 학문공동체를 내부적으로 해체시키고 왜해시키는 '트로이의 목마'가 되지 않을 수 없다.



#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62 호

1999년 8월 31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주소 [560-040]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전화) 0652-231-9331 ·팩스) 0652-231-9332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넷.진보넷) ·E-mail : onespark@inp.or.kr ·Homepage : http://inp.or.kr/onespark

## 보안법폐지 요구 삭발

### 국가보안법 전면철폐 힘찬 결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는 다. 이날 집회에서 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한상열 목사 등 9명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삭발했다. 삭발자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의지를 내보이기 위해 대형 천에 '철폐 국가보안법'이라는 글자의 현서를 쓰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현 정치

다. 이날 집회에서 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한상열 목사 등 9명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삭발했다. 삭발자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의지를 내보이기 위해 대형 천에 '철폐 국가보안법'이라는 글자의 현서를 쓰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현 정치

## 국정원, 김영한씨 가혹행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민가협)에 따르면 지난 8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8월 30일 현재 13일째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받고 있는 김영한 조유식씨가 국가정보원 수사관들로부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민가협은 김영한 조유식씨 등은 국가정보원에 체포된 직후 밀입북사실 등을 인정하라며 잠 안재우기와 협박 등을 당했고 최근 3일전부터는 두 손을 허리에 올린채 머리를 바닥에 처박히고 하루종일 발을 서야 했으며 이러한 기합을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수사관들의 구둣발에 짓밟히는 등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다. 민가협은 이들의 변호사들(이석태 정태상 백승현)들이 김씨 등을 면회했을 때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가족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씨와 조씨는 다리에 피멍과 무릎에 피를 흘린 자국이 있고, 김씨 등은 수사관들로부터 뒷덜미와 따귀를 맞고 있다고 변호인에게 말했다. 민가협은 또한 29일 이들을 진료하기 위해 방문한 의사 정일용씨가 국가정보원을 방문했으나 국가정보원이 이를 막았다고 전했다.

민가협은 국가정보원이 김씨 등을 영장에 적힌 구금장소(서초경찰서)에 잠을 재우지 않고 국가정보원에서 발생조사를 벌이는 등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가협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30일 낮 12시부터 국가정보원 앞에서 고문 등 불법수사 중단과 가족면회 보장, 구타 피해자들에 대한 외부진료 허용 등을 요구하며 두 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권에게 실질적 인권보장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법개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거듭 국가보안법 전면 철폐를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새천년을 맞이 전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전북지역 1999명의 서명자 명단을 공개했다.

## "국가보안법 폐지"

### 천주교연대 전국순회투쟁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전국 순회 자전거 행진이 지난 26일 전주에서도 진행되었다. 자전거 행진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상임대표 김영진 신부·천주교연대)'가 지난 8월 16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전국을 돌며 진행하고 있다.

50여명의 참가자들은 호남제일문에서 전주 코아백화점까지 1시간 동안 자전거 행진을 하고 코아백화점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행사를 주관한 천주교연대 노진민 집행위원장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운동이야말로 해방과 구원의 축제인 대희년의 참정신을 이땅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대희년이 오기전에 하루속히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천주교연대는 이날 저녁 7시 전주 전동성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 공안시범 길들이기 패싸움 유도

## 부산구치소 재소자, 변호사 통해 양심선언

부산구치소 폭력배 출신 재소자 한 사람이 "구치소측이 공안시범을 길들이기 위해 일반재소자를 동원해 패싸움을 유도했다"는 양심선언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재소자 송원기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청원서를 냈다. 청원서에 따르면 송씨는 구치소의 하이무게 계장으로부터 "공안수들을 다스리기 위해 부소장 서무과장 보안과장 등 간부들과 협의한 결과 일반 재소자들을 이용해 맞불을 놓아 공안수들을 제재하기로 결론을 내렸으니 기회를 보아 이들과 시비하고 충돌을 일으키면 아무리 큰 사고가 나더라도 재소자들끼리의 다툼으로 축소하고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는 부탁을 받았다. 이런 언질을 받은 지 얼마 안돼 실제로 송씨는 '영남위' 관계자들에게 싸움을 걸었고 이 과정에서 일반재소자들이 합세해 공안수들에게 린치를 가했다. 사건이 있는 다음날에도 하계장은 송씨를 불러 "각 사동 문을 열어줄테니 재소자들을 동원해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공안수들을 해산시키라"고 요구했다. 송씨는 구치소측의 요구대로 재소자들과 합세해 공안수들에게 시비를 걸며 강제로 끌어내어 각 사동으로 보냈다. 이때 보안과장 서무과장 계장 등 20여명의 간부들이 뒷집을 지고 이 광경을 보고 있었으며 심지어 서무과장 보안과장 등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의 격려까지 했다.

송씨는 청원서에서 "이 일로 다른 재소자들과는 다른 각종 특혜를 얻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구치소측의 만행을 방지하기에는 더 이상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법무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히고 있다. 송씨는 또 청원서에서 "여러번 청원서를 썼으나 이 사실을 안 구치소측의 방해로 밖으로 내보내지 못했고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구치소측과 법무부는 이와 같은 송씨의 주장을 사실무근이라며 발뺌하고 있다.

한편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부산·울산 대책위는 30일 구치소에 있는 '영남위' 관계자를 면회해 사실여부를 파악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 독자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구독문의: 0652-231-9331 /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 ·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 【 행사와 동정 】

▶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소장 박상희·센터)가 지난해에 이어 "제2기 여성아카데미"를 연다. 센터는 직장내 성평등의식 확산을 주 목적으로 직장인과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강좌를 개설한다. 강좌시간은 오후 7시-9시. 장소는 국제화재 교육실(센터 지하). 회비는 2만원이다. [문의 : 0652-231-1366]

## 제2기 여성아카데미

9/6 여성으로서 나/김수성훈련	이강순
9/7 우리사회의 성과 성문화	이성희
9/13 우리가 알아야 할 성 이야기	안옥희
9/14 성차의 심리학	신명숙
9/20 직장내 성희롱이란?	여성민우회
9/21 남녀차별금지법 및 고용평등법	이미성
9/27 성과 사랑, 그리고 여성문제	민경자
9/28 여성폭력실태와 대책	한국성폭력상담소
10/4 생활호신술	김형태
10/5 여성으로 살아가기	김금옥

▶ 윤철수(군산노동자의 집 간사) - 경찰폭력에 항의하다 연행 구속되었습니다. 따뜻한 편지를 보내주세요.  
주소: 군산시 사서함 10호 113번 (우 573-706)  
※ 편지신청: 017-659-5715(유기만)

## 인권비디오

##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 동창회

■ 제작: 노동영상집단 '공작'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 부산울산대책위

얼마전 항소심에서마저 유죄판결을 받은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비디아가 나왔다.

이 영화는 관련자들이 구속된 뒤의 재판과정과 가족들의 치열한 무죄석방운동을 보여주면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이른바 반국가단체였다는 '영남위원회'에서 이적단체 '동창회'로 변경하기까지 김대중정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보안법 조작사건의 실체를 보여준다. [구입문의 051-817-1430]

## 기획연재 김대중 정부 출범 1년 6월의 사회변화 : 교육 ②

#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변화

지난호 "BK21(두뇌한국21) 무엇이 문제인가?"에 이어 교육분야 두 번째를 실는다. 다음호에서는 전교조 차상철 전북지부장을 만난다. [편집자주]

95년 5.31 교육개혁안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김영삼 정권의 교육개혁정책은 99년 하반기에 이르는 지금의 김대중 정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새학교문화창조: 교육비전 2002', 교육발전 5개년(1999~2003)계획, 고등인력육성정책(이른바 'BK21'), 신지식인운동 등 화려한 이름의 새로운 교육정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 이런 정책들은 교육시장질서를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고 경쟁논리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서로 통한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교육부문에 대한 시장원리 도입 △노동 유연성과 경쟁적 인간형 강조 △교육노동(교원)의 유연화를 특징으로 한다.

이번 호에서는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 끼친 학교현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 교육의 가치변화

### 무한경쟁시대의 인간형 창출

교육부는 99년 3월 교육발전 5개년계획(시안)을 통해 '창조적 지식기반국가'를 이끌어갈 유능하고 창조적인 인간형성 필요'를 기치로 내걸고, "부가 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출하는 '신지식인'으로서의 소양 함양을 위한 초·중등 교육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기존의 단선형 암기형 교육제도가 인간의 능력중 아이큐(지능지수)를 주되게 계발하는 제도였다면 이제는 지식산업육성에 필요한 케이큐(지식지수)를 근거로 한 교육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발게이츠'나 '심형래'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접받고, 곳곳에서 청소년 '신지식인'을 뽑는 행사가 열린다. 많은 교육운동단체들은 이러한 변화를 '학력주의의 또다른 이름인 능력주의를 강화하는 행태이며 인간의 능력을 수치화하고 교육의 목적을 무한한 부가가치를 얻는 것으로 왜곡시킨다'며 비판하고 있다.

### 교육내용의 변화

### 이중 평가방식과 이중 학업부담

입시위주 정책을 중등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으며 교육부는 '대입 무시험전형 제도' 등을 도입하고, '학생들의 자율적·창조적 학업활동을 위해' 보충수업을 폐지했다. 그 대신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평가제'를 도입하여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수상경력, 봉사활동, 체험활동, 인간관계 등을 수치화하여 평가한다. 여중 3학년에도 다니고 있는 김아무개양은 "차라리 보충수업을 다시 살리는 게 낫겠다"고 하는 예들도 있어 요. 학원을 가느라 돈도 더 들고 점수를 잘 따려면 일요일에도 쉴 틈이 없어요" 라고 털어놓는다. 선생님들은 "학급당 학생수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

신자유주의 교육은 △교육부문에 대한 시장원리 도입  
△노동 유연성과 경쟁적 인간형 강조  
△교육노동(교원)의 유연화를 특징으로 한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수행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한다.

### 교육 구조조정

### 교육재정정책과 교원정책 변화

신자유주의가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분야는 교육재정정책과 교원정책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교육재정 GNP 6% 확보였으나 김영삼 정권이 추진해오던 GNP 5% 마저도 후퇴시키고 있다. 학교운영비를 반감하고, 교원임금을 대폭 삭감하고, 2002년까지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 2000여개를 통폐합하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체 학교의 약 24%에 해당하는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교육단체들과 농어촌 주민들의 커다란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은 이 통폐합 계획이 농어촌 황폐화 계획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전교조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중 '교원정책'을 가장 큰 문제로 삼는다. 교원노동관리의 유연화정책은 수습교사제 기간제교사 초빙교사제 등을 도입해 교사신분을 불안정하게 하고 교사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쉽게 한다. 그리고 교사성과급제도를 도입해 연공서열방식 대신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교사들간의 경쟁과 통제를 강화시킨다.

### 민주주의

### 뒤로 가는 자치와 민주주의

지난 8월 10일 국회 교육위는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를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격하시켜 여러 교육·시민단체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학교운영위는 학교운영의 투명성 보장과 교사 및 지역사회의 정책결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98년 처음 설립된 기구다. 유명무실한 기구가 돼버린 학교운영위는 이전에도 관료적 학교장들이 학부모의 기금을 불법적으로 모금하는 창구로 전락했던 사례가 있다. 학교운영의 민주화,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학교의 모습은 요원하기만 하다.

인권  
주평

# 일본은 21세기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는가

이재천 (전주시의회 의원)

최근 일본은 그들의 군국주의를 더욱 노골화하는 일련의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가미가요'와 '히노마루'를 일본의 국가와 국기로 공식화하는 법과, '도청법', '신 가이 드라인(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법 등이 그것이다.

일본내의 시민단체들이 오늘날 하면서 그 법안들의 상임위 통과여부를 주목하던 즈음에 마침 나는 일본에 있게 되었다. 의정활동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수 년째 좋은 영향을 주고받던 사람들 맞이서 봄부터 계획한 일본 연수를 지난 7월하순에 다녀온 것이다. 일본에서는 열정적으로 사회운동을 하는 전직 의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우리의 목적에 맞추어 시설이나 기관, 현장 방문,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 등을 치밀하게 조직해놓고 있었다.

## 군국주의 홍보관 하마마쓰 기지

많은 현장과 시설들 가운데 일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되는 곳은 시즈오카현의 태평양 연안에 있는 하마마쓰 기지였다. 하마마쓰 기지의 역사는 일본 전투력이 근대화하면서 대륙침략전쟁의 역사와 함께 시작할 것이다. 1907년의 보병부대 창설과 중국 파병, 만주침략전쟁, 대동아 전쟁 등에 이 기지에서 부대와 무기를 지원했고, 종전후 중국에서 독가스청소를 대대적으로 벌였던 그 독가스의 훈련장이기도 했다. 또한 군수공장, 항공기지를 건설했는데 인부의 반절이 강제징용된 조선인이었다.

이 하마마쓰 기지는 군사력 보유가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본이 어떻게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는가 단적으로

로 보여주는 전시장이다. 사실 그 안에는 전쟁박물관(그들 말로는 홍보관)이 있다. 또한 기지 안에는 570억엔에 달하는 전투기 '에이웍스' 4기가 헌법을 비롯하여 들어앉아 있다. 에이웍스는 정보탐지, 교전명령, 미일통합작전의 기능을 가진 작전지원기로 이미 중동전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았다. 수색범위가 반경 550Km인 에이웍스는 동해상에서 한반도내의 모든 것을 탐지해낼 것이다. (우리나라는? 엄청난 구매력을 IMF 이유로 피했다.) 이 기지 안의 홍보관은 60억엔의 막대한 비용을 들여 최첨단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관광 명소화되어 일본의 군국화 이데올로기의 산 교육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학교나 직장을 대상으로 이곳을 단체관광하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자위대의 역사와 무기, 물품들을 전시해놓은 자료실, 항공전투를 다양하게 시험하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영상실, 그리고 최신 전투기들과 에이웍스 격납고가 환상의 세계처럼 진열되어 있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실재와 어떤 연관이 있나? 이것은 단순히 전시물인가? 홍보관의 입구에는 조종사의 전투복을 영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체격에 맞게 준비해두고 관람인들에게 입혀 기념촬영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유모차의 아기도 그 전투복을 입었고 키가 50센치도 안되는 꼬마가 그 옷을 입고 활보하고 다녔다. 그 아이들의 부모, 이곳을 방문하는 일본인들은 이 안에서 어떤 상상과 기대와

만족을 얻는 것인지 소름이 끼쳤다. 군사력 보유는 물론 병기나 군수물품 전시도 금지되어 있는 일본이 이런 홍보관을 최근 개관한 것이나, 4만톤급의 전투용 항공모함을 자체 개발 보유할 계획이라거나, 핵무장에 대한 일본의 능력과 가능성의 사실확인들은 여차하면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신가이드라인법 통과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황국시대 국가, 국가의 공식화 등...

## 시민을 바보 만드는 나라

우리가 일본에서 만난 사람들은 일본사회 비판가들로 자국의 군국주의를 우려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다. "교육은 인간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

르치는 것이다. 전투복을 어린아이들에게 입히는 것은 교육도 아니다. 일본은 시민을 바보로 만드는 나라, 이 기지는 일본이 전쟁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하마마쓰 기지 철폐와 에이웍스를 반대하는 단체인 '노-에이웍스 그룹'을 이끄는 역사교사 다케우찌씨의 말이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는 방향이 없다.

우리는 과거 일본과의 불행한 역사에 머물지 않고 인류공영의 우호적 관계로 발전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지금 일본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파괴와 파멸의 과거를 망각하고 또다시 공멸의 불행한 역사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은 일본의 이러한 집단적 호전성은 그들의 저급한 정신의 민족성인가, 아니면 쫓기면 도망갈 데가 없으니 잘 알아서 처신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물려주는 섬나라 국민의 운명인가, 그들의 상냥하고 예의바른 태도들을 보면서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일본은 지금 또다시 공멸의 불행한 역사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63 호

1999년 9월 7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 문단식

· 주소) [560-040]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52-231-9331 · 팩스) 0652-231-9332  
·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inp.or.kr · Homepage : http://inp.or.kr/onespark

## 술판 경찰 적반하장

### 취재기자 '공무집행방해' 고소

근무 도중 술판을 벌인 경찰들이 이를 취재한 기자와 언론사를 되려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소해 말썽을 빚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서 경무과 직원 등 2명은 지난달 20일 방송된 을지훈련 상황실 경찰 음주장면과 관련해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통제구역인 경찰서 상황실을 무단 침입해 취재했다"며 전주MBC 정아무개 기자를 현주건조를 침입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난 2일 전북경찰청에 고소했다.

경찰은 또 전북일보가 보도한 '을지훈련 경찰 상황실서 술판' 기사(20일자 15면)에 대해서도 지난 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전북 기자회견은 4일 성명을 내 "고소사건이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는 물론 언론 길들이기를 노린 전북경찰의 조직적 행동임을 중시한다"며 "언론권익보호와 언론자유 확보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출입기자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임시방편으로 만든 상황실 출입이 현주건조를 침범이고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며 "상황실에서 음주근무한 행태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기자단은 또 "하급직원이 정당한 취재를 위협하는 이례적 방해행위를 저질렀는데도 뒷선에는 방관만 한 뒤 이제 와서 사태진행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오리발이라며 "이런 경찰조직이 계급과 상명하복의 원칙대로 움직이는 기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전북경찰의 기자 고소를 규탄했다.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준비위원장 여태권)는 4일 논평을 내고 "민생경찰을 표방하는 경찰이 경찰서 내 훈련상

황실에서 술자리를 벌인다면 어떤 변명을 할지라도 납득할 시민들은 없다"며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시민운동연합도 6일 성명을 내 "전북경찰청의 사과와 해당 경찰의 고소 취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북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시민 알권리 침해 소송'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경찰연 등도 이 사건이 '언론자유와 국민 알권리 침해'라며 경찰을 규탄했다.

## 보안법 적용 이적단체 판결

### '영남위원회' 대법원 판결 - 디스켓 증거능력은 부인

이적단체 혐의로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3일 일부 원심파기와 상고기각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디스켓에 수록된 문서들이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의해 성립했다는 사실이 증명된 바 없어 위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비디오 및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능력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창현 박경순 방석수씨 등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남위원회는 폭력적 방법의 정부 전복과 새정부 수립을 위한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라고 보긴 어려우나 북에 동조해 북의 사상을 선전 전파하고 있고 조직의 노선과 체계 등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영남위원회 활동이 인정된 김창현씨에게는 징역2년이, 박경순씨와 방석수씨에게는 각각 징역7년과 4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김창현씨는 이로써 울산 동구청장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김창현씨에 대한 원심확정 판결이 나오자 <국가보안법 철폐와 김창현 동구청장 및 영남위 사건 구속자 무죄석방을 위한 울산시민대책위원회>와 <국가보안법 철폐와 김창현 동구청장 무죄석방을 위한 동구주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동일사건에 대한 상고심 기각과 원심파기라는 편이한 결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심 기각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또한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국가보안법으로 속박해 증거를 조작하고 부풀려 정치탄압을 일삼는 현정부와 그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법부의 모습에 분노한다"며 "이 사건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할 계획을 밝혔다. (기사제공: 인권하루소식)

# '잊지말자! 공권력 투입'

## 만도기계 익산지부 '가족과 함께' 행사

지난 9월 3일은 전국 7개 만도기계 공장에 1만5천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되어 만도기계 노동자들을 연행해갔던 악명 높은 공권력 침탈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노동조합에게는 아픔으로 기억될 수 밖에 없는 이 날을 기리기 위해 만도기계익산지부(지부장 이충인)는 사원아파트에서 조출한 행사를 마련했다. '잊지말자! 공권력 투입 1주년'이 그것이다.

"9·3 폭력만행, 저항정신으로 일터를 지켜내자"라는 플람이 걸려있는 아파트 마당에는 150여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모여있었다. 익산지부는 간단한 결의대회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바베큐 파티를 벌일 예정이다.

이충인 지부장은 인사실에서 "자본과 권력은 결코 믿을 수 없다는 걸 상기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소감을 밝히고 "그때 무참히 짓밟혔으나 우리는 다시 일어섰다"며 "그날을 되새기며 조직력을 모아 자본과 권력에 뽀대를 보여주자"고 말했다.

지부장은 또 "공권력 침투 이후 익산지부만 해도 희망되지 형식으로 그만둔 노동자들이 100여명이나 된다"면서 "현재 사람이 모자라 관리직까지 현장에 투입되는 실정을 볼 때 그들을 하루빨리 다시 복직시키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1주년 행사를 굳이 사원아파트에서 하는 이유에 대해 정병욱 교육선전부장은 "가족들이 함께 싸운 투쟁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간이 갈수록 가족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마당은 활기를 띄었다. 1년 전 공권력 투입의 현장을 담은 비디오를 상영할 때 가족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그때를 다시 기억해내기라도 하듯 열심히 화면을 바라보았다.

자본을 비호하는 공권력 앞에서 무참히 무너져야 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그러나 결코 진 것이 아니다"며 오목이처럼 일어나 '그때'와 '앞으로'를 열심히 이야기하는 노동자들을 보며 희망을 본다.

# 교육관행 해결 쉽지 않을 듯

## 전교조 전북지부, 도교육청과 첫 교섭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차상철·전북지부)가 합법화 이후 도교육청과 공식적인 첫 교섭을 가졌다.

전북지부는 지난 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도교육청에서 준비한 여러 의제들을 가지고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전북지부와 도교육청은 초반 1시간 반 동안 '면담이나, 교섭이나'를 놓고 감론을박하다 도교육청이 '형식에 매이지 말고 진행하자'고 함으로써 교섭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준비한 의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전북지부는 이번 교섭의제로 전교조 관련 임용제외자 등의 인사발령에 있어 조속한 시일 안에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발령해줄 것, 분회 활동 보장과 조합간부 활동시간 보장 등의 조합 일상활동 보장과 조합비 자동이체에 관한 건 등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도교육청의 답변을 얻어냈다.

또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의 미래를 같이 만들어나가는 취지로 도교육청에 '교육재정확보와 좋은학교 만들기 추진 운동본부' 결성, 교원 인사관리규정에 대한 공동토론회 개최, 교육환경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 등을 제안했고,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근 사립학교 정관 재개와 움직임과 관련하여 해당학교 명단과 정관 개정안 내용 공개, 초등전담교사 배치 기준 및 현황 공개 등의 요청에 대해 도교육청은 난색을 표했다.

전북지부는 이번 교섭에서 교육민주화 관련 복직자 면접 과정에서 전교조 기입여부를 묻은 것과 최근 전교조가 실시한 유치원 교사 연수에 교장이 "되도록 안갔으면 좋겠다"며 참여회피를 유도한 사례가 몇 군데서 나타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해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할 예정이었으나 시간관계상 얘기를 하지 못했다고 전북지부 김정훈 정책실장은 밝혔다.

첫 교섭을 마친 차상철 지부장은 "그 동안 쌓여왔던 교육계의 관행을 민주적으로 푸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소감을 말하고 그러나 "이번 교섭은 전교조로서는 꿈에도 그리던 교섭이었고, 그 동안 관리자의 입장에 있던 교육청과 전교조가 전북지역 교사를 대표하는 대등한 입장에서 노사가 함께 교육문제를 논의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 행사와 동정 】

- ▶ 윤철수(군산노동자의 집 간사) - 경찰폭력에 항의하다 연행 구속되었습니다. 따뜻한 편지를 보내주세요.  
주소: 군산시 사서함 10호 113번 (우 573-706)  
\* 면회신청: 017-659-5715(유기만)

- ▶ 서준식 1실 선고공판  
■ 9. 7(화) 오전 9시 반 / 서울 서부지원 407호 법정

- ▶ 문정현 신부 강제구금 항의 및 불명등한 SOFA개정 촉구대회  
■ 9. 10(금) 오후 2시 / 서울 주한미대사관

-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전북 총력 결의대회  
■ 9. 11(토) 오후 2시 / 전주주요이해학점 앞

## 기획연재

## 김대중 정부 출범 1년 6월의 사회변화 : 교육 ③

#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변화

(편집자주) 지난 3일 기자가 차상철 선생님(전교조 전북지부장)을 만났다. 지부사무실 개소식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질문에 꼼꼼하게 답변해 주셨다.

**취** 전교조 전북지부장이 되신 걸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지부장으로서의 소감과 포부는?

**차** 고맙다. 지난 4월 17일 대의원 회의를 통해 지부장으로 선출됐다. 전교조 합법화 이후 첫 번째 지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합법화 이전의 전교조가 비판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조직이었다면 이제는 책임있는 교육정책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부담이 막중하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교조가 합법화된 뒤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은 정부나 교육감과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교섭을 한다는 것이다. 단체교섭에서는 교원정책과 더불어 전반적인 교육정책을 다루게 된다. 현재 전교조에서는 160가지 정도의 단체교섭안을 마련해 왔고, '조합원 1인 1단체 교섭안 제안 운동'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세부적인 요구안들까지도 수렴해 단체교섭할 생각이다. 또한 설명회나 토론회를 통해 학부모·시민단체들의 의견도 받아 '도민과 함께 하는 단체교섭'으로 만들려고 한다.

**취** 전교조 합법화 이후 갖는 어려운 일은 없는지요?

**차** 전교조는 학교현장의 강화를 위해 학교별 분회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기득권 관료들이 시대가 변했는데도 계속해서 관료주의적 태도로 분회건설을 막고 있다. 학교단위의 노동조합은 현재 금지돼 있지만 분회는 불법이 아니다. 그런데도 기득권 관료들이 분회건설을 막는 것은 엄연한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다. 그리고 기존 전교조는 앞장서서 교육현실에 대해 비판하기를 많은 사람들로부터 요구받았지만 지금은 비판을 넘어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받고 있다. 이것은 전교조만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학부모·교사도 전교조 합법화는 곧 이 주체들이 자기의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

**취**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가장 큰 비판점은 무엇입니까?

**차** 두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김대중정부의 교육정책은 공교육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교육예산도 5.2%를 감소시켰고 교원이 부족해 수급불균형을 낳고 있다. 실업학교는 실습을 못할 정도로 초등학교는 교원 감축으로 교과전담제마저도 폐지시키고 삼치교사(2·3과목 복수담당)나 기간제교사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교육을 교육논리로 풀지 않고 경제논리로 풀려 하고 있다. 돈 안들이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교육개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경쟁논리에 의한 교원정책도 문제다. 차등보수제(연수 등의 이수학점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금지급), 성과급제, 자격연한제 등으로 교원의 신분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교직이 매력 있는 직업으로 느껴질 때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 따라서 교육개혁은 교원들의 처우개선, 신분보장, 교육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취** 하반기 전교조의 중요사업 중 전북교육 10대 현안 개선투쟁이 있는

데 무엇을 내용으로 하며 어떻게 투쟁해나갈 계획입니까?

**차** 전교조는 전북지역 교육현안으로 △농어촌 교육 정상화 △교육재정 확보 △교육환경개선 △사립학교 민주화 △교원업무 축소 및 보조사무원 배치 △초등학교 19시간 수업 및 교과전담제 실시 등을 생각하고 있다. 올 하반기 전북지부의 단체교섭과 함께 범도민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교육환경폭로 사진전, 교육재정 낭비 고발센터 설치 등으로 국민여론을 조성하고, '99 전북교육 10대 현안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취** 그 동안 전교조는 독자적인 사업과 활동을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향후 지역의 사회단체들과 연대활동의 계획이 있습니까?

**차** 교육과 환경, 교육과 인권, 교육과 여성 등 다양한 부문들과 연대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동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더욱 강한 연대실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교조의 단체교섭이 국민과 함께 하는 단체교섭이 되도록 할 예정이며, 농어촌학교 살리기 운동, 교육법개혁 운동 등 전교조의 사업들을 지역 여러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할 예정이다.

**취**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올바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힘써오면서 가치신 교육운동관을 듣고 싶습니다.

**차** 전교조는 출발부터 교육노동운동을 해왔다. 교육노동운동은 이념적으로 참교육 실현을 위한 운동과 노동운동이 변증법적으로 결합해야 하며 한쪽으로 치우침없이 균형있게 유지돼야 한다.

교사와 더불어 학부모·학생·교수·전문가 등 시민들이 함께 교육을 감시하고 연대할 수 있는 운동도 필요하다. 내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도 그런 의의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기고

# 시민단체의 친관료적 명사(名士)화를 우려한다

이재천 (전주시의회 의원)

나는 의정활동에서 몇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지지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일차적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의 올바른 비판과 제언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때 의정활동의 범주가 확장되고 책임이 강화되며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은 내가 전처럼 전적으로 신뢰하며 증거집단으로 삼기에는 혼란을 주는 면들이 적지 않았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의 도덕성과 활동력을 인정받으면서 지자체 안에서 개혁과 변화의 대안세력으로 큰 역할을 할 것 같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자체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비판과 투쟁 일변도의 입장과 활동에서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기회가 닿는대로 개입하였다. 그것은 책임이기도 했다. 언제까지 주변에서 비판만 하고 있을수는 없었다. 게다가 새 지자체, 특히 김완주 시장의 전주시는 눈에 드는대로 어떤 민간단체와 인사들을 끌어들이지 몰랐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는 수십년동안 변하지 않았다.

김완주 시장은 선거기간 동안 내내 시민단체를 두려워하고 불편해했다. 그것은 시민단체의 후보초청 토론회 등을 김시장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기억해보면 알 것이다. 그런 뜨거운 정열을 토대로 김시장은 취임하면서 의회의 동역도 없이 (꼭 동역이 필요한 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시장발전협의회'를 조직하여 학계와 문화예술계의 인사,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을 모조리 끌어냈다. 그곳에 들지 않으면

전주시회에서 명함도 못낼 것 같은 대 집단이었다.

그것은 한편 시민각계의 의견을 끌고 루 반영하려는 김완주 시장의 민주적 이면에서도 개혁적인 의지가 처음으로 구체화된 것이기도 했다. 또한 그 이후로 시장의 각종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의회에서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을 적극 추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회는 협의회 구성 때마다 시민단체들을 포함시킬 것을 적극 요구했었다.

지난 1년 동안 김완주 시장은 온갖 시민단체의 행사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했다. 시장은 시민단체가 지원을 요청할 때도 선선히 들어준다. 공무원들도 이제 시민단체활동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크고 작은 일에 그들의 도움을 요청한다. 원고 심사, 화장실 심사, 지원단체 선정 등... 그리고 집행의 정당성을 단체활동가들을 참여시킨 것으로 읽는다.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의 올바른 의식을 대변하는 시민단체의 의사를 수렴한다는 점에서 시행정이 진일보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사실 그들은 원칙과 명분에 어긋남이 없이 좋은 역할을 해왔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동시에 시민단체의 한 목소리는 점차 수그러들었다. 지난 1년 동안 시민단체가 전주시정을 이렇다하게 비판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다. 월드컵 경기장 시행체인 성원건설이 부도나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대규모 민원이 끊일 새가 없고, 치매병원 건립을 막는 민원을 해결한다고 21억원의 가뭇돈이 더 들어가는데...

이제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은 시장의 초청으로 해외시찰에 동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집행부와 의회의 예산 오남용의 사례로 해외시찰을 돌면서 비판해왔다. 특히 이번의

해외시찰은 그 예초 계획과 타당성, 절차에 있어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아 의회에서 여러문제를 제기했고, 방송 언론사에서도 동행제안을 거절하고 비판적 기사를 연일 게재한 바 있다. 시민단체대표들이 시찰에 동행한 목적이 철저한 현장연구의 비판적 시찰이라고 스스로 여길지 몰라도 그들의 판단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게 될 지 어려운 노릇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전주시와 유착의 관계를 가져올 수도 있게 보는 것이 이 사회의 상식 아닌 상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전주시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난 1년 동안 유례없는 호의와 이해와 지원과 지지를 주고 받았다. 영화제참관의 일정이 있는 해외시찰 제안에서 전주시는 호의의 극치를 보였다. 그리고 호의는 당연히 받아들여졌다.

시민단체는 이제 더 이상 명사로서의 재미와 특권의식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것이 시민사회를 이끄는 시민단체의 기본이면서, '시민사회운동만이 자본주의 사회의 비극적 종말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놈 촘스키)'이라고 믿으며 어렵사리 활동하고 있는 다른 단체와 활동가들의 명예와 노고를 깎아내리지 않는 일이다.

**시민단체는 이제  
더 이상은  
명사로서의 재미와  
특권의식을 버려야  
할 것이다...**



#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64 호

1999년 9월 14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 문만식

· 주소) [560-040]전주시 원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52-231-9331 · 팩스) 0652-231-9332  
· 통신ID) onespark(전.나.녹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inp.or.kr · Homepage : http://inp.or.kr/onespark

## 천주교 사제들 삭발단식

### 국보법 폐지 요구 명동성당에서 8일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문규현 신부·사제단) 소속 신부 30명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지난 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단식기도와 농성에 들어갔다.

단식기도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정현 신부 등 18명의 사제가 삭발식을 가졌다. 사제단이 생긴 이래 25년 동안 사제들이 삭발단식에 돌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요구가 그만큼 강렬함을 드러내고 있다.

사제단은 "국가보안법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독소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이 동의하는데도 '색깔론'의 위협 탓에 폐지운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색깔론에서 자유로운 사제들이 과거의 냉전 이데올로기를 끊고 역사와 민중의 부름에 응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매일미사'를 저녁 8시에 명동성당 성모동산에서 진행하고, 오는 15일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 앞 미사'를 가지는 등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을 알려나가는 행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밖에 사제단의 삭발단식기도에 동참하기 위해 가톨릭 노동사목 전국협의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회원들 10여명도 지난 10일부터 동조단식에 들어갔다.

한편 사제단 이외의 각계각층 사회단체들도 현재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전국연합이 주축이 된 '국가보안법 철폐 범국민 행동연대'는 주마다 화요일과 금요일에 한나라당과 자민련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공대위'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26

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준)' 역시 국가보안법 7조 완전삭제를 투쟁방침으로 잡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전북' 사제단 삭발단식 참가자〉
- 리수현 (용안성당 · 국가보안법 철폐 전 북연대회의 상임대표)
  - 문정현 (익산 작은자매의 집)
  - 문규현 (서화동성당)
  - 김진화 (동산동성당)
  - 최종수 (수류성당)
  - 장성만 (소양성당)
  - 김봉술 (오수성당)

## 삭발단식투쟁 리수현 신부

- 삭발단식기도에 들어간 이유는?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사제로서 사명과 소명을 다하기 위해, 그리고 정부를 향해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삭발단식기도에 들어갔다.
- 사제로서 삭발을 결단하게 된 계기는?  
 \ 머리를 깎고 목숨을 걸고 국가보안법의 악법성을 폭로해 이번에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시작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땅의 정의구현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2000년 대헌법이 오기 전에 반드시 철폐하는 것이 사제의 소명이기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역사상 처음으로 삭발단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삭발단식기도의 현재 분위기는 어떤지?  
 \ 갈수록 열의가 일어나고 있다. 각 교구에서 더 많은 사제들이 올라와서 결의를 다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방문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 두고보자는 결의가 커지면서 상황에 따라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다. 앞으로 사제들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 보게 될 것이다. 목숨을 걸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말겠다는 결의가 정말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현재 건강은 어떠신지 ...  
 \ 아주 좋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의 격려 덕분에 나는 건강이 매우 좋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에 뜻을 같이 해주면 감사하겠다.



# 노조, 감시·공작 대상 여전

## 현자서비스 97년 치밀한 직원사찰 자료 들뜸

현대자동차서비스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치밀한 사찰활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현대자동차 노조 판매본부 전북 지부(지부장 박종철)가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 1월 총파업 당시 현대자동차서비스는 인사부 노사협력과 명의로 전국의 지역부와 모든 사업소에 '파업주동자에 대한 개인별 집중적인 체증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지침을 공문으로 내려보냈다.

노사협력과가 작성한 '불법파업 주동자 1차 고소조치 후 사업장 관리지침'에는 체증 내용으로 사진촬영, 일일시간 대별 주동자별 활동일지 기록, 발언내용 기록, 파업형태 등 철저히 기록 등이 명시돼 있다. 또 회사는 당시 본조 이후 우 위원장과 조성훈 전북지부장을 비롯한 9명을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불법파업 주도'를 구실로 97년 1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전주북부경찰서 등에 고소한 상태에서 고소조치 후 예상상황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집약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지침을 내려보냈다. 이에 따르면 회사는 1차 고소조치에 대해 사업장 내부적으로 감경집단과 온건집단이 병존하는 경우 △정상조업 주장 주도자 및 조합원들을 파업 감경집단과 분리·실득·지원작업을 통해 상대적인 세를 불릴 수 있게 하고 △정상업무 복귀 및 수행을 명분으로 고소 대상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중단할 수 없음을 정확하게 인식 주지시킬 것 등을 관리지침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 공문은 또 "자판의 위원장 선거 예상주동자들의 사업소 연대 또는 결함투쟁도 예상되므로 즉각적인 동향 파악, 보고 및 조치가 가능토록 예의주시 바람"이라며 노동자들의 조합활동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찰을 지시하고 있다.

전북지역부도 비슷한 시기에 각 점소에 공문을 보내 △직원 개인별로 철저한 근태(지각 조퇴 결근) 관리 기록 유지 △파업 종료 후 일자별로 정상근무자는 활동비 중식대 전액 지급 등 6가지 '업무처리지침'을 하달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판매본부 박종철 전북지부장은 "회사가 우리를 이렇게 분리 공작관리했다는 사실을 접하고(몸이) 부르르 떨렸다"면서 현재 회사측의 사찰 개연성에 대해서도 "회사측의 최근 행태로 보아 지금은 그 때보다 오히려 확연히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 연대의 힘으로 승리

## 군산카게리어노조, 전원복직!

지난해 12월 14일 해고되어 260여일동안 복직투쟁을 해온 군산지역카게리어노동조합(위원장 오상수·카게리어 노

조)의 해고자 7명이 오는 10월 1일 전원 복직된다.

지난 7일 카게리어 노조가 사측과 최종합의한 주요내용은 △오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부당해고자 7명은 99년 10월 1일부터 광명운수(주)에 신규입사 △부당노동행위의 주범 대호물류의 노회옥 소장과 불법 하도급 소사장들 징계하고 △해고기간 중 생계보상금으로 6천만원 지급 △7명의 복직자에 운송차량 5대 이상 지급 △이성열 사장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등이다.

카게리어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는 막 시작하려는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탄압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카게리어 노조의 이번 싸움은 노동자 권리가 많이 유린되고 있고 노조활동도 침체돼 있는 화물운수업계의 노동운동에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열 명도 채 되지 않는 조합원으로 회사와 싸워 승리를 거둔 카게리어 노조의 김정석 부위원장은 "노동부가 회사편을 들어 편파적으로 처리하지만 않았어도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노동부의 편파행정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꼬집었다. 그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해 부위원장은 "노동부를 비롯해 시청이나 세무서 등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답변을 회피해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땐 속수무책일 경우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무엇보다 다른 투쟁사업장과 연대해서 함께 싸운 것이 가장 큰 힘"이었다면서 '연대의 힘'을 강조했다.

한편 카게리어 노동조합원을 해고시켰던 대호물류의 노회옥 소장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7월 27일 재판부로부터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돼 있고, 대호물류의 실제 운영자인 이성열 사장은 검찰에 의해 같은 혐의로 현재 수배중이다.

### 【 행사와 동정 】

- ▶ **윤철수(군산노동자의 집 간사) -경찰폭력에 항의하다 연행 구속되었습니다. 따뜻한 편지를 보내주세요.**  
주소: 군산시 사서함 10호 113번 (우 573-706)
- ▶ **군산지역 실업실태 발표회**  
■ 9월 14일(화) / 군산시청 회의실(6층)
- ▶ **전북지역 투쟁사업장 연석회의 2차 집중투쟁**  
■ 9월 17일(금) 오후 4시 / 군산 시청 회의실(6층)
- ▶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 9월 17일(금) 오후 2시 / 전주시의회 간담회실(5층)
-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전북 결의대회**  
■ 9월 18일(토) 오후 4시 / 전주 코아백화점 앞 광장

# “연대해서 풀자”

## 투쟁사업장 연대집회 가져

군산지역 투쟁사업장 연대회의가 일정한 성과를 거둔 이후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연대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투쟁사업장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지역 전체로 확대재편됐다.

지난 8일 오후 4시 현대자동차 판매 전북지부 앞에는 전북지역의 5개 투쟁사업장 노동자 300여명이 모여 '노동탄압 분쇄 전북노동자 결의대회'를 가졌다. 연석회의가 첫 번째 '뚝맞이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결의대회는 현재 전북지역에서 싸우고 있는 다섯 개 사업장(군산 개정병원노조, 기아특수강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현대자동차 판매 전북지부, 군산 카게리어 노조, 전북대학교 노조)의 노동자들이 각각의 노동탄압 사례를 발표하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 모인 노동자들은 짧게는 135일에서 길게는 345일까지 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례발표에서 전북대노조 유수만 위원장은 "최고의 지성이라 할 대학에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노동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전북대학측은 노조활동의 기초인 단체협약마저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노조위원장에게 조합활동을 그만두고 일자리로 돌아가라는 터무니없는 공문을 보냈다"며 전북대학교의 노동탄압을 고발했다.

현대자동차 판매 전북지부 박종철 위원장은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판매 소사장제 전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다섯 달 동안 외롭게 싸우고 있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제부터는 탄압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함께 한다고 하니 힘이 절로 난다"며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선언했다.

사례발표가 끝난 뒤 노동자들은 국민회의 도지부 당사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도지부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탄압과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에

대해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을 다한다고 볼 수 없다며 노동자의 생존문제를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연대회의의 다음 집회는 오는 17일 군산 기아특수강(주)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 시작은 화려했는데

## 전북경찰 인권보장위 워하나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지난 8일 전북경찰청(청장 김용백)이 지난 3월 산하에 설치한 인권보장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밝히라며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정보공개청구서를 통해 "인권보장위원회 소집 회수와 심의 및 의견 사항 등 위원회 설치와 인권보장위원 위촉 이후의 운영현황에 관한 정보들을 공개할 것"을 요

구하고 "시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보장위원회의 바람직한 활동방향에 대한 권고 및 행정감시를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산하 인권보장위원회의는 지난 3월초 설치됐으나 그 활동 내용과 현황 등은 일반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 독자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구독문의: 0652-231-9331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 SOFA 전면 개정하라

## 강제구금·민간인 탱크조준 규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을 위한 군산미군기지 매주금요집회가 이번엔 지난 10일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준비위원회(이하 국민행동)' 주최로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렸다.

'문정현 신부 강제구금 항의 및 SOFA 개정 촉구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미군기지 전국 공대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의 단체회원 10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국민행동은 "미군이 지난 6월 소음피해·환경피해 조사를 위해 평택미군기지를 방문한 국내의 평화운동가에게 탱크로 위협을 가한 데 이어 8월에는 사령관 면담을 요구하며 군산미군기지 앞에서 침묵시위하는 문정현 신부와 여성활동가들을 강제구금한 사태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규탄으로 시작했다.

이어 문규현 신부 등 대표들은 미대사관을 방문해 △정상규명 △책임자 처벌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문정현 신부(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 상임대표)는 "불평등한 SOFA가 개정될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은 서울 상경투쟁을 계속적으로 감행하겠다"며 더욱 강력한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기획연재 김대중 정부 출범 1년 6월의 사회변화 : 보건의로 ①

김대중정부 공약 얼마나 지켰나

[편집자주] '교육'에 이어 김대중 정부 1년 반의 보건의로 분야 변화에 대해 3회에 걸쳐 연재한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나는데 우리 사회는 저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이 가운데 김대중 정부의 국민 건강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실천됐는가? 이 점을 김대중 정부의 보건의로 부문 공약과 그 실천을 검토 해봄으로써 살펴보자.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기 전 국민회의 자민련이 공동 작성한 대선 공약집 「21세기로 가는 길」은 보건의로 관련 부분으로 10개 공약을 내걸었다. △복지예산 대폭 확충 △사회개발 5개년 계획 수립 및 실천 △현대적인 사회보험으로 통합 개혁 △통합의료보험 실시 △경로연금제 확대 실시와 노인 보건법 제정 △식품의약품청 신설과 현대적 검역 제도 강화 △공공의료와 일차 의료 강화 △자원봉사기법법 제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들은 집권 이후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 △의료보험 제도 개선 △국민연금 제도 개선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강화와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 등 4가지로 축소됐다.

이러한 공약들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김대중 정부 보건 의료 정책의 원칙은 국민회의의 정책 기획단이 98년 12월 제출한 「보건의료 선진화 정책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민주적 시장경제'로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하자.

김대중 정부 1년 반 동안 보건의료 분야의 가장 큰 변화는 '국민건강보험법' 통과로 표현되는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와 의약분업 실시 결정일 것이다.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는 89년 농민들

의 보험료 납부 거부 투쟁 이후 지속돼 온 10년이 넘는 건강권 쟁취의 열원을 담은 투쟁이었다. 그러나 야당의 원들이 단체로 등원을 거부한 날 날치기로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험 통합이 주내용이었고 민중진영이 주장해온 의료보장 확대와 애초에 정부가 약속했던 국고보조금 50% 지원 등의 명문화 과정은 빠져 있었다. 그나마 직장 의료보험과 지역 의료보험 재정 통합은 의료보험료 인상과 이를 둘러싼 국민들의 저항, 한국노총과 직장정보의 조직적 반발로 인해 2년간 연기되고 말았다.

의약분업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시민단체와 대한의사회, 대한약사회가 합의함으로써 이뤄졌다. 그러나 의약분업 실시되는 1년 뒤부터는 제약 자본의 구조조정(다국적 자본의 시장 장악)뿐 아니라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보험 재정 압박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중 정부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변화는 공공의료기관 기초조정이 다. 정부는 국립결핵병원 국립재활원 국립의료원을 책임행정기관화하고 국립정신병원을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방공사의료원 목포결핵병원 등의 민간 위탁 방안(행정자치부), 국립대학교 병원 효율화, 인원 감축 등(교육부), 원자력병원(과기처), 보훈병원(보훈처) 등에 대한 개편 논의가 있었는데, 이러한 개편 움직임은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성 추구'라는 기치 아래 △경상비 15-20% 감축 △민영화 및 민간 위탁 △기구개편 및 탑재 도입 △비정규직 도입 △인권감축 △연봉제 도입 △경영구조개편: 자율책임경영제 도입 △기타 복리후생의 축소와 현장 통제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공의료

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서비스 격차가 커져 의료제도의 형평성이 더욱 훼손되고, 경제적 접근성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빈곤층의 부담이 커져 궁극적으로는 저소득층의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보건소의 의료 이용 빈도가 높아진 것을 보더라도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 온 여러 정책이 어떻게 국민의 건강권을 버림으로써 내모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비단 공공의료기관 뿐 아니라 민간의료 기관에서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99년 현재의 보건복지부 예산 가운데 보건의료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를 제외하면 5.84%에 지나지 않는다. 의료보장 기금이 주로 치료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지불에 쓰여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체계의 개편이나 예방적 보건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사업을 벌이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더욱이 이 예산은 과거 역대 정권을 거쳐오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래 그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대체로 증가해오고 있었으나, 보건의료 부문의 정책 수행을 위한 사업 예산은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축돼 온 것이다. 보건의료 부문의 예산이 전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박정희 정권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역대 정권 중 김대중 정부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98년과 99년 두 해 동안 배정한 보건의료 사업 예산은 정부 총 일회회계 세출 예산 가운데 평균 0.29%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생산적 복지'를 천명한 금년 현재 정부와 국회가 편성중인 2000년의 정부 예산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의 비중은 오히려 대폭적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결국 김대중 정부 초기에 이루어진 소위 보건의료의 여러 개혁 작업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은 대부분 유보됐으며 오히려 국민 건강은 더욱 악화됐다. 그 자리를 메운 것은 경쟁과 효율이 지배하는 의료환경이다.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65 호

1999년 9월 20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문민식

· 주소) [560-040]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52-231-9331 · 팩스) 0652-231-9332 ·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inp.or.kr · Homepage : http://inp.or.kr/onespark

'국보법 폐지' 도내 확산

사제 등 10여명 단식농성 - 대규모 집회

대규모 집회와 단식농성 등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이 전북지역에서도 크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18일 전주 코아백화점 앞 광장에서는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전북도민 총력 결의대회'가 열렸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전북연대회의>(공동대표 한상철 목사 등)와 <전북지역총학생회협의회>(의장 양준화)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단식농성을 지지한다"며 "정치권은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를 즉각 집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 명동성당에서 삭발단식농성을 벌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문규현(사제단 대표) 신부는 "오늘로 12일째 사제단이 국가보안법을 살아있게 한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삭발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도 노벨평화상을 받고 싶어 한다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당장 일어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총협 양준화 의장도 정치연설에서 "역대정권들은 정권유지와 정적제거의 수단으로 국가보안법을 써먹어왔다"며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유린하는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국민회의 전북도지부 앞까지 행진을 벌인 뒤 "국가보안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라"고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도지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사제단을 비롯한 전북지역 종교인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10여명은 전주 덕진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단식농성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내고 "정치·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주 평화와인권 쉽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십시오.

독자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구독문의: 0652-231-9331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인권보장위 두번 열렸다

전라북도지방경찰청(청장 김용백)이 지난 16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8일 공개를 청구한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설치 직후인 지난 3월 15일과 다음달 13일 청장이 소집을 요구해 단 두 차례 위원회를 개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 소집된 위원회는 원주경찰서의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폭행사건과 진안경찰서의 총기사용으로 인한 민간인 살해사건 등 도내 언론이 보도한 네 건의 경찰관 위법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징계회부 등을 청장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청장은 해임 등 대상직원을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이에 대해 "위원회 개최 요건을 위원 5인 이상 요구 시 등으로 한정된 현행 운영방법을 개선해 2인 이상 요구시에도 개최하도록 하고 '인권피해구제 요청이 들어온 경우'에도 위원회가 소집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원회가 실질적인 인권구제 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형식적인 기구로 그치고 있다는 인상이 든다"며 "지방경찰청과 산하 위원회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청장이 경찰관 4명 등 10명의 인권보장위원을 위촉하면서 지방경찰청 산하 기구로 발족했다. 당시 위원회는 위원 다수가 치안전문가를 비롯해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 그 활동의 실효성 여부가 주목을 받아왔다.

# 일보전진 위한 한 걸음

## 호주제 폐지 위한 토론회 열려

90년 민법개정으로 사문화됐는데도 그 동안 현실적으로 여성차별문제를 양산했던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이 전북에서도 불붙기 시작했다. 지난 17일 전주여성성의전화(공동대표 하춘자 등)가 주최하고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여성운동가들이 참석한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그런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춘의(전북대 법학) 교수와 김승환(전북대 법학) 교수가 발제를 맡고 하춘자씨와 김금옥씨(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홍춘의 교수는 "호주제도는 일제식민지 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친황제적 가족국가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호주제도를 그대로 유입한 제도이고, 가족형태와 가족권이 변화한 현재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법은 △개인의 존엄 존중 △현실적 규범력 △단신 편부모 고통가족 등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교수는 특히 바람직한 가족법의 상으로 "부부일체성보다는 개인존엄성이 존중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김승환 교수는 "헌법상에 여성을 인권의 주체로 대우해야 하는 선언적 조항이 있지만 하위법에는 여성차별을 지속·강화시키는 법조항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호주제는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위반하고 있으며 남존여비사상을 바탕으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점에서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호주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취하고 있는 가(家) 중심의 신분등록을 도입해 부·모·자의 신분을 하나의 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어 하춘자씨는 △호주승계와 관련한 남아선호사상 △이혼가정 자녀의 호적과 성(姓)문제 △혼인외자의 입적문제 등으로 드러나는 호주제도로 인한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호주제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북여성단체연합은 호주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신분증명제로 결혼한 부부와 그 미혼자녀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기본가족별편제(가나다순에 의한)와 호주제도의 핵심내용인 부계혈통중심의 성씨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부부합의에 의한 성씨제도를 제안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김금옥 사무국장은 "호주제를 폐지하면 호주의 개념과 호적이 없어지고, 우선 이혼이나 재혼한 여성도 자신의 호적에 자녀를 올릴 수 있게 된다"고 밝히고 "여성차별적이고 봉건적인 호주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가 주축이 돼 활동하고 있

는 <호주제폐지 운동본부>는 앞으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설문조사와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2천년 2월께 국회 입법 청원을 할 예정이다.

# 인권침해 현장을 찍자

## 인권영화제 '카메라 인권지기' 공모

지난 96년 시작돼 올해 네 번째를 맞는 인권영화제에 공모 방식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제4회 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서울)는 오는 10월말께로 예정된 제4회 인권영화제에 "시민들이 직접 촬영한 인권침해 현장을 모아 상영하는 '카메라 인권지기'(공식부문)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출품은 비디오패카로 촬영한 자료(VHS/8mm/6mm/DC/Beta)면 가능하고 길이에도 제한이 없다. 또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단체나 개인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마감은 10월 10일. (문의: 02-741-2407 / rigcine@shinbiro.com)

# 통신공간 감청도 심각

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4대 피씨(PC)통신 감청 자료에 따르면, 이들 통신사들은 수사기관에 지난해 906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562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가운데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그대로 넘겨지는 아이디(ID) 감청도 올 상반기중 86건으로 지난해의 67건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디와 개인정보 유출은 주로 전기통신사업법 54조와 형사소송법 199조에 의해 이뤄져 왔다.

## 【 행사와 동정 】

▶ **윤철수(군산노동자의 집 간사) - 추석이 다가왔으나 아직도 차가운 김옥 안에 묶여 있습니다. 면회와 따뜻한 편지 바랍니다. (면회신청: 017-659-5715) 주소: 군산시 사서함 10호 113번 (우 573-706)**

▶ **전주지역 실업·일용노동자 실태조사분석 발표회**  
 ■ 9월 30일(월) 오후4시 / 전주시청 4층 회의실

▶ **기아특수강 해고자 복직투쟁 1주년 결의대회**  
 ■ 10월 1일(금) 오후4시 / 군산 기아특수강

▶ **군산미군기지 금요집회 추석에도 합니다.**

## <자료요약> 저소득층 및 실직노동자 실태조사

# 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분석

[편집자주] 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에서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두 달 동안 '군산시 저소득층 및 실직근로자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4일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군산시청에서 토론회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이번 '군산' 조사를 전북대학교 남춘호, 이성호 교수가 분석한 글을 요약해 실는다.

이번 '군산' 조사는 저소득층 실직가구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대상 가구는 649가구이다. 조사대상자 중에는 50세이상의 고연령층, 중졸 이하의 저학력계층의 비중이 높았다. 이들 중 70% 이상이 IMF 이전에도 1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이었으며, 현재는 86.3%가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속해있다. 전직별로 보면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에 종사하던 단순노무직 출신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조사결과 이러한 저소득층 실직자들이 실직과 소득감소로 인해 겪는 경제적 고통이 다른 계층의 실직자들에 비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중 대부분은 IMF로 인해 큰 폭의 소득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현재 가구당 평균 소득은 48.3만원으로 최소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여성가구주 중 90% 이상이 실질적인 생계책임자였으며, 이들 여성 가구주 중 88.3%가 실직 이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여성가장 가구의 경제적 압박이 한층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경제적 압박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용직 출신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실직 당시 퇴직금을 받지 못했으며, 받았다 하더라도 퇴직금 액수가 500만 원 미만이 경우가 60% 이상을 차지하여 자영업 등으로의 전직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응답자중 81.3%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 재취업될 가능성은 매우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다른 가족원의 수입이나, 친지의 도움으로, 그리고 빚을 얻거나 민간 지원단체의 도움을 얻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이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개인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계유지를 위한 공적인 수단으로 55.4%가 공공근로사업에 의존하고 있다. 그 외에 생활보호사업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여서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실업급여는 일용직 출신의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 실직가구의 생계에는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직업훈련의 확대도 단순노무직 출신이 많은 고연령층 실직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의 공적 사회보장체제가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수요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 기초해 있지도 못하다는 점을 여실히 입증해 준다고 하겠다.

최근 정부는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소득층 실직자들에게 거의 유일한 공적 생계유지수단이었던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된다면 이들 저소득층에게는 더욱 커다란 경제적 압박을 주게 될 것이 틀림없다.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은 경제적인 것 외에 교육문제, 의료문제 등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가정에서 자녀들이 진학을 포기하거나 휴학을 하는 경우가 25.4%나 되고, 환자들의 치료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31.4%에 이르고 있다. 실업의 장기화는 자녀문제, 주거문제, 건강의료문제 등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실직자층 전반이 '왜 하필 내가 실직 당해야 하는가'라는 분노와 배신감, 실직 이후 공포감, 불안감, 자살유혹 등 사회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실업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서 사회적 불안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실업문제의 연구과제나 정책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실업률 지표가 아니라 실업의 특성과 구조가 관심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특히 실망노동자나 불안전취업의 문제는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그동안 실업대책들이 실업발생 후의 사후적 보호차원에서만 다루어져왔으나 실업문제는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장기적인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라는 측면과 연관되어 고찰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분야의 미숙련 노련 실업자층이 장기실업자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수준에서 실업문제의 실상파악과 실업대책의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각종 실업대책들이 유연하고 현실적합성 있도록 조정·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노동시장과 실업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 신자유주의 원칙에만 매달릴 경우 멕시코와 같은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불안이라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할 지도 모른다.

**기 고** **민족화해를 원하는가? 국가보안법이란 악법을 철폐하라**  
 - 홍근수 (평통사 공동의장 / 향린교회 담임목사)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국가보안법의 부분 개정의사를 발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분개정안 상정이 예상됨에 따라 요즘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다변화하고 증폭되고 있다.

천주교 전국사제단 소속 신부들 20여 명이 지난 9월 7일부터 병동성당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위해 식발을 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은 그 수많은 투쟁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한가지 투쟁이다. 이들 신부들의 식발, 단식 투쟁이 시작되던 오늘 9월 18일 현재 꼭 11일째가 된다. 이들 중에 아직 병원으로 실려간 분은 없지만, 앞으로 며칠 동안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날 우려가 크다. 같은 기독교 성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단식하지 못하는 죄책감을 지울 수 없고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바라기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깨달아 고치고, 또 이 식발 단식투쟁에 돌입한 신부들의 결의를 과소평가하지 말기를 바란다. 당국은 또 늦기전에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함으로써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랄 뿐이다.

**민주주의는 장식용이 아니다**  
 냉전이 종식된 새로운 세계가 왔건만, 21세기를 맞을 맞을 대통령이 되어 정권을 장악한 김대중 대통령은 기대와는 달리 집권한지 1년 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양심수 석방은 물론이거니와 국가보안법을 아직 폐지하지 않고 있다. 그대신 이번에 부분개정을 꾀려왔을 뿐이다.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를 추구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은 다른 여러 말을 할 것 없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할 이유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첫째는 말할 것도 없이 국가보안법은

반민주악법이기 때문에 철폐되어야 한다.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양심과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비롯하여 인간으로서 모든 의미 있는 자유로운 생활을 불가능케하고 위협하며 거의 모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우리가 헌법에 민주주의를 장식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면 국가보안법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의 안정과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이 국가보안법 그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일 민주주의를 택하려면 반세기 이상 애지중지하고 익숙한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더라도 미련없이 버려야 한다.

**인륜에 어긋나는 법**  
 둘째 국가보안법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전 철폐하여야 한다. 솔직히 우리가 민족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원치 않는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철폐를 주장하는 바로 그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원수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을 미워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이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동정하고 북한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이적표현물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가지고 있거나 읽거나 말하거나 그런 것을 제작, 배포 등을 하는 경우나 어떤 사람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알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것이 남편이 되었던 아버지나 아들이 되었던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소위 불고지죄라는 것이다. 이는 인륜에 어긋난다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이 법은 하루 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셋째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녕질서를 위해서나 민주주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한 정권의 안보나 유지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력을 비판하는 동안은 그 사실을 비판하나 일단 권력을 잡으면 그 법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바로 그것이 이 법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없어도 국가안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시바빠 국가보안법을 포기하라**  
 다섯째로 이 국가보안법은 인권대통령으로 알려지고 있고 인권상을 여러 개 받았으며 앞으로 노벨 평화상도 받고 싶어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악법이다. 천하에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같은 군사독재자들에게는 모르되 국민의 정부, 문민 정부, 민주정부, 개혁 정부, 또 대북정책으로 햇볕정책, 포용정책, 또는 남.북 화해와 협력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김대중 정권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이는 정치인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의 신념과도 정반대되는 것이다. 만일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존치하던가 부분개정을 주장한다면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 인격은 물론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천하에 악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국가보안법은 한시 바빠 포기하여야 한다.

**김대중정부 1년6월의 사회 변화 : 보건의료②는 지면부족으로 쉽니다.**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66 호**  
 1999년 10월 5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 주소) [560-040]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52-231-9331 · 팩스) 0652-231-9332  
 ·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inp.or.kr · Homepage : http://inp.or.kr/onespark

**노조비리 · 불법 위협수위**

**J여객 위원장 횡령 피소 - '퇴진' 물려**

지난달 전주지검이 반부패 특별수사부를 설치하고 반부패 사범에 대한 특별수사활동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전주지역의 버스회사(전북지역자동차노조 J여객 분회)인 J여객 노조 조합원들이 노조위원장의 비리혐의를 검찰에 고소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주지검은 박종철씨 등이 회사 조합원 6명이 지난달 노조위원장 김아무개씨를 배임 등 횡령 비리가 있다며 탄원서를 내고 "김씨가 조부가 사망한 것으로 거짓 부의장을 돌려 200여명의 조합원들로부터 모두 90여만원을 거둬 챙기는 등 지난 97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2천여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박씨 등은 "김씨가 횡령하거나 유용한 돈 중에는 예경사비 명목으로 조합원들로부터 거두어들인 돈 이외에도 퇴직기사 전별금, 조합비, 예금이자 등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 등은 이어 "김씨가 자신의 비리 때문에 직선제를 하지 않고 분회규정과 조합규약 등을 이용해 대의원간선제를 유지해 전체 조합원을 우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의 불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김씨는 박씨 등이 지난 8월 위와 같은 주장을 담은 대자보를 회사 안에 붙이는 등 위원장 퇴진운동을 벌이자 "2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300만원 정도"라고 해명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돌렸다. 노조 대의원 6명도 사과문을 내고 "조합장의 6년 임기 동안 일부

조합비를 개인 사용한 것을 탓하기보다 노조의 기능 중단으로 악화되고 있는 근로조건 개선에 힘을 모으자"고 호소하고 "노동조합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최근 전북지역에서는 한국노총 전북본부 김아무개 위원장이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고 (주)신호페이퍼 정읍공장의 전노조위원장 김아무개씨가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기소되는 등

노동조합과 관련한 비리문제가 사회문 제화돼 왔다.

**더 이상 침묵 않겠다**

**천주교 전주교구 보안법폐지 운동 선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싸움에 천주교 교회가 들고 일어났다.

천주교전주교구(주교 이병호 신부)는 지난 달 28일 임시총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교회차원에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2쪽에 이어짐 ->]

**경찰, 노조간부 부인 통화도 감청**

지난해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벌여온 만도기계 익산지부의 노조사무실과 이충연 당시 위원장, 그리고 육종근 사무국장의 집에 대해 전북 경찰이 파업 당시인 지난해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나흘 동안 감청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달 30일 노동부에 대한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인 통신제한조치허가서와 감청일지 등을 통해 확인됐다. 당시 감청일지에는 '육종근의 처가 언니집에 전화해 우유값을 주어서 돈이 없다면서 외환은행 입금여부 확인', '언니에게 부송동 순대 집에서 순대를 사가지고 육종근 집을 방문할 것을 부탁' 등의 내용도 적혀있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본부장 염경석)는 1일 성명을 내고 "파업중인 만도기계 노조사무실과 노조간부의 집에 감청이 왜 필요한 것인지 경찰에게 묻고 싶다"며 "노조활동을 감시할 목적으로 노조사무실과 노조간부 집까지 감청한 것은 파업을 이용해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간부들의 동정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이어 "전북지역 노동자들은 이번 만도기계노조 감청을 조폐공사노조, 현대자동차노조 등 구조조정 사업장에 대한 파업유도 공작과 맥을 같이 하는 신중 공안탄압의 하나로 본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 “노근리 학살 정부가 조사하라”

군산미군기지 우리평찾기 시민모임(시민모임 상임대표 문정현 신부)는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에 대해 “정부가 자체조사를 벌여 사건의 모든 것을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4일 논평을 통해 “400여명의 죄없는 한국 국민이 미군에 의해 학살됐다는 것을 미국정부가 이제껏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더욱이 한국정부가 여러차례의 진정을 접수하고도 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유족들의 요구를 외면해왔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미국정부에 대해서도 “양민학살 사건 책임자를 처벌하고 공식사과 및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 소파(SOFA) 개정 거듭 촉구

### 시민모임, ‘불평등 관계’ 홍장관 발언 지지

군산미군기지 우리평찾기 시민모임은 4일 논평을 통해 홍순영 외교교통상부 장관의 2일 로스엔젤레스 발언에 대해 지지하고 소파의 전면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소파는 미국에서 상원의 비준없이 대통령이 체결한 것이므로 개정 절차 역시 대통령의 합의만 필요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며 “그런데도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는 한국 주권과 한국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소파에 대한 개정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지난 2일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가진 한 초청 강연에서 “소파 개정 협상 지연이 한미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 더 이상 침묵 않겠다

[>1쪽에서 이어짐] 전주교구는 우선 교구내 모든 성당에 ‘국가보안법 이제 폐지합시다’라는 플래카드를 걸는 것으로 지속적인 폐지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곧바로 전주교구는 지난 1일 저녁 7시 반 전주 전동성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국기도회’를 가졌다.

교회차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내건 것은 획기적인 일로 다른 지역의 교구까지 파장이 미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00여명의 신자와 100여명의 신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시국기도회에서 이병호 주교는 “아직도 냉전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민족의 평화를 위해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며 “지금껏 교회가 이러한 악법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던 것을 반성하며 2천년 대희년이 오기

전에 교회가 앞장서서 악법을 폐지하자”고 강조했다.

전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대표 김진화 신부)도 이날 기도회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필코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킬 수 있도록 단식기도에 이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한편 서울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의’ (연대회의) 주최로 ‘범국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이날 집회에는 종교계 노동계 시민단체 학생 등 각계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기 위해 힘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연대회의는 오는 16일과 30일을 2차 3차 ‘행동의 날’로 정하고 계속해서 전국민의 결의를 모아 국회를 압박해가기로 했다.

## 민교협, 사제단 단식투쟁 지지선언

### “국보법은 칼과 황금 지키는 폭력”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이어 학계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공동의장 김의수와 의 4명)는 4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사제단 신부님들의 삭발단식투쟁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고 “정치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이어 “다른 많은 사회단체들과 함께 신부님들의 투쟁에 동참해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 독자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구독문의: 0652-231-9331 /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 【 행사와 동정 】

- ▶ 윤철수(군산노동자의 집 간사) 2차 공판 / 특수공무 집행방해 · 폭력
  - 10월 13일(수) 오전10시 / 전주지법 군산지원
  - 주소: 군산시 사서함 10호 113번 (우 573-706)

- ▶ 전북지역 미조직 여성노동자 고용현황과 여성노동조합의 역할
  - 10월 14일(목) 오후6시30분 / 전주 가톨릭센터3층

## 〈토론회〉 전주지역 실업자와 건설노동자 실태조사

# 장기실업 · 불완전고용 문제 심각

최근 정부는 경제가 회복되고 실업률이 줄 것을 가정해 내년 실업대책 예산을 5% 삭감했다. 과연 그런지 실태조사를 기초로 열린 실업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지난 달 30일 오후 4시 전주시청에서는 전주실업자취업지원센터(소장 문규현 신부)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99년 전주지역 실업자 실태조사와 전북지역 건설노동자 무료취업알선센터(소장 정광수)에서 지난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실시한 전주지역 건설노동자 실태조사를 가지고 이뤄진 ‘실업현황과 정책대안’이라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 경기회복설 속에 문헌 실업문제

먼저 실업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주지역은 최근 실직기간 1년 이상의 실업자가 83.5%로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장기 실업자가 늘고 있고 이는 경기회복기에도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직사유를 보면 도산 휴폐업 조업단축 정리 해고 등의 비자발적 실업이 모두 63.2%나 된다. 구직계획에 대해서 응답자의 64.5%는 다른 대안이 없어 끝까지 구직활동을 해보겠다고 말하고 있다. 농업을 해보겠다는 응답자는 3.3%로 귀농을 현실적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업자는 아주 적은 것으로 판명됐다.

실직한 이후 현재의 가구소득을 보면 월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59.1%로 98년 48.4%보다 증가한 것을 나타냈다. 실직후 생계유지 방법은 ‘고등안의 저축’(55.3%)에 의존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기할 점은 ‘빚을 얻어서’라는 답변이 98년 8.5%보다 30.9%로 크게 증가한 점이다. 그밖에 실업급여에 의존한다는 응답은 26.6%에 불과했다.

### 시군단위로 정확한 실업통계 필요

소득감소로 겪는 금전적 어려움으로 자녀교육비를 품고 있으나 이외 각종 공과금, 세금 지출의 어려움이 크다는 응답이 55.1%나 되어 실업자에 대한 공과금, 세금혜택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채무변제의 어려움도 20.9%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실태조사를 분석·발표한 남춘호 교수(전북대 사회학)는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서 실업을 통계보다 실업의 구조적 특성과 실업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망노동자, 불완전취업자의 증가, 장기실업자가 퇴직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실업을 낮추기

에만 급급하고 주가 걱정만큼 실업 걱정은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직접 실업자들의 고충을 들어온 전주실업자취업지원센터의 이창석 사무국장은 “정부의 실업대책이 저소득층 장애인 노년층 여성가장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실업자만의 대책은 없고 생색만 내고 있다”며 “내년 정부예산에 삭감하는 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국장은 또 실업대책이 현실성이 있으려면 “지자체가 각 시군단위로 정확한 실업통계를 내고 그에 기반한 독자적인 실업대책을 수립할 것” 요구하기도 했다.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한 건설노동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40-50대인 건설노동자의 경우 3명 이상의 부양가족을 가지고 있는데도 60%가 월평균 수입이 50만원 미만의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체로 학력이 낮아 마땅히 기술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직업을 바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업대책으로는 공공근로가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5%에 불과해 건설노동자는 가장 기본적인 실업대책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노동자 대우 못 받는 건설노동자

이번 조사를 실시한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의 정광수 소장은 건설노동자의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 “기업주 위주의 임시직, 선택적 고용전략에 의해 일용직으로 고착된 데다 중층 불법하도급 체제가 한몫 거들며 임금노동자이면서 4대 사회보장제도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등 노동자 취급도 못받게 한 구조적 배경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여기에 다 향상적인 반실업상태에 있는데도 실업대책에서도 배제되는 상황”이라고 고발했다.

정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증명서 관리체계 도입 등 건설노동자에 대한 고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중앙정부에 앞서 지자체에서부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라북도 공공근로사업과 평가관 신현철 계장은 “2000년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호법이 시행되어 장기적인 실업대책이 마련되었다”고 말하고 “실업문제는 실업자 당사자들이 노력해서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 실업정책을 수행하는 일선 공무원의 실업문제에 대한 인식수준을 드러내 주었다.

기획연재 김대중 정부 출범 1년 6월의 사회변화 : 보건으로 ②

'이상관투쟁' 통해 본 노동보건운동

[편집자주] '교육①-③'에 이어 김대중 정부 1년 반의 보건으로 분야 변화에 대해 연재한다. 지난호 '김대중정부 공약 얼마나 지켰나'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산재노동자 고 이상관씨 사건을 통해 노동보건운동의 현실과 전망을 살펴본다.

'몸이 너무 아파 병원 다니기가 고통스럽다.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다시는 나 같은 노동자가 없기를...'

산업현장에서 허리를 크게 다쳐 입원 치료를 받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통원치료' 통보를 받은 한 젊은 노동자가 이런 말을 남긴 채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경남 창원 대우중공업 국민차사업부에서 일했던 이상관씨(27)는 지난 2월 22일 약 35kg 무게의 작업장비를 옮기다 허리를 다쳤다. 회사 지정병원인 창원 한서병원과 사천 성모병원에 입원해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나아지지 않았다. 허리는 물론 무릎까지 아파와 잠도 이루지 못할 지경이었다. 결국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4월 26일 '5월 15일까지만 입원하고 그 뒤에는 통원치료를 하라'고 했다.

타살 다음없는 죽음

퇴원을 하루 앞두고 아들의 고통을 보다 못한 이씨의 아버지 이석수(65)씨는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를 찾았다. 아버지는 '걸음도 못 걷는데 두 달 정도 입원치료를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때 이씨는 다리가 손가락 처럼 가늘어져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증이었다.

그런데도 공단측은 이씨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공단에 의학적 소견을 내는 자문의사는 서류만 검토한 뒤 '통원치료 검토'라는 견해를 냈

다. 허리가 뻐 '요추부염좌'라는 병명만으로 별 게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단측은 이씨가 입원한 성모병원에 전화를 걸어 '이씨를 빨리 퇴원시키라'고 압력을 넣기도 했다고 가족들은 주장한다.

이씨는 5월 14일 퇴원했다. 그 뒤 가족들은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이씨를 택시와 오토바이로 병원까지 실어나르며 치료를 했다. 이씨는 통원치료를 한달 가량 받은 뒤인 6월 22일 경남 사천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의 죽음은 노동보건운동을 해온 산재추방단체나 노동조합운동, 그리고 건강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온 보건의료 단체 및 진보적 사회운동단체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민주노총, 산업재해 추방운동연합 등 7개 단체는 대책위를 구성했다. 김복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민변 김진국 변호사 등은 7월 19일 창원 현지를 방문하고 돌아와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이씨가 자살한 원인은 '산재환자의 질병 상태를 무시하고 서류에 나타난 병명만을 인정하는 경직된 산재요양 행정과 그로 인한 부적절한 요양 형태로 나타난 환자의 좌절감과 우울증'이라고 결론 지었다. 또한 '자문의의 의견이 공단지사의 공문을 통해 병원 원무과로, 원무과에서 주치의에게로 전달됨으로써 주치의의 진료를 산재보상 행정의 틀에 맞게 제한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도 이씨를 자살로 몰고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매년 6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 죽고 불구가 되고 병들어가고 있다. 반면 산재보험제도의 낙후와 근로복지공단의 부실한 요양관리로 산재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치료받을 권리를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땅의 산재 노동자들은 사회발전의 역

군으로 온몸을 던져 희생했지만 산재 이후 이들은 사회의 무책임과 방관으로 가정과괴는 물론 인간 폐기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급여 절감을 이유로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더욱 심해진 근로복지공단의 강제 치료 종결, 퇴원조치, 재요양 거부 행태는 산재노동자들을 자살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해 말 건설노동자 박광제씨에 이어 이상관씨의 자살도 정부의 폭압적인 정리해고와 근로복지공단의 반노동자적 산재환자 관리에서 비롯된 '타살'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노동권을 보편적 권리로

한편 노동보건운동진영은 '이상관 투쟁'을 제도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의 쟁점이 있다. 또 누가 제도 개혁의 주체로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는다. 이에 대해 노동자건강사업단(준)의 김현수씨는 "보편적 노동권의 주체로서 노동자가 투쟁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더불어 "최근까지 산재노동자들은 노동자운동(특히 민주노총)의 중심에 서지 못한 '주변부노동자'였다며 '이상관 투쟁'은 개별 노동자의 산재보상운동을 뛰어넘어 전체 노동자의 보편적 노동권을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역시 '노동권은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이라는 인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찾는 운동이 바로 노동보건운동이다. 법과 제도를 통해 보장되는 건강권을 지키는 운동이 아니라 노동현장을 건강한 일터로 만드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만들어가는 것이 노동보건운동이다. 스스로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요구할 수 있는 동력을 갖기 위한 운동이 노동보건운동이며, 개별기업이 아닌 전체 노동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운동이 노동보건운동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노동계급이 자본주의를 극복할 원천을 찾아내는 투쟁이 또한 노동보건운동이다."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67 호

1999년 10월 12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주소) [560-040]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전화) 0652-231-9331 ·팩스) 0652-231-9332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넷.진보넷) ·E-mail : onespark@inp.or.kr ·Homepage : http://inp.or.kr/onespark

"이번 국회에서 폐지를"

도내 19개 종교단체 40일 단식투쟁 돌입

전북종교인협의회(회장 한상열 목사) 소속 단체 등 도내 19개 종교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40일 동안의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단체들은 11일 오전 전주 교백교회에서 '민족의 하나됨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전북종교인 40일 단식기도회'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 종교인들이 이날부터 길게는 40일까지 교백교

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저해하고 수많은 사람의 인권을 유린한다는 사실은 우리 종교인이 나서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된다"며 "모든 민주사회단체·전북도민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

우린 너무나 선량한 시민 아닌가

국보법 폐지 단식 결단한 박상희 목사 인터뷰

1. 이번 단식에 참가한 계기는?

○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로서 '새천년'을 맞는 자세는 어떠한지 생각이 많았다. 사회·민중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법' 때문에 제약되고 있다는 데, 그리고 새 정권 출범 이후로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에 전혀 진전이 없다는 점이 가슴 아팠다.

2. 1주일이면 긴 시간 아닌가.

○ 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존속 이유도 없이 수십년을 지탱해온 국가보안법에 비하면 그렇다. 국가보안법은 한마디로 '왕따' 수단이다. 우리는 너무나 선량한 시민인데도 말이다. 양심을 가진 사람들과 용기있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3.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은가.

○ 자신의 양심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었다. 적어도 부끄러움을 최소 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의 품과 인권을 보장하는 게 법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제약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온 힘을 다해서 국민적인 저항을 해야 하지 않겠나.

했다. 이들은 또 "김영삼 전대통령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했던 김현철 사면을 강행하는 오류를 범하면서도 국가보안법을 철폐 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김대통령은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으로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며 김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소파 이젠 바꾸자

소파 개정 국민행동 출범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즉 소파(SOFA·한미행정협정) 전면 개정을 위한 전국적인 기구가 탄생했다. 미군기지전국공대위, 녹색연합,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등 전국의 106개 단체는 지난 6일 서울 향린교회에 모여 '불평등한 소파 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 문정현 신부·국민행동)을 결성했다.

국민행동은 결성선언문에서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난 66년에 체결된 소파가 33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협정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상호평등한 국제관계의 명제하에, 평화롭고 평등한 한미관계 정립을 위해서 '국민행동'을 결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또 "나라의 안정과 국민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둔하기 시작한 주한미군이 정작 끊임없는 범죄로 민중들을 고통스럽게 했으며,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미군공여지라는 이유로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하루 아침에 쫓겨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지오염으로 인해 죽어가는 산과 들이 넘쳐나고 있는 [2쪽에 이어짐→]"

### 청와대 경호원들, 세계NGO대회장서 평화시위대에 “죽여버리겠다” 행패

11일 세계NGO(민간단체)대회가 열린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 앞에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인권공대위) 소속 회원들 50여명이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다 청와대 경호원들과 경찰관들에 의해 대회장에서 강제로 쫓겨난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경 인권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관한 국민회의의 2차 수정법안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세계NGO대회 참석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대회장에 도착하자 청와대 경호원들은 “죽여버리겠다”는 등 폭언을 퍼부으며 시위대를 강제로 밀어내고 60-70명의 전 투경찰을 배치해 격렬한 몸싸움을 일으켰다. 그리고 공식 행사가 끝난 12시경에야 시위대열을 풀어줬다.

인권공대위는 긴급성명을 통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상호이해·협력하기 위해 열린 세계NGO대회에서 NGO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유린한 사태는 청와대측의 인권의식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청와대측과 NGO 세계대회 주최측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그간 인권공대위는 △국가의 정규예산으로 운영 △공정한 인권위원으로 구성 △독립성 보장이 가능한 국가기관으로 국가인권위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국민회의와 법무부는 특수법인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 <소파 국민행동> 성명

### 노근리 학살 철저규명 촉구

6일 불평등한 소파(SOFA) 개정 국민행동(공동대표 문정현 신부·이하 국민행동)은 노근리 미군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클린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행동은 “여러 차례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진상을 규명하지 않는 이유는 역사의 아픈 진실은 묻어 둘 지라도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 한국, 피해자가 참가하는 공동조사단 구성 △미국정부의 공식사과와 유가족 배상 △한국정부의 진상공개를 요구했다.

[→1쪽에서 이어짐] 현실”이라고 고발하면서 “한국 정부는 자국민의 재산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21세기가 오기 전에 소파를 개정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요구했다.

국민행동은 앞으로 월 1회 미대사관 앞에서 정기적인 월례집회와 미행정부와 의회, NGO 등에 소파개정 촉구서한을 보내는 등 미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대국민 서명운동과 국제네트워크를 통해 소파개정에 대한 홍보와 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 민변, 정간법 개정 촉구

#### “재벌의 언론소유 제한” 등 국회의장에 보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이하 민변)은 지난 6일 오는 12월 18일까지로 예정된 제208회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민변은 국회의장 앞으로 개정 촉구서를 보냈다.

민변은 “재벌이나 족벌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우리 사회의 언론을 전면적으로 소유 지배하고 있다”며 “이를 그대로 용인 내지 방조하고 있는 정간법의 여러 문제점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특히 △재벌의 언론소유 제한 △특정인의 언론소유 제한 △편집권의 자유 보장 △정치권력의 편의에 따른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일부 조항의 폐지 또는 개정 등이 개정 정간법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독자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구독문의: 0652-231-9331 /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 【 행사와 동정 】

- ▶ 불평등한 소파 개정을 위한 1차 국민행동  
■ 10월 12(화) 오후2시 / 서울 미대사관 앞
- ▶ 윤철수(군산노동자의집 간사) 2차 공판 / 특수공무 집행방해·폭력  
■ 10월 13일(수) 오전10시 / 전주지법 군산지원
- ▶ 전북지역 미조직 여성노동자 고용현황과 여성노동조합의 역할  
■ 10월 14일(목) 오후6시30분 / 전주 가톨릭센터 3층
-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제2차 총덕질의대회  
■ 10월 16일(토) 오후2시 / 전주 코아백화점 앞

## 나를 관찰하는 이유 밝혀라

### 보안관찰 피쳐분자 집단적 정보공개 체비

보안관찰피쳐분자(보안관찰자로 처분된 자)들이 자신을 보안관찰에 처한 이유와 근거를 밝히려는 정보공개청구를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얼마 전 행정소송을 통해 보안관찰처분 취소판결을 받은 김삼석씨 등 보안관찰에 처해져 국가정보기관의 감시망 속에 사생활의 자유마저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전국의 보안관찰피쳐분자 50여명은 “나를 보안관찰자로 처분한 심사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오는 18일께 집단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집단 청구에 함께 할 전국의 보안관찰피쳐분자들을 모으고 있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과 군형법, 형법 위반으로 3년 이상의 형을 살고 나온 자에 대해 재범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개인의 신상을 국가정보기관에 일일이 보고하고 국가정보기관은 개인을 항시 감시·기록하도록 하는 감시 도구다. 보안관찰법의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는 지난 3월부터 전세계에 한국의 보안관찰법 폐지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김삼석씨는 “보안관찰대상자나 피쳐분자들이 한결 같이 조국통일과 노동해방을 위해 일하다 감옥에 갔던 중·장기수들이라는 사실은 보안관찰법의 목적이 ‘더 큰 감옥에 이들을 가두려는 것임을 증명한다’고 지적하고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진보세력을 옥죄는 또 하나의 악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사법부는 보안관찰피쳐분자들이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검찰의 보안관찰처분 남발에 제동을 걸고 있다. 법원은 한결같이 “보안관찰 처분은 일반 형벌과 달리 재범 위험성을 막으려는 예방조치인

만큼 대상자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재범 위험성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상 보안관찰처분을 내리는 것을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올 2월 12일, 4월 9일 사노맹 사건 복역자였던 장민성씨와 고원씨에 이어 지난 7일 93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복역한 김삼석씨까지 모두 7명이 소송을 제기했고 이들은 모두 처분 취소 판결을 받는 쾌거를 올렸다.

#### <보안관찰법>

## 졸속 교원수급정책 철회 요구

### 전교조 전북지부 초등교사 결의대회 열려

전교조(지부장 차상철, 삼례공고) 전북지부가 도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오후 3시 전교조 전북지부회관에서 전교조 전북지부 초등위원회(초등위원장 김용규, 남원 중앙초등)의 주축로 '99단체교섭승리와 졸속 초등교원 수급정책 철회를 위한 전북초등교사전진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교조 소속 교사와 전주교대 학생 등 150여명은 결의문을 통해 “늘어난 퇴직교원 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모자라는 초등 담임교사를 중등자격증 소지자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며 졸속적인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을 비판하고 “졸속초등교원수급정책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교육재정을 대폭감축하고 모자라는 교육재정을 시골 작은 학교 통폐합이나 학교 교육비를 대폭 삭감함으로써 매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19시간 수업시수 법제화 △교과전담제 전면확대실시 △농어촌교육환경 개선 등 전교조 초등위원회 12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북교육 10대 현안 개선 서명사업’을 결의했다.

한편 교육법 재개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한 전북연대회의(공동대표 차상철)는 같은 날 오후 3시 차없는 거리에서 △정기국회에 교육관련 법안 제입법 △사립학교법 민주적 재개정 △교육감·교육위원선거에 전 학교운영위원 참여보장 등을 요구하며 개막된 법안 재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0월 말부터 교육재정 6%확보를 위한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기획연재** 김대중 정부 출범 1년 6월의 사회변화 : 보건의료 ③  
**민중의료연합 강동진 대표 인터뷰**

**1. 김대중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 정부는 보건의료의 핵심 문제를 극도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바라보면서 이를 낳은 원인을 보건의료의 '무질서한 시장경쟁' 때문이라고 파악한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개혁의 원칙을 '민주적 시장경제'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첫째 보건의료에서 무질서한 경쟁을 질서있는 경쟁으로 바꾸자는 것이고, 둘째 보건의료에서의 민주적 절차와 참여를 위한 기전을 만들자는 것이며, 셋째 자치단 강한 그리고 기본적 국민보건을 책임지는 보건행정 당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요약하면 정부의 '민주적인 시장경제'라는 보건의료 개혁의 원칙은 보건의료 부문을 시장의 원리에 더욱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공립의료기관 구조조정,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의약분업 실시 등이 있다.

**2. 구체적으로 신자유주의 보건의료 정책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의료 개혁은 70년대말 80년대초 영국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개방화·자유화·탈규제·민영화로 특징지어지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 그 특징으로 보건의료부문에서 중앙통제 포기과 분권화, 국가보조금 축소, 민영화, 본인 일부부담금제 도입, 민간의료보험 도입, 계약제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의료부문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개혁, '시장기제' 도입은 보건의료의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효율성을 증대시켜

문제를 악화시켰고, 더군다나 '시장'의 비효율성이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형평성과 접근성을 하락시킴으로써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붕괴 등으로 제3세계에서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등 민중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고, 보건의료의 비용을 민중에게 전가함으로써 그 고통을 더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의료를 끊임없이 사적 영역으로 내몰아오면서 보건의료의 기본적 가치 중의 하나인 사회적 연대성을 약화시키고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약화시킨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보건의료개혁은 민중적대적이며 민중배제적 성격을 띠므로 이에 반대하는 것이다.

**3. 왜 김대중정부가 이러한 신자유주의 보건의료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까?**

○ 우리나라는 현재 GDP의 5.4%를 보건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하면 아직은 적은 편이다. 아직은 서구와 같이 높은 의료비가 사회문제로 될 수준은 아니지만 문제는 잠재된 비용상승 요인이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의료비 상승은 의료보험재정을 압박하고 있고(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 재정 부담을 크게 해 자본가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정부와 자본으로서 보건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전략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90년대 초반부터 '세계화·국가경쟁력 강화'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사회전반의 경쟁과 효율이라는 이데올로기는 현재 '구조조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민중의료연합(을 비롯한 보건의료운동진영)은 이에 대해 어떤 내용의 운동을 전개합니까?**

○ '민간위주의 보건의료 시장 구조'가 온존하면서 행해지는 신자유주의적 보건의료의 재편은 필연적으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계급대립을 현실화시킨다.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그것은 우선 시장주의적 보건의료 구조 조정에 반대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노동 보건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가 지난 4월에 결성돼 지금까지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50% 법제화, 의료보험재정통합 즉각 실시'를 요구하는 의료보장 투쟁을 벌이고 있고, 국공립 의료기관 구조조정 반대 및 공공의료 강화 투쟁 등을 전개해 왔다. 최근에는 산재노동자 이상관 사살 사건을 계기로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투쟁도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국공립의료기관 실태조사를 통한 공공보건의료 예산 확보투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의료보험통합운동이 '통합'이라는 형식적 제도를 마련하는 운동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실질적인 의료보장운동으로 상승·발전할 수 있는 투쟁을 계획 중에 있다.

**5. 좀 더 구체적으로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미래상은 어떤 것입니까?**

○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미래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뭐라고 말할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아무런 부담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보편적 권리로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원칙은 국가나 자본에 의해 시혜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직접 참여와 통제에 의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보건의료 제도는 이러한 측면에서 각각의 장·단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미래는 지금 있는 현실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68 호

1999년 10월 19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 주소) [560-040]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52-231-9331 · 팩스) 0652-231-9332  
 ·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inp.or.kr · Homepage : http://inp.or.kr/onespark

**대책없는 내년 실업대책**

**국방 치안 예산은 오히려 증액 편성**

정부와 노동부가 짜낸 다음해 실업대책예산이 올해에 비해 큰 폭으로 삭감돼 97년 국제재정금융(IMF)체제 이후 크게 늘어난 실업자들의 지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천년 정부예산안에서 공공근로와 한시생활보호 등에 쓰일 실업대책예산을 올해 3조2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52% 가량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같은 실업대책예산 삭감을 실업률 감소를 감안해 단기(한시적) 실업대책은 축소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반면 국방비는 올해보다 2.27% 증액 편성해 전체 예산의 17%에 이르게 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 및 치안예산은 실업대책예산의 10배,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 국가유공자, 의료보험 등)예산의 3배가 넘게 된다.

**“의보통합해야 건강권 찾는다”**

**민주노총·농민 연대집회 이어 통합연기 반대 성명**

정부와 여당의의료보험 통합 연기 발표에 대해 민주노총전북본부(본부장 염경석)가 지난 13일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부 들어 제대로 된 개혁입법이 하나도 없고 이번 역시 보수기득권층의 저항과 반발을 의식해 의료보험통합이 거의 무산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통합 연기의 명분으로 든 △한국노총 등의 반발 △자영업자 소득과 압박 미진과 보험료 상승 △전산망 구축 미비 등에 대해 '근거없다'고 일축하고 '오히려 정부의 직무태만과 한국노총의 조직이기주의'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의료보험통합이 이루어지면 일부 대기업 노동자들의 보험료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권 확보와 사회복지 실현이라는 공익을 위해 의료보험통합을 찬성하고 있다"며 진정한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의료보험통합을 정치적 흥정물로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12일 고창에서 노동자와 농민 3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보험통합 연기·무산 음모 철거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전북민중연대회의(전주실업자취업지원센터 외 11개 단체)는 18일 성명을 내고 "전체 노동자 가운데 52.2%가 임시·일용직으로 고용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업대책예산 삭감안을 통과시켰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단기 실업대책예산이 52% 삭감된 지금 정부가 실업극복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단기 실업예산 삭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단기 실업예산은 특별회계에 들어 언제든 지급조될 수 있는 만큼 모든 실업예산을 일반회계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민중연대회의는 또 "주먹구구식 단기처방 대신 실업예산을 늘리고 국방비를 줄이라"고 요구했다.

**“파업보도 불공정”**

**한라중 노조 '입장' 발표**

지난 8월 이후 19일 현재 63일째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는 한라중공업 노동조합(전남 영암·위원장 권성원)이 파업과 관련해 언론이 공정보도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라중공업 노조는 17일 발표한 '노조입장'에서 "그동안 언론과 지식인들은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하고있는지에 대해 침묵해왔으며 일부 언론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을 왜곡해서 보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그 사례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 동안 H신문 등 12개 중앙 일간지가 보도한 한라중공업 노조 파업 관련 (3쪽에 이어짐→)



# 70%가 '노동조합 필요' 응답

## 전북지역 미조직 여성노동자 고용현황 발표

전북여성노동자회(회장 김희전·전북여노)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역 추진위원회(위원장 박미란·여성노조 전북추진위)가 전북지역 미조직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4일 오후 6시 전주 가톨릭센터에서 열린 '전북지역 미조직 여성노동자 고용현황과 여성노동조합의 역할' 토론회에서 발표된 이 조사는 99년 5-6월에 전북지역의 20-40대 미조직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총 응답자수는 212명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임금은 월 48만 9천원(전국 평균임금은 64만 5천원)이었으며 전체의 약 94%가 7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어 전북의 미조직 여성노동자들의 심각한 저임금 실태를 보여줬다. 그리고 IMF 이후 여성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의 변화에 대해 응답자의 64.9%가 임금이 삭감됐고 1.9%가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응답자 중 45.2%가 98년 이후 노동강도가 한층 강화됐다고 응답했다.

직장에서 경험한 차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5%가 '관리의 고압적 태도'를 꼽았으며 '임금차별(17.9%)', '업무 배치차별(16.0%)'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응답자의 9.6%가 폭행·언어폭력·성희롱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모성관련 휴가사용을 금지하거나(4.5%) 임신·출산과 관련해 퇴직압력을 받았다는 응답(1.9%)까지 더하면 직접적인 성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16%에 이른다.

여성노동자들은 차별을 받고서도 그냥 참고 지내고(81.3%) 있으며 16% 정도만이 개인적으로 항의하고 있다는 응답을 하는 한편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약 7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북여노와 여성노조 전북추진위는 토론회를 통해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4대 사회보험법의 전면 적용 확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관련법 적용 확대와 개선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모성보호를 위한 사회적 지원조치 확대 △여성노동자들의 권리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확대 등을 제시했다.

# "국보법은 노동자세력화 걸림돌"

## 지난주 범국민 행동의 날 '국보법 폐지' 촉구

지난 16일 '제2차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행동의 날' 전북도민결의대회가 전주코아백화점 앞에서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뤄졌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행동의 날을 10월 3일과 16일, 30일로 각각 정하고 범국민적 집회를 갖고 있으며, 전북지역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전북연대대회'(상임대표 리수현·한상철·김승환)가 전국적인 상황에 맞춰 지난 16일 결의대회를 갖게 된 것이다.

전국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의 목소리가 각계 각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날 리수현 신부는 대회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악법성은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이 알고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 민주주의도 통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연태 민주노총전북본부 통일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노동자"라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강력히 주장하고,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는다면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는 불가능하며 '영남위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노동자 민중 후보가 당선되면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연대회의는 이날 집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선언'을 통해 현재 정부 여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에 대해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부분적으로 손질하여 국내외의 비판 여론을 비껴가려는 얄은 수작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인권정부라는 거짓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북연대회의는 한편 한나라당과 자민련을 극우보수세력이라고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손을 대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전북연대회의는 이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 행동지침'을 낭독하고 제3차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행동의 날 전북도민결의대회를 오는 30일에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다양한 행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날 집회는 국민회의 전북도지부까지 평화적인 행진으로 마무리됐다.

## 【 행사와 동정 】

- ▶ **국민통합과 지역사회 개혁을 위한 토론회**  
■ 10월 19일(화) 오후 2시 / 전주시청 4층 회의실
- ▶ **노동탄압분쇄 제4차 전북노동자 결의대회**  
■ 10월 19일(화) 오후 4시 / 서천 서해병원
- ▶ **제24차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결연**  
■ 10월 21일(목) 오후 6시 / 전주코아백화점 앞

# 인권법도 '악법' 반열 오르나

## 인권공대위, 인권법안 문제제기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해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 4월 '법무부가 인권위원회를 감독한다'는 내용의 인권법안이 졸속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인권운동가 단식농성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저항이 크게 일어나자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법안의 재검토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인권공대위)는 "특수법인은 국가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반드시 감독기관을 정해야 한다. 이는 법무부가 인권위원회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정부 여당과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계속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법인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 여당 또한 인권공대위가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안)에 대해 "민간단체들의 대안이 최선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며 '인권법안'의 내용을 정기국회에서 강행처리할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인권공대위는 이에 대해 16일 성명을 통해 "독재정권에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온갖 인권탄압을 일삼고 정권이 바뀌어도 한 마디 반성도 없었던 법무부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인권위원회의 감독기관이 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하고 △인권위를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치할 것 △국가의 정규예산으로 인권위를 운영할 것 △민간기구가 아닌 국가기관으로 설립할 것 △인권위원 선출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등 네 가지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 파업보도 불공정

(→1쪽에서 이어짐) 기사 30건 가운데 회사측 입장은 225줄이 보도된 반면 노조입장은 겨우 37줄만 보도됐다. 또 30건의기사 가운데 연합뉴스가 작성한 기사를 그대로 옮겨실거나 인용하기만 한 기사가 20건에 달했다.

노조는 이와같은 사정이 지역언론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그러나 "일부 언론은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한라중공업 노동조합은 이에 앞서 "중앙언론 대부분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전했고 지방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요 방송사들이 노조를 과격해 세력으로 몰아부쳤다"며 언론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진 바 있다.

'노조입장'은 이 항의집회 뒤 모 언론사가 지난 11일자로 '불공정보도 항의 집회'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노조측에 보낸 뒤에 발표됐다.

## 후원을 기다립니다.

0652-231-9331 /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 인권단체는 어떤 인권위 바라나

## 1. 민간기구가 아닌 국가기관

→ 민간인(법인)은 공권력의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거나 제어할 수가 없다. 인권위원회는 여타 공권력과 적어도 비슷한 권위와 위상을 가진 국가기구여야 하며 인권위원 신분도 공무원이어야 한다.

## 2. 독립적인 기관

→ 인권위원들은 어떠한 공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소신껏 국민의 인권을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인권위원회는 인사·업무·재정에 있어서 법무부를 비롯한 어떠한 공권력에도 종속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제도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어야 한다.

## 3. 국가의 정규예산으로 운영

→ 보조금, 출연금은 국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좋은 일'을 하는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국가의 지원금이다. 물론 그것은 법무부 장관 등 해당 감독기관의 장을 통해서 신청하고 교부된다. 이런 불안정한 재정을 가지고 다른 문제도 아닌 인권문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책임질 수 있겠는가. 인권위원회는 국가의 정규예산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4.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권위원

→ 공무원이나 검사·판사 퇴직자들을 인권위원으로 앉히려는 모든 의도에 반대한다. 국민의 인권을 책임지게 될 인권위원회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권위원들, 여러 가지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인권위원들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인권위원 선출에는 국회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책임지되 시민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획연재 김대중 정부 출범 1년 6월의 사회변화 : 사회복지①

못가진 자와 연대하지 않는 정부

김대중 정부 들어 논란이 끊이지 않던 의료보험 통합문제가 정부·여당에 의해 또다시 6개월 연기돼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 의지가 다시 평가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통합의료보험제도는 모든 의료보험 가입자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통합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요구해 온 보건의료운동진영의 주장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통합의료보험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과약을 철저히 하고 이를 제도화하라는 것이다. 둘째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을 늦추지 말고 2천년 1월부터 시행하라는 것이다. 의료보험 통합의 핵심은 재정통합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50% 국고지원을 법으로 보장하라는 것이다. 지역의료보험 재정이 적자상태인데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급

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넷째는 5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를 직장가입자로 바꾸는 것이다. 이들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로 바꾼다면 이들 노동자들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의 불공평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반면 직장의료보험노동조합과 한국노총은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직장인의 의료보험료가 인상되고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못까지 부담하게 된다'면서 의료보험 통합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지난 9월 20일 한 토론회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본 의보통합의 과제'라는 발표에서 이러한 논리를 비판했다. 즉 "직장의료보험과 공무원 사립

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을 통합하면 직장노동자의 보험료만 인상돼 봉급생활자가 손해를 본다는 한국노총이나 직장의료보험노동조합의 주장은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라는 사회보험의 원칙을 망각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는 또 "통합을 통해서 저소득 노동자의 보험료가 경감되고 고소득 노동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민주노총은 통합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 및 직장의료보험을 통합하는 시기를 당초 2천년 1월 1일에서 2천년 7월 1일로 6개월간 연기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운동진영은 연일 성명을 내고 집회를 갖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과 기득권층의 반발을 의식해 정략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유보시킨 것이라는 의혹도 크게 작용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의료비의 절대비용은 여전히 높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삶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적게 부담하고 많이 가져가려는 무임승차의 심리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 문제를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공적 의료보험의 위상에 대해 사회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언제까지 가진 자들의 부는 그대로 온존시키면서 가진 것 없는 자만의 고향을 짜면서 '공적' 의료보험을 운영하면서 적자타령만 할 것인가? 따라서 사업주의 부담비율을 높이고 국고조교를 높이는 한편 누진납부제를 적용하지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가난한 자들과 연대하는 정책을 펼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1999. 10. 9.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

642

성명서

정부·여당은 의보통합시행 연기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 여당은 의보통합으로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 직장비보험과 한국노총의 반대를 연기사유로 들었으나, 지난 9.10일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통합시 직장인의 보험료총액은 변동없이 고소득, 저소득 직장인간에 보험료형평성이 달성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또한 직장비보험과 한국노총의 반대는 오로지 집단이기주의와 조직이주의 때문이라는 점도 정부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다.

- 다른 연기사유인 통합전산망 구축도 1,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1단계 전산망 구축이 완료되는 2000년 1월 의보통합 시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자영업자의 소득과약문제도, 이미 처음부터 법안에 2년 동안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재정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따라서 위의 사유는 핑계에 불과하고, 여권이 총선을 만들고있는 신당이 한국노총과 정책연합, 또는 노총인사업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생 제1개혁과제인 의보통합을 정치적 흥정물로 거래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 정부, 여당은 의보통합시행 연기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예정대로 2000년 1월 의보통합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기존의 법 개정안(지역가입자 부과기준에 재산을 포함시키고, 통합시 보험료 변동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을 즉각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1999. 10. 9.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

642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69 호

1999년 10월 26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 문민식

· 주소) [560-040]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52-231-9331 · 팩스) 0652-231-9332 ·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inp.or.kr · Homepage : http://inp.or.kr/onespark

집회 제한 대폭 강화

집시법시행령 구호·확성기·유인물 등 제한

지난 4월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국무회의가 집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지난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이 집시법 시행령은 경찰이 집회를 손쉽게 광범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집회주최측은 손쉽게 자유롭게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집회주최측은 집회참가자가 신고된 숫자보다 많거나, 함성과 구호를 외치고,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사람에게 모욕을 줄 수도 있는 구호 및 유인물 등을 배포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재산·시설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는 집회종결과 자진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해산당하게 된다.

시행령은 또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도 집회를 해산시킬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집시법이 이미 폭력시위여부

와 관계없이 집회가 신고한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집회해산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다 시행령은 집회주최측 관계자가 집회현장에 없을 경우 집회종결을 구두로 요청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집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시행령은 이밖에도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통해 할 수 있게 한 것을 집회를 금지시킨 경찰관서장에게 하도록 했다.

한편 집시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는 주요도로는 전주에서 팔달로 전구간과 충경로(판동로) 전구간, 도청앞 대로 등이다.

〈집시법 주요내용〉

□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③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집시법시행령 주요내용〉

□ 제3조의2(주거지역 등의 범위) ①법 제8조 제3항에서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 및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

②법 제8조제3항에서 "피해"라 함은 함성·구호의 제창, 북·징·굉파리·확성기 등의 사용, 사람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는 구호·낙서·유인물배포, 돌·화염병의 투척 등 폭력행위 기타 방법으로 재산·시설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의4(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내용)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장소 및 참가인원 2. 북·징·굉파리·확성기의 사용, 구호의 제창, 낙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

□ 제8조의2(질서유지선의 설정·고지 등) ①의1. 집회·시위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시위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②질서유지선의 설정고지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집회·시위의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이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관이 이를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 제9조의2(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해산의 요청 등)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지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종결선언의 요청 2. 자진해산의 요청 3. 해산명령 및 직접해산

### “법정노동시간 줄여야 한다”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토론회 열려

도내에서 처음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북민중연대회의(대표단체 민주노동전북본부)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전북대학교 UBS공개홀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와 토론 형식으로 이뤄졌다.

#### “주 노동시간 40시간으로 줄여야”

먼저 ‘전북지역 노동자생활과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를 발제한 민주노동전북본부 사무처장 직무대행 조문익씨는 “세계 최장수준의 실노동시간과 ‘산업재해 왕국’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법정노동시간을 반드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문익씨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광범한 미조직 노동자가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노시간 교섭에 의해 노동시간이 단축될 경우 노조가 강력한 대기업 등에서는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반면 미조직상태인 중소기업이나 임시직 등에서는 단축이 불가능하게 돼 전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규모간, 노동자간 노동시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뿐”이라며 “따라서 모든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정노동시간 단축만이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문익씨는 이를 위해서 △임금보전 등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 △신입법 노동시간단축협약 △현행 주 12시간의 초과 노동시간 축소 등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문익씨는 “최근조사에서 전북지역 미조직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7.1시간으로 법정주당노동시간인 44시간을 약 13시간 가량 초과하고 있고 특히 서비스업은 62.1시간으로 나타났다”며 “전북지역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특히 노동시간 40시간으로의 법제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목표를 명확히 하는 운동을...”

이어서 ‘유럽의 노동시간단축의 경험’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노동자기업인수단 선임연구원인 김신양씨는 “노동시간 단축은 기업의 내부조직과 노동자의 사생활, 임금과 이윤간의 부가 가치 분배문제 등에 변화를 가져오는 복잡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오브리법(일명 35시간법)이 98년 5월에 국회를 통과한 이후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유연화 정책이 확대되고 노동강도가 증가하는 한편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본질적으로 파트타임직이었다”고 평가했다.

김신양씨는 “한국에서 노동시간단축투쟁은 전 시민의 연대와 함께 △장시간 노동 철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

직화 △실업자와 일자리 나누기 등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실업자 초기업노조 가입 등 허용해야”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와 대책’을 발표한 전북인권의정치학생연합(전) 의장인 박재순씨는 “탈규제, 민영화, 구조조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이 대량실업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신규고용 채용 축소 및 동결 철폐 △취업연령제한 철폐 △청년실업자의 초기업노조 가입 허용 등을 요구하는 한편 “현대판 노예제, 반노동적인 인턴사원제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민중연대회의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행사와 동정 】

#### ▶ 장애인 편의시설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전주·군산) 발표회 -

- 10월 28일(목) 오후 2시 /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
- 주최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 1. 장애인에게 있어서 접근권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김정열)
- 2.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전주/군산) 발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고희성)

#### ▶ 제3회 실업자학교 “함께하는 세상”

- 11월 2일(화) - 11월 5일(금) 오후 6시 / 전주실업자 취업지원센터
- 자격 : 실업자 ■ 문의 : 232-1191 ■ 학비 : 무료
- 1. 실업자와 인권 / 센터 부소장 오두희
- 2. 세계화와 실업자 /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이창근
- 3. 실업자연대 / 실업자동맹 조일영
- 4. 민주주의 길 찾기 / 민주노동전북본부 조문익

####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제3차 별국민결의대회

■ 10월 30일(토) 오후 2시 / 전주코아백화점 앞

#### ▶ 교육부규탄·단체교섭승리를 위한 전북교사총정식

■ 10월 30일(토) 오후 3시 / 전주 도교육청 앞

#### ▶ 불명동한 SOFA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11월 3일(수) 오후 4시 / 참여연대 강당  
■ 주발제: 이장희(한국외대 교수, 국민행동 공동대표)

## 교육현안 외면 단체교섭 안된다

전교조 전북지부, 교육부 규탄농성 돌입

25일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차상철·삼례공고)가 ‘단체교섭 회피하고 교육정책을 교섭의제에서 배제하려는 교육부 규탄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 본부(위원장 이부영) 및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에 시작된 이번 농성에 전북지부는 지부임원 및 집행부 서장과 시군지부 회장 45명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와 지난 9월 8일 첫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교육부가 스스로 정해놓은 교섭의제 선정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후 네 차례에 걸친 교원노조의 본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교사 정원감축으로 인한 파행적 수업운영, 농촌학교 살리기 등의 교육현안을 단체교섭을 통해 개선하자고 요구했으나 전라북도 교육청(교육감 문용주)은 지난 9월 6일 일상교섭 합의사항을 뒤집고 10월 14일 일상교섭의 재요구조차 거부한 상태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농성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가 교섭의제로 교원의 임금·근로조건·후생복지 등만을 다루고 교육정책 사안은 전면 배제하는 것은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초등교원수급정책·교육관계법 개악·교육재정 축소 등 산적한 교육현안을 외면하는 교육부의 태도는 개혁의 실종에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단체교섭 의제에 교육정책 포함 △임금협약 조기타결 △합의사항 이행한 교육감 사과 △교사 법정정원 확보 등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는 30일 도교육청 앞에서 ‘교육부 규탄 및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전북교사 출정식’을 가지고,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알려졌다.

### “한라중 공권력 투입반대”

전북민중연대회의 성명

한라중공업 노동조합의 파업이 25일 현재 70일째를 맞으면서 각계에서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지역의 12개 노동인권단체로 이루어진 ‘전북민중연대회의’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어 마지막 남은 밥줄을 지키기 위해 파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감대 중정부와 현대제철은 언론과 관련단체를 통해 편파·왜곡 보도로 파업을 비방하고 공권력 투입의 구실을 찾고 있다”면서 “김대중 정부는 공권력 투입 음모를 중단하고 현대는 한라중공업 노동조합과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노동자들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공권력 투입시 전국적인 연대투쟁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직무유기, 자살중

용 근로복지공단은 개혁하라’는 성명서를 동시에 채택하고 △산재노동자 이상관세의 비관사실에 책임을 지고 유족급여를 지급할 것 △자문의 제도 개선과 산재보험운영위원회 구성 등 산재보험제도를 전면 개혁할 것 △공단 방곡윤 이사장 해임과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 “인권대통령 허구”

민교협 등 국보법 폐지 촉구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공동의장 김의수 외 5명)은 25일 성명을 내고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회의는 즉각 미봉적인 국가보안법 일부개정안을 철회하고 전면폐지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없는 인권대통령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에는 경시대 교수들이, 그리고 22일에는 서울대·부산대·한국의국어대·인천대·방송대 교수들이 잇달아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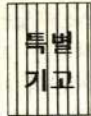
성명에 참여한 교수들은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로서 존립할 가치도 없고 존립할 수도 없으며 존립해서도 안되는 법”이라며 정치권의 부분개정 논의에 대해 “결국 반정부세력을 탄압하는 전가의 보도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 ‘국보법 폐지 현수막’ 절도 주범은?

전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대표 김진화 신부)과 전주교전주교구(이병호 주교)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활동하기로 한 뒤, 전주 각 성당에 내건 현수막이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해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수막은 지난달 말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돼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도내 각 성당 정문 또는 담벼락에 내걸렸다. 그러나 최근 전동성당과 서학동성당에 걸린 현수막이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다.

서학동성당 문규현 신부는 “얼마전에도 성당벽에 내건 현수막을 동사무소에서 가져간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공무수행’이라고 적힌 관공서 차량이 현수막을 떼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문 신부는 서학동 파출소에 현수막 도난신고를 냈다.



# 시민세력의 확장과 지역주의 극복

- 김의수 (전북대 교수·철학)

지역주의 문제는 한국의 정치지형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따라서 그것은 한국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 문제 중 하나다. 지역주의는 정치 분야를 넘어 사회생활 전반에서 한국인들의 가치판단을 지배하고 있다. 한국인의 가치판단에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모든 기준을 초월하여 덧붙여질 수 있는(있) 듯이, "지역주의(감정)" 또한 모든 가치기준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 무자격 정치인들을 퇴출시키는 시민운동이 전개되어야 하고 국민들은 거기에 대대적인 참여와 지지를 보내야 한다

### 미래지향적 가치정립을

군사독재 권력이 지역패권주의를 관철해 오는 과정에

서 호남지역 고립화 전략을 구사했고, 거기에 동원된 감정적 지역주의는 전체 정치권을 지역할거주의로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적어도 군사독재자들에게 저항했던 김영삼 김대중은 이러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끝까지 정도를 걸었어야 했다. 지역패권적 독재권력을 장기간 유지해 온 군사독재자들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지만, 양 김씨에게도 어느 정도는 책임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정치지도자들보다도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은 국민들이다. 20세기 후반 과학의 시대,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이성 지배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가 감정과 편견에 이끌려 중요한 정치적 입장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결여돼 있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민주시민의식을 스스로 확립해야 한다. 무자격 정치인들(지역주의의 조장 세력, 군사독재 잔존세력, 돈으로 공천권을 산 사람들, 부정 비리 정치인들, 민족통일의 과업을 사적인 욕심으로 훼손한 사람들 등)을 퇴출시키는 시민운동이 전개돼야 하고 국민들은 거기에 대대적

인 참여와 지지를 보내야 할 것이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시민·사회운동세력이 나서야 한다. 왜냐하면 지역주의는 정치인들에 의해 조장되었고, 경제인들을 비롯한 사회의 기득권 세력은 기존의 구조를 유지

함으로써 이득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국민 대중이 신뢰하는 시민·사회운동세력이 적극적으로 나서으로써 이 문제는 해결의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지역갈등의 근본적 해결은 그 동안 서울중심, 영남패권이 형성시킨 지역불균형 구조의 해소를 통해 가능하다. 그리고 것처럼 국가 전체의 균형 회복을 시도할 때 우리는 일자리, 국민총생산, 사회간접 자본, 환경, 문화, 시민 사회 등 인간다운 사회를 형성하는 주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차원의 갈등구조를 해소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국가 사회를 재편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미래지향적 가치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민주주의(자유, 평등), 공동선, 민족, 건강권, 노동권, 법치, 경제력, 세계 시민 연대, 지구의 생존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지역화합도 이러한 국가발전의 방향과 기준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

이 일은 지역화합이라는 하나의 목표만 갖는 것이 아니다. 지역화합 시민운동의 성공은 한국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을 높이고, 전폭적인 물갈이가 요구되는 정치인들을 퇴출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과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개혁정책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 이제 시민들이 나서자

그럴 수 있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가 요구된다. 시민운동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키워나가는 것이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도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정치인들에게 항의하고

차기 총선에서 그들을 낙선시켜야 한다. 오랜 동안 간직해 온 타 지역민에 대한 편견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만나서 대화하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 호남과 충청과 영남에서 영터리 정치인들, 구시대 인물들을 몰아내고, 타 지역민들에게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내놓고 자랑할 만한 사람들을 발굴하여 새로운 정치인들로 키워내야 한다. 나아가 여전히 각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수구적 기득권층(정치, 경제, 행정, 언론, 문화 등 제분야)을 대체할 시민세력을 스스로 형성해야 한다. 이 일을 전국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특히 지역 시민운동 활성화와 지역간 시민연대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 후원을 기다립니다.

0652-231-9331 /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70 호

1999년 11월 2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 주소 [560-040]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52-231-9331 · 팩스) 0652-231-9332  
· 통신ID) onespark(전.나.녹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inp.or.kr · Homepage : http://inp.or.kr/onespark

## 해고자 밀착 미행 의혹

### 기아특수강(주) 용역경비 해고자에 붙들려

기아특수강(주)이 1년 가까이 해고 노동자들을 밀착 미행해 왔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해고 뒤 1년간 밀착 감시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기아특수강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기)에 따르면 기아특수강(주)은 지난해 9월 30일 노동자 103명을 정리해고한 뒤 일부 해고자들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회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하자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 용역

강패를 고용해 폭행과 감시를 일삼아 왔다는 것이다.

해고노동자들은 특히 지난달 21일에는 승용차로 미행하는 용역강패를 붙잡아 파출소에 넘기고 진술서를 받아 내기도 했다. 당시 해고노동자들은 복직문제 등 현안에 대해 문정현 신부(익산 작은자매의집 원장)와 의논하기 위해 승합차를 몰고 작은자매의집으로 향해 가고 있었고, 붙잡힌 최아무개씨는 작은자매의집 정문을 통과해 따라 들어갔다가 방향을 바꿔 달아나던 중이었다. 해고자들을 미행한 의심을 사

고 있는 최씨는 진술서에서 "아무런 뜻없이 따라갔을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용역경비 월급 110만원 지급

그러나 해고노동자들의 주장은 다르다. 최씨가 지난 1년 가까이 회사에 고용돼 미행과 차량파손 등을 저질러 온 용역강패라는 사실을 해고자들 모두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아특수강(주) 노사협력팀이 지난해 10월 9일 작성한 '용역경비 총원'이라는 문건은 "9월 30일자로 단행된 정리해고자 일부의 업무방해 등을 사전 차단하고 경비를 강화하고자 용역 경비를 긴급 총원 품의한다"고 밝히고 20명의 용역경비를 용역업체인 서진공사로부터 고용해 1인당 월 110만원을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운용계획까지 적고 있다.

해고자 대책위는 "해고자 문제의 합리적이고 평화적 해결을 외면하고 불법행위에 사용되고 있는 자금의 출처에 대해 전선기 관리인 대리인과 관리인인 산업은행은 명명백백히 밝히고 즉각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아특수강(주)은 법정관리상태로 3천만원 이상의 자금을 지출하려면 사전 또는 사후에 관리인 대리가 법원에 허가 및 보고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 "실업자도 평등한 시민"

### '권리선언' 등 새 발걸음 - 전주 실업자학교

'실업자학교'가 오늘부터 5일까지 매일 저녁 6시 전주실업자취업지원센터(소장 문규현신부·서학동성당내)에서 열린다.

이번 실업자학교에서는 '실업자와 인권'을 첫 강의로, 실업자운동의 국제연대를 모색하는 '세계화와 실업자', 실업자운동 성패 요인으로써 연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실업자의 단결과 사회적 연대' 등이 강의 주제로 잡혀있어 실업자운동의 핵심 주제들이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학교에서는 실업자센터가 지난 1년 동안 연구와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실업자선언'도 발표된다. 이 선언은 전문을 비롯해 △실업자의 평등권 △노동권 △신체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정치활동의 권리 등 모두 11개 조항으로 만들어졌다(2쪽에 선언문 요약).

세 번째 학교를 열게 된 실업자센터는 지난해부터 정부의 실업예산 삭감 등 정책에 반대해 캠페인을 벌이는 등 활발한 '실업자운동'을 벌여왔다. 특히 지난달에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전북민중연대회의가 주최한 법정노동시간 단축 토론회를 주관하는 등 앞장서 실업자운동을 펼치고 있다.

■ 자격: 실업자 ■ 문의: 232-1191, 9191 ■ 학비: 무료

### 문규현 신부 방북 (국보법위반)사건 공판

■ 때: 11월 5일(금) 오전11시

■ 곳: 서초동 서울지법 319호

※ 방청문의: 011-670-7901

# 실업자 권리선언 (요약)

- 관련기사 1쪽 상자 -

## <전문>

(중략) 현재의 사회구조와 국가는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 하에 실업을 장기화시키고 실업자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는 실업자에 대한 무책임과 방기로 인해 고통받는 생명을 지닌 인간의 삶이 이처럼 빈곤과 소외로 내몰리는 모든 부당함에 대해 강력히 거부한다.

모든 실업자는 자본주의의 필요에 의한 도구로서 위치 지우려는 사회적 불의와 억압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중략)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며 모든 실업자의 자유의지와 권리를 가장 우선으로 할 것임을 당당하게 선언한다.

### 제 1 조(평등한 인간으로서 실업자)

1. 실업발생의 원인을 실업자 개인이 전담받지 않는다.
2. 경제적·사회적으로 빈곤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존과 사회활동을 보장받을 권리

### 제 2 조(노동할 권리)

1. 실업자는 노동할 권리가 있다.
2. 노동을 욕망하는 실업자는 불완전 고용에 시달려서는 안된다.
3. 실업자는 모든 노동의지가 있는 인간과 함께 현재에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할 권리가 있다.

### 제 3 조(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1. 법 이전에 존재하는 인격체로서 인간의 권리를 지닌다.
2. 이동, 이사 등 신체의 자유
3.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권리
4. 법률·의료·주택의 시설을 누리며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
5. 충분히 휴식하고 여가를 가질 권리

### 제 4 조(실업자를 억압하는 모든 것에 저항할 권리)

1. 여성·빈민·아동·노인·장애우와 더불어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에 저항할 권리
2. 임금노동자를 노예화하는 신자유주의 운동에 반대할 권리
3. 실업자는 산업예비군이 아니라 노동할 권리가 있는 인간이다.
4. 자유로워야 할 노동권을 박탈당한 실업자는 노동권을 수호하는 투쟁을 전개할 권리가 있다.

### 제 5 조(종속되지 않을 권리)

1. 실업자와는 무관한 발전의 환상에 의한 실업자 개인의 고통전담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2. 자신의 정당한 행동에 대한 정당한 심리를 받을 권리
3.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침해되지 않을 권리
4. 모든 다양한 가치와 사상을 실천할 권리와 양심·종교의 자유

### 제 6 조(정치활동의 권리)

1. 자신의 정치활동을 전개할 권리가 있다.
2. 비슷한 생각을 지닌 다른 이들과 함께 연대할 권리
3. 정치권 중심의 정치에서 자유로우며 모든 사회구성원과 연대를

## 실천할 권리

### 제 7 조(결사의 자유)

1.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행동하고 조직하며 집단활동을 할 권리
2. 전국, 전세계 실업자의 연대하고 공동의 집단활동을 할 권리

### 제 8 조(여성과 아동, 장애우, 청소년, 노인)

1. 여성과 장애우가 우선으로 노동시장에서 제외되는 상황, 역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현재의 자본주의에서 우선적으로 값싼 노동력을 불안정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상황에 반대할 권리
2.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불안정한 고용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노인은 노동할 권리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권리

### 제 9 조(축적된 생산력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

1. 실업자는 자유롭게 선택한 일터에서 노동할 권리
2. 욕망하는 노동,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권리

### 제 10 조(국가의 의무)

1. 세계 인권선언 협약을 이행하는 국가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실업자가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과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3. 국가는 실업자가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확보하여 노동할 수 있도록 실업에 대해 모든 사회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4.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

### 제 11 조

이 선언문은 11월 5일부터 전주시,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 모든 실업자의 목소리로서 우리는 우리의 선언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사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 1999년 11월 5일 -

## 【 행사와 동정 】

### ▶ 불평등한 SOFA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11월 3일(수) 오후 4시 / 참여연대 강당
- 주발제: 이장희(한국외대 교수·국민행동 공동대표)

### ▶ 학생의날 기념식 및 학생인권강좌

- 11월 3일(수) 오후 7시 / 전교조 전북지부 강당
- 강사: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교육실장)

###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종교인성적자대회

- 11월 8일(월) 오후 2시 / 전주교백교회(282-8192)

# “국보법 폐지” 요구 확산

## 종교계 이어 도내 교수들 농성·143명 서명

교수 학생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 종교인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속됨에 따라 높아지고 있다.

### 전북 교수 143명 '폐지' 서명

지난 27일~29일까지 3일 동안 전북 민주화교수협의회(회장 이종호)는 전북대 사범대 사회1관 강사대기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다.

전북민교협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헌법에 위배되고 형법과 중복되는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민교협은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을 벌여 전북지역 6개 대학 교수 143명의 서명을 받고 그 명단을 공개했다.

교수들뿐 아니라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의 공동투쟁체인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 해결을 위한 전북연대회의'(상임대표 리수현 신부)도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코아백화점 앞에서 '제3차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 행동의날 전북도민결의대회'를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치렀다.

이들은 "형사법으로 충분하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면서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지 않고서는 '진정한 민주개혁'은 있을 수 없고, 이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반민족 반통일 반민주 반인권 세력으로 간주해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소환운동과 낙선운동 등을 전개하여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 종교인들, 한나라당에 공개질의

종교계는 전북종교인협의회(회장:한상렬)를 중심으로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북종교인 40일 단식기도회'를 전주 교백교회에서 지난달 11일부터 시작해 2일 현재 23일째를 맞

고 있다. 단식농성중인 종협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논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전북도지부를 방문해 공개질의서를 건넸다. 공개질의서를 통해 종교인협의회는 "구속된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수사관은 자신의 출세와 승진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지적했다.

종협은 8일까지 국보법 폐지에 대한 한나라당 전라북도지부장의 답변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북종교인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국가보안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한나라당과 각당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 ‘고문 처벌’ 시효 없애야

수배 11년만에 모습을 드러낸 고문경찰 이근안(61)의 사법처리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 이근안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지난달 29일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이근안의 고문을 이기지 못해 '간첩'이 되어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함주명씨와 이장형씨 등이 직접 참여해 "고문으로 청춘이 날아가고 아직도 정신병원 신세를 지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이 도처에 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인권을 포기하는 일'이라면서 "더 이상의 고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이근안 관련 모든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근안의 등장으로 지난 시절

말로만 행했던 '고문'이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이번 기회에 고문 근절을 위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일간 인권신문 [인권하루소식]은 지난 30일자 신문을 통해 "인권의 원칙에서 볼 때 이씨 사건은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철저히 진실을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이씨뿐 아니라 고문을 지시했거나 은폐했던 관련자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어 "이씨 관련 사건만이 아니라 과거 모든 고문사건에 대한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진상조사와 국가차원의 사과"도 촉구하면서 "고문의 근절을 위해서 고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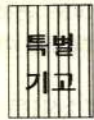
## “교육청 교섭의지 희박”

### 전교조 ‘성실교섭’ 촉구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에 교육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전북지부(지부장 차상철)가 30일 교육부 규탄 및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전북교사 출정식을 갖고 교육부의 '교육정책 교섭배제 원칙' 철회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유치원과 초중등교사 및 교육대생, 지부본부장 등 모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날 오후 3시 반부터 전북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전교조전북지부는 △교육청총정원제 폐지로 법정정원 100% 확보 △학교운영비 원상회복 △농촌교육정상화 △초등교사 주당 19시간 수업(현재 32시간) △유치원교사 특수교사 양호교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단체교섭 요구사항으로 내놓고 있다.

전교조전북지부 김인봉 사무처장은 "교육청은 후생복지나 근무조건 등은 교섭할 수 있지만 이미 예산배정이 끝났으니 교섭은 내년이나 하자고 한다"면서 더구나 "대부분 교육정책과 관련된 수밖에 없는 교육개혁관련 교섭을 배제하는 것은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집시법시행령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

- 전주형(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사무국장)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넓힐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 발전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부정하고 가로막는 독재체제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승만 독재에서부터 박정희 유신독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 그리고 현재의 김대중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후퇴시키는 행위는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 최근에 집회신고를 내는 데 무척이나 당혹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고 있다

신고제 역행하는 집시법

김대중 정부는 1999년 4월 국회에서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집시법시행령을 의결했다(『평화와인권』 제169호 참조). 개정 시행령의 특징은 경찰은 각종 집회를 손쉽게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는 반면 집회주최측은 자유롭게 집회를 열 수 없도록 제한했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최근에 집회신고를 내는 데 무척이나 당혹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전북지역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전북연대회의'라는 연대조직이 결성됐고 필자는 실무책임 맡고 있다. 그리하여 매주 목요일마다 전주 코아백화점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고 대규모 집회만도 6차례나 열었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1주일에 1번씩 경찰서를 찾아가게 된다. 집회 신고서는 각 경찰서 정보1계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집회의 성격과 참석규모 그리고 준비물을 적어야 되는 꽤 까다로운 서류양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집회신고서 내용 이외의 것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첨부시키고 있다. 그런데 수십 차례나 집회신고서를 낼 때 별 말이 없던 경찰측이 최근에는 "행진을 차도로 하지 말고 인도로 해라" "집회 참석 단체를 구체적으로 적어라" 하는 등 마치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인 양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 집회가 신고서 내용과 다르면 집회를 해산하거나 처벌될 것

임을 경고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언뜻 보기에 형식적인 절차인 것 같지만 행동에 무척이나 제약을 준다. 때문에 집회신고서를 낼 때마다 경찰측과 인성을 높이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 집시법시행령 개정 전과 사뭇 다른 자세로 경찰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만약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을 하면 아파나는 집시법으로 처벌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시행령 공포 뒤 달라진 경찰

그러나 단호하게 나는 말하고 싶다. 작금의 경찰의 행태는 민주주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집회를 여는 측에 오히려 역효과만을 준다고 말이다. 집회를 준비하는 측은 최대한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이려고 평화적인 행진, 그리고 시간을 단축하는 노력을 한다. 그러나 경찰은 불필요하게 사진을 찍기도 하고 불필요한 병력을 동원하여 집회 참석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다. 경찰은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세력이라는 오명을 아직도 받고 있다. 정

권의 하수인이라는 역할을 수십 년 동안 자행해왔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미대통령이 있는 백악관 앞에서 각종 집회를 열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해주고 있고, 국민들의 요구를 들을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연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고 공공 건물 100m 안에는 집회를 허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 나라다.

집시법시행령이 각 경찰서마다 전달이 되었기에 앞으로의 집회제한이 더욱 찾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때문에 진보적인 사회단체는 앞으로 모든 국민과 더불어 집시법 반대 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그 누구라도 국민들의 정치 사상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소수의 사람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국민 대다수의 의사표시인 집회의 자유는 더욱 보장이 되어야 한다. 때문에 현행 집시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분위기에 역행하는 현행 집시법시행령은 분명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밖에 없다.

### 후원을 기다립니다.

0652-231-9331 /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71 호

1999년 11월 9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 문만식

· 주소) [560-040]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52-231-9331 · 팩스) 0652-231-9332  
·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inp.or.kr · Homepage : http://inp.or.kr/onespark

## 제정 이래 폐지운동 최고조 전국에서 도내까지 "국보법폐지" 한목소리

99년 가을정기국회 법사위의 논의를 앞두고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 목소리가 날이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민주노동, 민교협 등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회원들이 은몸에 쇠사슬을 묶고 국회의 앞에 마련된 천막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또 이날 범국민연대회의는 22만 7천명에 이르는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이 담긴 국가보안법 폐지청원서를 국회에 건넸다.

3일에는 출소한 양심수들과 구속중인 양심수들이 국보법 폐지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같은 날 정치수배자, 과거 고문조작사건의 피해자들, 보안관찰대상자와 양심수 가족들을 포함한 3백여명도 국보법 철폐 등을 위한 범국민농성단(단장 정연오)을 구성해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일까지 단식농성을 벌인다.

4일 민교협(공동의장 손호철 외 4명)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민교협 교수들은 6일까지 철야농성을 끝내고 2일 발표한 국보법 폐지 서명 1064명에 이어 3천명의 서명을 목표로 제2차 전국교수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도내에서는 2일부터 6일까지 전북대 총학생회(회장 양준하)가 단식농성을 벌였고,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부터 현재까지 전주교백교회에서 전북종교인들이 단식기도중에 있다.

또 8일 오후 2시부터 '새 천년을 맞이하며 민족의 하나됨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 종교인 성직자 기도회'가 전주교백교회(한상열 목사)에서 열렸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천도교 원불교 성직자들이 모여 기도회를 갖고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전북도지부 김재계 기획예산처장은 전북종교인협의회가 지난 1일 전달한 공개질의서에 대해 이날 대표단에게 답변했다. 그는 "현재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독소조항이고 인권침해조항인 7조에 대하여 폐지 또는 부분개정은 생각해볼 수 있으며, 전면폐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회의 전북도지부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다.

## 인권영화로 20세기 돌아본다

제 4회 인권영화제 - 전주, 11월 27일 개막

지난 96년 처음 개최돼 해마다 시민들과 함께 했던 '제4회 인권영화제 - 전주'가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전북대학교 합동강당에서 열린다. 인권영화제는 지난 97년 상영작 <레드헌트>의 이적성 시비로 영화제 개최가 금지되고 영화제 집행위원장(서울) 서준식씨가 구속되는 등 말 그대로 "그 개최 자체가 한편의 영화보다 더 생생하고 치열한" 행사로 자리잡아왔다.

이번 인권영화제에서는 12월 2일 사형집행일을 앞둔 미국의 인권운동가 무미아 아부자말의 일생을 재조명하고 인종차별에 맞서 싸웠던 '흑표범당'(60년대 미국 흑인인권운동단체)의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작품 <민중에게 권력을>이 개막작으로 선정되는 등 약 30여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그리고 3회 인권영화제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철레전투>가 다시 선보인다. 또 98년 공포된 유엔의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져 아동권리 의식을 심어주는 길잡이 노릇을 할 작품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예전보다 폭넓은 관객들이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4회 인권영화제에는 한 세기를 정리하는 기로에서 주목할만한 인권관련 부대행사로 시민들이 직접 인권유린현장을 찾아다니며 촬영한 작품을 상영하는 '카메라 인권지기' 부문을 선보인다. 그리고 '20세기 인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가제)라는 주제로 시민들과 인터뷰한 영상물이 상영되고 행사장 주변에 간이전시회도 열릴 예정이다.

올해 인권영화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후원회원의 성금으로 운영되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자료요약]

장애인의 편의시설 실태조사(전주·군산)

[편집자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지난 7-8월 전주시와 군산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두 단체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조사결과를 놓고 토론회를 가졌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요약한 것임.

[전주시내도로 4차선 이상 28Km(양차선: 56Km), 동사무소 25개소, 우체국 18개소, 파출소 14개소, 기타 청사급 이상 10개소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편의시설설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횡단 보도의 경우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의 연속 턱낮추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1%가 기준에 맞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율은 56%였고 그 56%중에서도 50%가 규격에 맞지 않았다. 건물의 출입구 경사로 손잡이설치는 82%가 되어있지 않았고 기울기 또한 91%가 기준을 초과했다. 또 출입구 문의 손잡이는 90%가 기준에 맞지 않았다. 이것은 국가의 예산을 들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규격에 맞지 않아 재시공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둘째, 전주시의 자전거도로 확장사업은 실질적·안전적·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보도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전거도로 확장에 정책을 집중하면서 전주시의 보도는 몸살을 앓고 있다. 보도 28Km중에서 보도의 최소 유효폭은 21군데가 확보되어 있지 못했으며, 바닥표면이 미끄럽거나 평탄하지 못한 곳은 46곳이 발견되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보도의 유효폭 및 재질에 대한 기준에 입각하여 보도를 망가뜨리지 않게 자전거도로 확장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도블록의 경우 이음새틈은 1km마다 1.2군데가 있으며, 덮개는 1km 2.5개가 보도의 높이와 동일하지 않게 설치되어있다. 또한 신호등의 음향신호기는 13%가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음향신호기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균일한 소리를 내는 것은 거의 없다. 음향신호기는 모두 재시공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넷째, 보행자 중심의 도로정책이 요구된다. 횡단보도에서 비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곳은 32%나 되는 만큼 장애인의 관점으로 조사를 한다면 이보다 많은 수치가 기록될 것이다. 또한 차량 중심의 정책은 보도의 유효폭 1.2m가 확보되어 있지 못한 곳이 21군데 조사된 사실만으로도 잘 알 수 있다. 4차선 주요 간선도로에서 어떻게 최소 유효폭도 확보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다. 보도와 차도의 경계가 불분명한 2차선 도로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다섯째, 일관성 있게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곳과 설치하지 않는 곳을 분명히 구분하여 통일적으로 설치하고, 시공업자들의 공사편의에 따라 설치된 것들은 바로 철거되어야 한다.

여섯째,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장애인 담당기관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은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각 기관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잘 모르는 것을 현장 조사시 많이 볼 수 있었다. 단편적인 예로 점역안내책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어느 곳에 비치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 또한 점자블록을 어떻게 설치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을 현장 조사를 통하여 많이 접할 수 있었다.

99년 국정감사자료집 발간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에서 15대 국회의 국정감사 내용 중 행정자치위원회 등 5개 주요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인권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일목요연하게 묶었다. 자료집 가격은 복사비 수준.

- ▲ 행정자치위 2만6천원(520쪽) / 법제사법위 3만원(618쪽) / 보건복지위 4만원(831쪽) / 외무통일위 3만 4천원(686쪽) / 환경노동위 4만3천원(869쪽)
- ▲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3)

【 행사와 동정 】

- ▶ 불평등한 SOFA 개정 촉구 집회
  - 11월 9일(화) 오후 2시 / 서울 미대사관 앞
-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26차 켈텐인
  - 11월 11(목) 오후 5시 30분 / 전주코아백화점 앞
- ▶ 윤철수(군산노동자의집) 선고공판
  - 11월 12(금) 오전 9시 30분 / 전주지법 군산지원
- ▶ 이리역 양면희생사건 진상규명 촉구대회
  - 11월 13(토) 오후 2시 / 익산역 광장
- ▶ '99 전국노동자대회
  - 11월 13-14 / 서울 여의도 고수부지(금성무대)

[군산미군기지 금요일집회 100회 맞는 문정현 상임대표]

“불평등 바로잡는데, 치열해야...”

■ 100회를 맞은 소감은 ?

— 세월이 갔는데 얻어진 건 없다. 그러나 애초 군산공항민항기사용료 인상 반대라는 단순한 동기에서 출발해 불평등한 소파개정 지역모임(군산미군기지우리찾기시민모임)이 만들어지고 이제 전국조직(소파개정국민행동)까지 왔으니 조금씩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본다. 이제야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것 아니겠는가. 시작할 때는 이런 것 생각도 못했다.

■ 오늘까지 꾸준히 이어온 힘은 어디서 나왔다고 보나

— 평등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그것이 여기까지 온,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끌고 갈 힘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하고 자기자신에 대한 주체성이 있다고 한다. 그렇듯 나라와 나라간에도 그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어야 세계가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군기지문제를 통해서 다시 말해 소파(SOFA)를 통해서 우리의 미국의 관계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불평등한 조약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가. 불평등한 것을 바로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지금까지 치열하게 할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 같다.

■ 아쉬운 점, 개선할 점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 우리는 미국과 싸우고자 하는데 엉뚱한 한국경찰이 우릴 막는다. 한국인들끼리 마주보고서 미군 물러가라고 하고 있는 게 항상 화가 난다. 또 많은 단체들이 소파개정싸움의 중요함을 알면서도 일이 많아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아쉬운 점이다.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한다는 게 이렇게도 힘들 수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도 십자가에 매달렸으나 세상 변한 것 없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나면서 그 분이 왜 죽었는지 드러나고 있듯이 우리의 싸움의 이유와 정당성이 종래는 사람들에게 인식될 것이라 믿는다. 군산미군기지가 미국 캘리포니아 땅으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의 투쟁으로 우리 땅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고 소파의 불공평함도 인정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었지만 앞으로 도 힘들겠지만 조금씩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 최근에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상임대표직을 맡았는데, 그 쪽에 더 힘을 쏟을 건가

— 시민모임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 100회에 오기까지 얻은 노하우로 전국차원에서 일할 것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확산되면 국제문제까지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의 소파문제는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한 사례에 불과하다. 우리는 군사정치적으로 불평등한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대표주자로 하는 강대국에 의해 경제·정치·문화적으로 지배되는 질서를 깨고 가난하고 작은 나라도 존중받는 평등한 질서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소파 이렇게 바꾸자”

국민행동 ‘개정안’ 방향 내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 SOFA) 개정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개정 방향도 내놓은 공청회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 ‘불평등한 소파 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신부·국민행동)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참여연대 강당에서 ‘불평등한 소파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구체적인 개정운동에 들어갔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우리 민족의 군사적 자주성 회복에 대한 노력은 한미방위조약,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과다한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 폐기, 미일 미사일각서 폐기 등 한미간에 불평등한 조약의 시정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소파에서 △미군당국 요청시 재판권 포기문제 △수사권행사와 증거수집활동 및 판결집행의 제약 △한국경찰권행사의 제약 및 미군 경찰권의 남용 등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밖에도 협정의 ‘시설 기지’ 조항은 “기지 및 시설에 대한 사용은 한미 양국간의 계약을 통해 합의할 것 등의 내용을 새롭게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소파를 반드시 개정하고 이어서 이 협정을 둘러싸고 있는 방위조약 및 합의의사록, 양해각서까지 포괄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서는 소파의 또 다른 불평등 조항들도 비판의 대상에 올랐다. ‘민사, 통관(관세), 노동조항에 대한 문제점 및 개정방향’을 발제한 장주영 변호사는 “소파는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 외에도 미군 주둔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불평등 조항과 특혜조항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를 마친 문정현 상임대표는 “한미관계는 여전히 폭력적이고 반평화적”이라며 “소파 개정은 이러한 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실업'과 실업단체의 딜레마-탈출을 위한 비판

- 이창석(전주실업자취업지원센터 사무국장)

## 실업자운동과 실업극복운동

요즘 전국은 실업자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실업율이라는 수치를 들먹이면서 더욱 그렇다. 현재 전국 실업율은 4.8%다. 주당 1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고용된 인구조로 잡고 있다면 세상에 주당 1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화두가 되었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비해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실업자운동에 관련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2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의식을 제출하고자 한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실업자운동이라는 말 자체가 어색하다. 하지만 실업극복운동에는 익숙해 있다. 이 말의 차이는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이 말의 차이는 주체와 대상화라는 이중의 경계선이 존재한다고 본다. 실업자운동은 주체를 세우기 위한 전략적인 고민이라고 한다면 실업극복운동은 실업자를 대상화하는 결과물이다. 많은 사람들은 실업자운동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프랑스가 실업자 행진을 조직하는데 걸린 시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사회적 역량이 뛰어난 프랑스에서조차도 10년이 걸렸는데 과연 우리 사회가 실업자운동을 본 궤도에 올리는 데 10년만 걸리겠냐는 말이다. 맞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10년 동안 이 문제를 꾸준히 고민할 수 있는가? 유행병처럼 번지다가 양은냄비 식듯 식어버린 실업문제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 진득한 고민이 이뤄지고 있

먼저 노동조합이  
실업자운동을 ...

는가에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98년에는 많은 사회단체에서 실업문제를 다루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실업문제는 곧 사회적 과장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실업이라는 말 자체가 화두가 되지 못한다. 언론 매체들이 대부분 경기 호전으로 보도하고 있을 뿐 실업이라는 화두는 언론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그렇다고 해서 실업관련단체들이 실업문제가 이 사회의 중요한 화두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도 별로 없어 보인다.

## 실업관련단체가 해야 할 말

당장 2000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99년에 비해 단기실업예산을 무려 52%나 줄였다. 이 얼마나 음모적인가? 이제 실업률 5.6%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외한다(?)라는 엄청난 논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고 나서는 실업단체가 거의 없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실업에 관련된 모든 단체가 나서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운동 전체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실업은 사회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에 철저히 복속하면서 공정한 방식의 사회적 부의 '분배'가 잘 안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그렇다. IMF 이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빈익빈 부익부의 경향으로 치닫고 있다. 이것은 곧 실업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서 말해야 할 것이다. 사회의 공정한 분배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실업문제에서 보여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곳은 실업관련단체라고 믿는다.

또한 정부가 제출하는 실업대책만을 비판하는 것이 우리 사회단체의 임무인가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이다.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기능이다. 이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떠한 실업대책도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본다. 실업문제는 반드시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일, 국민 세금에서 실업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 실업자들을 사회적 주체로 인정하는 일들은 바로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를 정부에 관철시키는 것이 바로 사회단체의 임무라는 것도 인지해야 할 것이다.

## 실업자운동 이렇게 하자

이제 우리는 실업자운동과 실업극복운동의 본질적인 차이점에 대해 약간의 논지를 던져 보았다. 그렇다면 실업자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며, 사회운동단체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해보자. 첫째 실업자운동은 노동조합에서 먼저 고민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해고노동자들의 결의가 필요하며, 그 결의는 사회의 새로운 운동세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실업자운동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세력을 중심으로 곧추세워야만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세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운동은 바로 이런 노동조합과 연관을 가지고 지속적인 이데올로기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조직되거나 의식되지 않는 실업자들에게 그 역량을 확인시켜 실업자들의 새로운 전기를 부여하는 일이 선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실업자운동은 요원한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실업관련단체들이 보다 명확한 자신의 정체성을 위한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보다 근본적인 운동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경쟁보다는 연대를, 민간단체의 역할보다는 국가권력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실업문제를 보는 선차적인 눈이어야 할 것이다.



#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72 호

1999년 11월 16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 주소) [560-040]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52-231-9331 · 팩스) 0652-231-9332  
· 통신ID) onespark(전.나.녹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inp.or.kr · Homepage : http://inp.or.kr/onespark

## 묵살당한 노동자 단결권

### 익산시 노조신고증 교부않고 문서위조 의혹

민주노조 간섭을 선언한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 과정에서 익산시 관료들이 지방보호세력과 유착해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익산시(시장 조한용)가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강한 의혹이 일고 있다.

### 대책위 구성 등 강력히 투쟁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민주택시연맹 전북본부 등으로 구성된 익산 새한택시 노조 탄압 익산대책위원회(위원장 염경석·39·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노동조합을 설립한 새한택시 노동조합(위원장 김재춘·36)은 신고증 교부 기간인 지난 2일까지 익산시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채 익산시정실 등에서 밤샘농성을 벌이는 등 항의하고 있다.

새한택시 노조는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련 산하 익산지역택시노조 분회로 있다가 지난달 13일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통해 분회장 불신임안과 지역노조 탈퇴안을 가결처리해 지난달 29일 익산시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총회소집요구와 소집권자 지명요청 등을 거부해오던 분회장은 18일 뒤늦게 총회를 열어 13일 총회에서 이미 처리된 안들을 부결처리했다.

익산시청은 김재춘씨 등이 노조 설립을 신고하자 지난달 30일 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어떤 결과에 따라야 하는지'를 물었다. 노동부는 지난 5일 회신에서 '당초 분회장이 분회 총회의

소집을 기피하다가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분회 총회를 소집한 경우 등 분회 총회의 소집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동 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본질을 벗어난 엉뚱한 대답을 내놨다.

지난 97년 1월 7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노동부의 '지역노조의 지부·분회 단위의 탈퇴결의 효력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이 '다수의 조합원이 집단의사로 지역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 설립을 결의하더라도 단 한 명의 조합원이 지역노조에 잔류할 경우 기업별 노조 설립을 불허함으로써...조합원들의 단결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의결정족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지역노조에서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실제 관례도 이를 정당화하고 있는 점에서 익산시와 노동부의 질의·회신은 조합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 공문서 허위작성 의혹

설립신고 과정에서 익산시가 18일 분회장이 소집해 이루어진 총회의 회의록과 참석자명부의 내용을 미리 입수하고도 재적과 참석인원수를 다르게 기재해 노동부에 공문을 보낸 사실도 조합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분회가 작성한 회의록과 참석자명부에 따르면 조합원 128명 가운데 66명이 참석해 회의정족수를 채웠다고 돼 있다. 그러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 투표권이 제한돼 있는 조합원 4명이 참석자명부에 있다고 조합원들이 따지자 익산시는 124명 재적에 66명이 참

석했다고 노동부에 알렸다. 결국 익산시가 이런 사실들을 모두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대책위는 지난 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익산시 노조계장 이창호씨 등 4명을 공문서위조와 허위보고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15일에는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민주택시노련 전북본부 박재성 사무차장은 "노동관련 해당 관청들이 과거 민주노조의 설립필증을 헐사리 내주지 않던 버릇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일본 산별노조 방문 "민주노총 등과 연대 지속"

일본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全)항만노동조합과 민주노총전북본부 등 전북지역 노동단체들 사이의 열빈체 교류회가 지난주 이뤄졌다.

단장 야마모토 가즈히데씨 등 9명은 지난 11일 전북에 도착해 12일 군산비군기지 금요집회와 군산 기아특수강해고노동자 집회에 참여하고, 다음날 광주 망월동 묘역에 참배했다. 교류단은 14일에는 서울 전국노동자(민중)대회에 참석한 뒤 17일 출국한다.

전항만노동조합과 전북지역 노동자들은 지난 10년전 아시아스파나 노동자들이 일본에 건너가 일본인 사장의 노동탄압에 항의할 때 연대투쟁한 경험을 계기로 해마다 두 나라를 오가며 교류를 확대시켜가고 있다.

시민 여러분의 작은 후원으로 만들어 가는 인권영화제, 후원을 기다립니다.  
전북은행(김봉술) 518-22-0309219



### 인권영화로 돌아보는 20세기

[편집자주] 올해 전주 인권영화제에는 다양한 각도에서 인권을 조명한 24개의 작품이 선 보인다.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일요일을 뺀 나흘동안 진행될 제4회 인권영화제-전주에서 상영될 영화들을 두 번에 나누어 소개한다.

#### ◆ 민중에게 권력학 (개막작)

— 미국 / 1997년 / 115분 / 다큐 / 감독 Lee Lew-Lee

1966년부터 74년까지 흑표범당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400년 인권투쟁기간동안 나타난 가장 강력한 정치적인 조직이었다. 흑표범당의 세력이 커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 백인정부는 그것을 빌미로 민권운동을 억누르기 위해 FBI와 CIA를 통해 흑표범당의 일원과 그와 연관된 인권운동가들을 암살하고 고문하고 체포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69, 70년에 흑표범당에 가담했던 감독인 Lee Lew-Lee는 흑표범당의 결성부터 붕괴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봄으로써 미국사회내의 가난, 인종, 그리고 빈부, 그리고 정치권력을 전 계급과 그렇지 못한 계급의 피할 수 없는 싸움, 그리고 미정부가 반대세력을 축출하고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임의대로 법을 바꾸어왔는지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들을 드러낸다. 특히 흑표범당의 일원이었던 무미아 아부자말이 오는 12월 2일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는 작품이다.

#### ◆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Rights from the heart

1998년 공표된 유엔의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을 기념하기 위해 유엔 아동보호기구인 유니세프와 캐나다 국립영화 제작소(NFBC)가 만든 이 작품들은 어린이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와 선생님들에게 아동권리 의식을 심어주는 길잡이 노릇을 한다. 4분~10분 사이의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이 작품들은 전 세계어린이들에게 차별없이 보여주기 위해 대서없이 그림과 음악으로만 만들어졌다. (코코의 산수 / 아빠와 놀고 싶어요 / TV와 춤을 / 화해의 문 / 마리아의 새 가족 / 편견 / 엄마, 힘들어요 등)

#### ◆ 꼭 한 걸음씩...청구성심병원 탄압과 투쟁 보고서

— 한국 / 1999 / 45분 / 다큐 / 감독 태준식

1998년 8월 6일 밤, 청구성심병원에서 벌어진 노동자들에 대한 테러사건은 오랜 기간동안 회사측의 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사수해온 노동자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전후해서 벌어진 일련의 탄압과 투쟁은 IMF위기에 처한 한국 노동자들의 상황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과정이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힘겨운 투쟁은 그러한 탄압을 물리치는데 성공했으며 불법 부당해고를 철회시킨 순간까지를 담아낸 이 작품이 완성된 후 병원측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전면적으로 승복하게 된다.

### '준법서약폐지' 주장에 가석방 취소

지난 8.15 대통령특사로 석방된 출소자가 준법서약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가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수감해 표현과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최경원)는 지난해 11월 16일 의정부교도소가 송계호씨(30세·전남대졸)를 상대로 낸 가석방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취소결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취소이유를 "한충권과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명동성당에서 준법서약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다 지난 1월 농성을 끝내고 고향에 내려가 있다가 순천지검에 체포돼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다.

97년 당시 송씨는 한충권 조국통일위원회의 정책실장을 맡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현재 순천교도소에 수감중인 송씨는 그의 잔여형기 7개월 19일을 다 살아야 석방될 수 있다.

민가협은 "양심수에 대해 가석방을 취소해 재수감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특히 대통령 사면조치로 풀려난 양심수를 가석방 취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송씨에 대한 구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민가협은 "준법서약제도 폐지 등 법제도 개선요구는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할 수 없다"며 "송씨를 재수감한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민가협은 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주장해 온 사람에게 인신구속이라는 극단적인 물리력을 사용한 것은 또 다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 행사와 동정 】

#### ▶ 100회 불공평한 한미행협 개정을 위한 금요집회

■ 11.19(금) 오후2시 / 군산미군기지앞

#### ▶ 군산미군기지 집회 100회 기념 일일호프

■ 11.19(금) 오후4시 / 군산 조촌동성당

####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전북도민 총력결의대회

■ 11.20(토) 오후2시 / 전주 코아백화점 앞

#### ▶ 제1기 일하는 사람들의 큰학고

■ 11.16(화) 오후7시 개학 / 전주 송전제일교회

#### ▶ 전북지역 여성실업대책 토론회

■ 11.19(금) 오후 2시 / 전주 상공회의소 4층 회의실

### 종교계, 국보법 폐지운동에 앞장

도내 기장교회 "폐지" 촉구

#### [ 40일 단식 36일째 전북종교인협의회 한상렬 목사 ]

### "국보법 없애도 안보 지장없다"

#### ■ 단식기도회를 들어간지 벌써 36일째입니다.

|| 인체는 참 신비롭다고 느끼고 있다. 단식을 하며 이런 생각까지 했다. '간밤에 벗어났던 옷을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입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1주일 전부터는 단식에 몸이 적응이 되면서부터 평안해지고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힘이 없었는데 이렇게 힘이 생기는 것을 느끼면서 산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힘이 다시 생기는 이유는 아마도 그 동안 단식에 참여했던 100여명의 종교인 성직자들의 기도 덕분인 것 같다. 상황에 맞게 짧게는 하루, 길게는 20일 단식을 함께 했던 분들이다. 또한 단식기도에 큰 힘이 된 것은 20여 종교관련 단체들이 매일 밤 7시에 기도회를 하며 단식기도를 지지한 일이다. 이렇게 이번 단식기도가 갖는 의미는 민족의 문제가 종교간에 하나되는 아름다운 역사라고 생각된다.

#### ▶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주장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 완전 폐지. 왜냐하면 폐지가 되더라도 국가안보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형법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상호주의를 넘어섬으로써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 몇 개 조항 손보려고 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반대한다. 현재 정치권은 각성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라는 세계사적 조류 속에서 민족이 살길을 모색하기는커녕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만을 일삼고 있다. 근시안적 관점을 버리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볼 때 남북통일은 우리의 미래를 쥐고 있는 열쇠다. 남북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행적으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의 대상인 동포를 적으로 규정하면서 논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진정으로 국민과 민족을 위하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시켜야 한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미래는 있다.

#### ▶ 40일 단식농성을 진행하며 아쉬웠던 점은?

|| 없다. 종과 종단을 떠나서 함께 하는 아름다운 모습에 종교인 성직자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보안법 철폐의 길에서 작은 불씨가 되어서 활활 타오르기를 바랄 뿐이다.

####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 단식기도회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종교인들과 민주 시민 사회 단체들과 계속적으로 연대하며 투쟁할 것이다. 40일 단식기도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의 악법성은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폭넓은 대중화 및 내면화를 통한 실천을 도모할 생각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서 민족의 문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기도하는 행동을 실천하겠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기독교장로회 목회자 연합기도회가 15일 오후 2시부터 전주남문교회에서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전북노회 등이 주최하고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평화통일위원회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장성룡(교회와사회위원장) 목사는 설교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자 중 한 사람인 김대중씨가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이 서슬퍼렇게 살아서 많은 양심수를 만들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킬 때만 진정한 인권대통령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전북지역 기장목회자는 "현 정치인은 정치판관국을 즉각 중단하고 민의에 기초하여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민생법안의 개폐절차를 밝기를 권고한다"며 "더 이상의 파국적인 국회운영은 내년 2천년 4월 총선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도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국민회의 전북도지부 앞까지 참목행진을 벌였다. 국민회의도지부와 한나라당도지부에 전달한 공개질의서에서 이들은 "교단 소속 70여 교회에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주장을 담은 플래카드를 부착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민족사를 열어가지"고 촉구했다.

이처럼 전북지역에서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날이 갈수록 열기를 더해가며 각계각층에서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다. 기장 성직자들을 시작으로 11월 셋째주는 계속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먼저 17일에는 호남사회연구회가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18일에는 27차 목요집회, 20일에는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전북도민 총력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 군산지역 빈민(운동)은?

- 백상현(군산빈민연대회의)

21세기를 앞두고 한국사회에서 자본을 통한 국 부부의 구조적 모순은 사회 전반에 걸쳐 과격적 현상들을 확대 재생산해왔다. 국가 책임의 최소화, 자본분배의 불균형, 인간억압을 통한 권력적 잉여가치는 경제능력이 없는 인간은 시민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이른바 현대판 고려장 같은 구도를 이루고 있다.

이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빈곤의 문제는 세계자본주의의 틀이 생산시켜 놓은 최대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데 절대로 추상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될 과제이다.

국내에서도 심각하지만 군산에서의 빈민(운동)문제는 거시적이기보다는 미시적이며 지역적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 갈 필요가 있기에 이미 일제시대부터 빈민층이 존재해 왔다. 1900년대 일본인들의 상인이 증가하면서 1918년에 토지 착취의 발판이 된 토지조사사업으로 자신의 토지를 빼앗긴 민중들이 산동네를 근거지로 토막을 지으며 거주하게 되고 부두노동자들의 증가 등으로 1935년도에는 토막 거주자가 1천명이 넘게 되었다.

그후 해방을 맞고 또다시 한국전쟁을 통해 남북한 인구의 이동으로 피난민들이 군산지역의 현재 해방동 등 산동네로 이주하면서 빈민층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군산지역에 이미 와 있던 주한미군기지의 미군 주둔에 따른 소위 양공주라 불리는 여성들이 주변 빈민지역에 거주하기도 하고 군산지역 주변 어촌이나 농촌인구의 산업화에 따른 폐쇄화, 생산 기능적 및 일용노동자들의 직업 불안정으로 빈민화가 심화되었다.

최근 IMF로 인한 중산층이나 노동자들의 빈민화로 이미 국가보조(공적부조)로 생활하는 인구가 1만여명에 도달해 있으며 이에 사각지대에 놓인 인

구수를 합하면 1만5천명은 넘을 것이라는 빈민층 인구수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서울지역의 빈민운동은 70년대 이후부터 재개발반대 투쟁, 노점상권리 투쟁, 철거민생존권 투쟁 등으로 대변하는 빈민운동과는 지역특성에 따른 조급은 소극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

## 군산지역의 빈민운동은

아직 초보적 수준에 불과하지만 ...

다. 군산지역 빈민운동은 1970년대 이후 민중야화로 대변하는 야화운동이 그 맥락을 이루고 있었으나 현재에는 진보적이지 못하고 제도교육에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진정한 빈민층이 요구하는 운동성이 희미해지고 있으며 서울에서도 활성화되어 있는 산동네 또는 빈민지역에서의 공부방운동을 그 의미를 부여하며 극히 일부 공부방(선양동 민들레공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군산빈민운동의 현실이다.

군산에서 빈민운동이 미비한 이유는 서울지역에서 생겨나는 큰 이슈 부족, 지역전문운동가들의 관심부족, 서울이나 타 지역과의 연대성결여, 시민운동의 활성화에 대비되는 자원활동가 부족 등으로 인한 적극적이고 자생적인 문제 접근이 어려운 것이 그 이유라 볼 수 있다.

그나마 군산 선양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공부방 선생들과 주민과의 지속적인 연대로 주변에 필요한 복지 시설 건립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며 접근해 가고 있다.

군산지역의 빈민운동은 아직 초보적 수준에 불과하지만 시민운동의 강화,

노동운동의 발전으로 군산지역에서 계층적 부문운동을 잘 이해하고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면 형평성 있는 지역운동으로 거듭날 것이다.

빈곤문제는 국가적, 사회적 보장을 기초로 최저생계비의 증폭과 함께 절대적 빈곤에 대한 제도적 개혁이 요구되며 운동가의 적극적 활동과 주민 스스로의 자생성이 삼각구도를 이룰 때 사회적 효용성을 이룰 것이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혁하고 평등하게 살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빈민층은 지금까지 요구해 왔지만 허울뿐인 민주주의는 그동안 철저히 배반해 왔다.

우리는 빈민층이 더욱 증가되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커녕 자본에 억압당하는 민중들의 고통이 심각하게 사회화될 것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 지금까지 인권이 유린되고 소외당한 이들의 피맺힌 함성을 진지하게 대치해야 한다.

먹고사는 것만 해결되어도 행복을 느낄 수 많은 민중들이 지금 이 순간 어느 곳에서 굶주림과 관심의 부재 속에서 삶의 의욕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본주의는 끝없는 반성으로 대치해야 할 것이다.

자본은 정당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 후원을 기다립니다.

0652-231-9331 /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73 호

1999년 11월 23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문단식

· 주소) [560-040]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52-231-9331 · 팩스) 0652-231-9332  
·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inp.or.kr · Homepage : http://inp.or.kr/onespark

## 한상렬 목사 44일째 단식

### 국보법 폐지 단식기도 계속하기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전북종교인협의회 회장 한상렬 목사의 단식이 계속되고 있다.

한 목사는 지난 달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40일 동안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단식을 전개하고 22일 오후 2시 전주 교백교회에서 전북종교인협의회(회장 한상렬) 기자회견을 통해 단식기도를 최종적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한 목사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전북연대회의'(상임대표 리수현 한상렬 김승환) 공동대표 자격으로 23일 현재 44일째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

### "정치권 행태에 단식 끝낼 수 없어"

전북종교인협의회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인들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당리당략을 넘어서 정쟁의 수준에 이르렀다"며 "국회는 하루 빨리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인협의회는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는다면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주관한 전북연대회의는 "국가보안법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집권세력의 편의에 따라 계약에 계약을 거듭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어떤 개정도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상렬 목사는 "이제 종교인으로서

단식기도를 정리했지만 최근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도저히 이렇게 정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교사제단 전주서 시국기도회

한편 전북도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먼저 지난 20일 전주 코아백화점 앞에서 노동자와 학생,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모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제4차 전북도민총력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국민회의의 7조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3쪽에 이어짐]

## 인권영화제-전주

<개막식>

○ 11.26(금) 오후 6시

○ 전북대 합동강당 103호

<개막작>

○ "민중에게 권력을!"

## 미국무부 "국보법 표현자유 침해"

### 호남사회연구회 '국보법의 악법성' 토론회

호남사회연구회(회장 이종호)가 국가보안법의 악법성을 주제로 연 월례 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미국무부의 입장이 보고돼 주목을 끌었다.

지난 17일 전북대학교 인문대 교수회의실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승환(전북대법대) 교수는 미국 국무부가 펴낸 <1998 인권관행보고서>를 인용해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를 전복하려 하고 있고 이러한 특수한 사정 때문에 전체주의에 의해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더욱 위태롭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몇 가지 형식의 표현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러한 제한 조항이 때때로 주는 효과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정부의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무부는 또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안다는 국가보안법의 법적 기준은 모호하다"며 "이에 따라 수많은 한국인들이 당국이 명백히 진북한적 견해 또는 반국가적 견해라고 간주하는 반대견해를 평화롭게 표현하는 행위들로 인해 체포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그 예로 지난 97년 북한에 다녀온 뒤 구속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문규현 신부, 96년 7월 북한여행을 한 뒤 97년에 기소된 소설가 김하기씨 등의 사례를 들었다.

# 인권영화로 돌아보는 20세기

[편집자주] 올해 전주 인권영화제에는 다양한 각도에서 인권을 조명한 22개의 작품이 선보인다.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일요일을 뺀 나흘동안 진행될 제4회 인권영화제-전주에서 상영될 영화들을 소개한다. (지난호에서 이어짐)

### ◆ 국가의 살인 · 사형제도에 대한 고찰

- 1995 / 77분 / 제작 October Films

사형이란 형벌을 전일 사형집행관과 검사 등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시각을 통해 풀어보는 다큐멘터리로 역사적 사실과 현재의 진술(르포르주)을 섞어서 사형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필리핀 타이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의 최신 처벌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 ◆ 소리

- 한국 / 1999 / 13분 / 다큐멘터리 / 연출 최태규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항리에는 미제7공군 소속 비행기 사격훈련장이 있다. 매항리 문제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일면을 드러낸다. 이 땅의 본 주인은 누구이며 왜 주인이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까지 빼앗겨야 하는가의 문제를 부각시켰고 결국 국중 주인공이 살인을 일으키며 번뇌를 분출하는 과정은 그로 인한 극단적 인간성 상실을 이야기한다. <소리>는 사회적 약자를 배경으로 사실주의에 입각한 영화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진 최태규 감독의 첫 영화. 제1회 한일 청소년 영화제(KOPAN)에 처음 소개되어 고등학생답지 않은 진지한 작품 구성력으로 호평을 받았다.

### ◆ 먼지의 집 The old miner's song

- 한국 / 1999 / 50분 / 다큐멘터리 / 연출 네트워크

사북읍은 해발 700미터 이상의 경지가 전혀 없는 산간지역이었다. 무연탄 개발이 시작되면서 민가가 생겨났으며, 30년대 탄전 개발이 촉진되면서 사북은 하나의 도시를 이루게 되었다. 89년에서 93년 사이에 시행된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전국 360여개의 탄광은 20여개로 줄어들었으며, 곧이어 93년부터 경제성이 없는 탄광들은 석탄감산정책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 강원도 사북에서만도 80여개가 되었던 탄광이 동원탄좌 삼척탄좌 2개만 남게 되었고 불과 5-6년 사이에 인구가 1/4로 줄어들게 된다.

97년 연말이 되면서 사북·고한에는 어김없이 적정수준 소문이 떠돈다. 고한의 삼척탄좌가 감원을 발표한 후, 사북의 동원탄좌에서는 10여개의 하청업체 중 제일기업이 처음으로 문을 닫음으로써 소문은 현실이 된다.

근속연수 6년 이상은 통상임금의 6개월치, 6년 이하는 3개월치의 해고비와 이사비용 50만원을 약속하며 아무런 사

전통보없이 제일기업이 문을 닫으면서 50여명 남짓의 제일기업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투쟁이 시작된다.

### ◆ 멈추지 않는 대량학살 : 대인지뢰

- 프랑스 / 1997 / 40분 / 단편 옴니버스 / 쥘리 / 감독 Fernando Trueba 페르난도 트루에바 (스페인) 의

대인지뢰는 전세계 60여 나라에 1억1천만개 가량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인지뢰로 인한 사상자는 연간 1만여명이 넘는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에도 약 백만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는 1차대전 때 매설한 대인지뢰를 아직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전차나 소총은 철거했지만 대인지뢰는 전쟁이 끝나도 제거를 할 수 없다. 캄보디아 앙골라 보스니아 등 전쟁이 끝난 지역에서 여전히 피해자가 속출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가 불법이듯이 이제 대인지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대인지뢰가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 국가범죄 · 레오르도2

- 한국 / 1999년 / 90분 / 다큐멘터리 / 감독 조성봉 / 제작 하너영상

"한반도 남쪽에서 270km 떨어진 섬 제주도. 한라산을 중심으로 365개의 오름들로 이루어진 이 작은 섬에서 한국현대사 최대의 비극적인 학살사건이 일어났다. 1947년 3월 1일 미군정하에서 일어난 이 학살 사건은 6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고 사망자가 최소 3만에서 8만에 이른다. 특히 군경도발대의 초도화작전 기간 동안인 48년 10월에서 49년 3월 사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갱이라는 이름 아래 학살되었다.

우리는 그들, 지금까지 그 악몽의 세월을 공유하고 있는 노인들의 한 맺힌 증언과 삶을 통해 50년 전 제주의 참혹한 학살과 인권유린의 실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이승만 분단정권과 미국의 범죄행위의 책임을 묻는다." - 감독의 말

## 독자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구독문의: 0652-231-9331 /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 ·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 군산 미군기지 금요집회 100회

97년 시작 - 민항사용료에서 소파개정까지

지난 97년 9월 군산공항 민간항공기 사용료 인상 반대운동을 시작으로 한 군산 미군기지 앞 금요집회가 지난 19일 100회째를 맞았다. [아래 선언문]

이날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이 주최한 금요집회에는 익산역폭격진상규명대책위 활동가가 나와 연대를 호소했고 기아특수강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연단에 서 자신들의 투쟁을 '보고'했다. 시민모임 상임대표 문정현 신부는 "금요집회는 횡수가 더해갈수록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돼 왔다"고 소개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 불평등한 소파 전면개정 △미군기지 임대계약 체결 △환경과피해 중단 △공여지 해제 등 여섯 가

지를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 1쪽에서 이어짐) 한상철목사 44일째 단식

22일 오후 3시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의장 송병주)이 '농기부채탕감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며 전북 완주군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또 같은 날 7시 전주 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전주 전통성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국기도회'를 열었다.

이밖에도 전북연대회의가 다음달 4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 [자료] 100회 군산미군기지 앞 금요집회 선언문

# 불평등한 한미관계 지속되는 한 금요집회 계속된다

97년 10월 민항기 활주로 사용료 인상안 반대를 위해 시작한 금요집회가 2년여 동안의 줄기찬 투쟁 속에 100회를 맞이하였다. 이 자랑스런 투쟁은 민항사용료 인상안의 철회와 그 동안 중단되었던 한미행협(SOFA) 개정논의를 우리 정부로부터 이끌어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군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한 한미관계, 미군범죄, 소음피해 등 수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우리의 의지를 모아 힘차게 투쟁해왔다.

주한미군 주둔 54년, 현재 우리에게 남겨진 현실은 한국민에 대한 인권침해와 국가의 주권포기 요구이다. 미군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현실, 미군의 범죄에 고개를 떨구어야 하는 피해자의 현실, 우리 국토 우리 땅을 영구무상으로 사용하는 미군기지와 엄청난 환경파괴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은 모두 굴욕적인 SOFA(한미행협) 때문이다.

우리는 이처럼 부당한 현실을 바꿔보고자 99년 내내 SOFA(한미행협)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는 오로지 미국과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주권침해와 인권유린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평화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도 SOFA 개정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양민학살과 익산역폭격 등 전국 곳곳에서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의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군에 의한 세균전 감행과 고엽제 살포 지시 등 한국 땅에서 저질러지고 감춰져있던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또한 군산 미군기지에서 불법으로 무단방류하고 있는 폐수가 인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사실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땅에서의 미군과 미군기지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며 그들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로 일백회 금요집회를 맞는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은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지속되는 한 금요집회는 계속될 것임을 선언하고 불평등한 SOFA(한미행협) 전면 개정과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를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모든 힘과 역량을 총집중하여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아름다운 땅을 되찾는 그날까지 항구적인 운동을 벌이며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 불평등한 SOFA 전면 개정하라!

○ 미국은 양민학살 진상을 공개하라!

1999년 11월 19일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 인권영화제로 오세요

인권영화제의 계절이 돌아왔다. 지난 96년 첫 선을 보였던 인권영화제가 어 느덧 4년째를 맞고 있다. "인권영화제가 뭐야?" 영화제를 시작했던 4년 전 만 해도 가장 많이 들어야 했던 질문 이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질문은 들 리지 않는다.

인권영화제는 '표현의 자유를' 방송되었지만 미국에선 방송금지된 영

## 표현의 자유 위해 사전심의 거부 '카메라 인권지기' 공식부문 신설

위한 사전심의 거부, 인권을 느끼게 하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인권영화제 라는 서울 인권영화제의 취지에 동의 해 지역의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직위원회를 꾸려 이 힘과 노력으로 치러졌다. 이번 또한 마찬가지다.

**뉴라운드 결과 속 - 화상토론**  
제4회 전주 인권영화제에서는 국내작 9개, 해외작 13개로 모두 22개의 작품 이 상영된다. 올해 상영작의 특징은 국내작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에 독립영화제작이 활발해지고 있는 데 그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서울 인권영 화제에서 보다 많은 인권영화 제작을 독려하기 위해 '카메라 인권지기'라는 공식부문을 신설해 적극적인 공모에 나선 까닭이기도 하다. 서울 인권영화 제는 이들 중 '올해의 인권영화상'을 선정해 시상도 할 예정이다.

26(금)일 6시 개막식에 이어 상영될 개막작은 미국 민권운동을 주도했던 '흑표범당'의 전모를 다룬 <모든 권력 을 민중에게! : All Power to the People !>가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미국에서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가 외면당하고 있는 측면을 다각도로 드러내준다. 미국의 대표적 양심수로 17

년째 복역중인 '무미아 아부자발' 역시 흑표범당 당원이었다. 얼마 전 그의 사형이 오는 12월 2일로 확정돼 전세 계의 양심세력들은 그의 석방을 외치 며 연대하고 있다. 무미아 아부자발의 옥중인터뷰도 수록돼 있는 이 작품은 유럽 7개국에서 황금시간대에 TV로 유망 7개국에서 황금시간대에 TV로

한다.

**레드헌트 II 상영**  
제4회 전주 인권영화제에서는 부대행 사로 "WTO 뉴라운드 결과 속"이라 는 제목의 화상토론회도 준비했다. 11 월 30일은 미국 시애틀에서 'WTO뉴 라운드 협상'이 재개되는 날이다. 이 날 전세계 민간단체들은 WTO 뉴라운 드 협상이 민중생존권에 미칠 영향을 알리는 'WTO반대 민중행동'을 동시다 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 인권영화 제는 30일 저녁 6시에 뉴라운드 협상 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응책을 모색하 는 화상토론회를 진행한다.

이적표현물 시비로 97년 제2회 인권 영화제를 국내외로 알리는 데 큰 역할 을 했던 <레드헌트>의 작가가 이번에 다시 2탄을 만들었다. 전주 인권영화 제는 <국가범죄 레드헌트2>를 폐막작 으로 선정했다.

인권영화를 통해 돌아보는 20세기는 분명 '인권의 시대'가 아닌 '야만의 시 대'였음이 드러날 것이다. 영화 한 편 한 편에 담겨있는 세계 곳곳의 민중들 의 울음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야만의 20세기를 반성하도록 이끌 것이다.

### 【 행사와 동정 】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창립대회**  
■ 11.29(월) 오후7시 / 동학혁명기 념관(중남동)  
■ 연락처: 0652-232-7119

▶ **전주교도소 배제문제 의문사 사 전 행정소송**  
■ 11.30(화) 오후2시 / 전주지법 3 호

▶ **WTO 뉴라운드의 결과 속 · 문제 결과 대응방안 [화상토론회]**  
■ 11.30(화) 오후 6시 / 전북대 합 동강당 103호  
■ 주관: 전북민중연대회의

▶ **근친성폭력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세미나**  
■ 12.2(목) 오후2시 / 현대투자신탁 4층 현대문화센터  
■ 주최: 성폭력예방치료센터

▶ **전북지역 가정폭력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12.3(금) 오후2시 / 현대투자신탁 4층 현대문화센터  
■ 주최: 전주여성성전화

▶ **여성에 대한 폭력 추방 및 호주 제 폐지를 위한 거리 캠페인**  
■ 12.4(토) 오후2시 시청 앞 광장  
■ 주최: 전북여성단체연합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전북도 민 결의대회(5차)**  
■ 12.4(토) 오후2시 / 전주 코아백 화점 앞  
■ 국가보안법 철폐 전북연대회의

시민여러분의 작은후원으로 만 들어가는 인권영화제, 후원을 기다립니다.  
① 전북은행(김봉술) ① 518-22-0309219



#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74 호

1999년 11월 30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 주소) [560-040]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52-231-9331 · 팩스) 0652-231-9332  
·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inp.or.kr · Homepage : http://inp.or.kr/onespark

## “실업예산 오히려 증액해야” 도내 실업단체들 상경투쟁 · 각계 서명 전달

전주실업자취업지원센터와 전북기독 다. (성명서 아래 상자)  
교사회복지연구소 등 16개 단체로 구 비상연석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비경 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한시적 사회단체 비상연석회의)는 29일 도의 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의 실업예산 삭감에 강력히 반대하고 이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

다. (성명서 아래 상자)  
비상연석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비경 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한시적 공공근로나 취로사업 등으로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감안하면 실업예산은 오히려 증액되어 야 한다"며 정부에 실업예산 50% 삭

## 실업예산 삭감에 결사 반대한다

정부는 실업예산삭감으로 97년 IMF관리체제를 야기했던 정부의 눈속임 과 무능함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현재 실업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50%를 넘어서고 있어 잠재적 실업자를 포함하면 구조적 실업률은 증가되고 있는 형편이며, 또한 정리해고가 인정되면서 OECD회원국들 중 대량해고가 가 장 자유로운 나라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민중들의 고용 불안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우리의 실업자들은 생계를 위해서 수치감을 감수하고 줄을 서야 했으며, 이러한 모습을 보며 정부는 당당하게 실업대책이 커다란 효과를 가져와 실업자가 줄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비경제활동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며 한시적인 공공근로나 취로사업 등으로 실업률에 포함되 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감안한다면 실업자에 대한 예산은 증액되어야 마땅하며 좀더 질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0%의 실업예산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다. (중략)

우리는 모든 실업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최대빈곤이라는 나라로 빠져 들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를 즉각적으로 마련할 것을 동시에 요구한다.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국회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가난한 자와 연대를, 사 회구성원들의 동등한 평등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 이다.

1999. 11. 29  
실업예산 삭감 반대 전북시민사회단체 비상연석회의

감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비 상연석회의는 이를 위해 지난주 말까 지 여성 시도의원 노동계 인사 등 106 명으로부터 받은 서명을 주중에 정부 기획예산처와 국회 예결위에 전달하기 로 했다.

비상연석회의는 민주노총 고용원센터 등 타 지역 실업 · 노동관련 단체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실업예산 삭 감 규탄 집회를 갖기로 했다.

## “민주주의 · 인권 역행” 국보법 51년 <철폐연대>성명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문제 전 면해결을 위한 전북연대회의>는 30일 국가보안법 제정 51년째를 맞는 12월 1일에 맞춰 성명서를 내고 국가보안법 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연대회 의는 이와 함께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 전주 교백교회에서 '한상렬 목사 단식 연대 및 국가보안법 폐지 총궐기 대회'를 갖고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갖는다. 2일에는 일곱달째 계 속되는 목요캠페인도 계속할 예정이 다.

전북연대회의는 성명서에서 "국가보 안법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도 인권 도 실현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폐 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 했다.

성명은 또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는 더 이상 소수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의 소리"라며 "정칙권은 국민의 이러한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는 5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가보안 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근안 정형근 등 고문범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고문피해자 기자회견>

김순자씨 등 고문피해자 25명

'고문범죄 진상규명 -- 재발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

고문 문제가 사회문화된 가운데 고문피해자들이 고문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가협이 지난주 25일 주최한 서울 탐관공원 매주 목요일집회에서 김순자씨(79년 삼척간첩단 사건) 등 고문피해자 25명은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고문피해자들이 피해사례를 발표하기도 해 주목을 끌었다. 이장형 함주명 김태룡 김정목 정영 이상철씨 등은 70-80년대 이른바 조작간첩 사건으로 구속돼 60일에서 180일까지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당했다. 이들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돼 수십년을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또한 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에 발생한 구미유학생 사건, 민창련 사건, 반제동맹당 사건, 자민통 사건, 사노맹 사민애전 사건 등의 관련자들은 수사당국이 사건확대 왜곡 조작을 위해 고문을 자행해왔다고 주장해왔다. 구미유학생 사건의 황대권씨는 고문사사관에 대한 고소장에서 "죽을 것을 대비해 유서까지 써 놓은 상태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호소했고, 중부지역당 사건의 손병선씨는 안기부 수사관들이 의사까지 대기시켜 놓은 상태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이른바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95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해 고문중식을 국내외에 천명한 후에도 박창희 교수에 대해 잠안재우기, 집단구타 등 고문 수사를 자행하는 등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은 계속됐다.

이러한 고문범죄의 종식을 위해 94년 함주명씨 등 고문피해자 66명이 이근안 등 고문수사관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공소권없음, 무혐의 등으로 불구소처분했다. 이에 95년 함씨 등이 헌법재판소에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제도가 헌법의 고문방지 않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마저 각하시켰다.

박창렬씨의 경우 석방 직후인 89년 1월 이근안을 고소했으나 93년 시효를 넘겨버릴 때까지 검찰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 재정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박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법원의 기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고문피해자들은 특별법 제정 촉구문을 통해 "이처럼 현행 법제도로는 고문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배상 등 구제조치가 불가능하다"며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두지 않거나 둔다 하더라도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별법을 제정해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근안, 정형근 등 고문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피해자 기자회견 참가자>

1. 김순자(79년 삼척간첩단 사건, 일가족 12명 고문당함, 치안본부 남영동분실)
2. 박동운(81년 진도간첩단 사건, 일가족 7명 고문당함, 안기부)
3. 함주명(83년 치안본부 남영동분실) / 4. 이장형(84년 치안본부 남영동분실)
5. 김성만(85년 구미유학생 사건, 안기부)
6. 황인오(80년 미스유니버시티대회장 폭파기도, 치안본부 남영동분실)
7. 권문상(80년 미스유니버시티대회장 폭파기도, 사망)의 어머니
8. 최 민(86년 제현의회그룹 사건, 안기부) / 9. 홍성담(89년 걸개그림 사건, 안기부)
10. 서경원(89년 방북 사건, 안기부) / 11. 김기수(90년 자민통 사건, 안기부)
12. 소종민(90년 노동해방문학 사건, 안기부) / 13. 이은경(92년 사노맹 사건, 안기부)
14. 박홍순(92년 사노맹 사건, 안기부) / 15. 현정덕(90년 사노맹 사건, 안기부)
16. 손민영(92년 민애전 사건, 안기부) / 17. 박미옥(92년 민애전 사건, 안기부)
18. 신동욱(92년 민애전 사건, 안기부) / 19. 이경섭(92년 민애전 사건, 안기부)
20. 이승미(92년 민애전 사건, 안기부) / 21. 최진섭(92년 민애전 사건, 안기부)
22. 변의숙(92년 민애전 사건, 안기부) / 23. 송갑석(90년 전대협 4기의장, 안기부)
24. 김중식(91년 전대협 5기의장, 안기부) / 25. 김삼석(93년 김삼석 김은주 남매 사건, 안기부)

전교조 전북지부 비리고발 접수

사학운영 교원인사 등 고발창구 통해 접수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차상철)가 지난 26일 교육비리 고발창구를 개설한 데 이어 "시·군 지회들도 12월 1일 일제히 교육비리 고발창구를 개설하고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발창구는 사학운영 교육제정 교원인사 관련 비리, 교원 노조활동 탄압 사례 등을 접수할 예정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고발창구 개설을 계기로 교육행정과 사학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교육비리 척결의 토대를 마련하는 범도민적 교육개혁 운동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창구 전화 : 0652-275-8035, 7035

서울의 인권운동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이 정자치위원회 등 5개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인권관련 자료들을 수집 일목요연하게 묶었다. 이들 자료집은 복사비만으로 제공된다. 총목차를 받고 싶으신 분은 사랑방 홈페이지(http://www.iworld.net/~rights)의 '의견 및 게시판'란을 보거나, 이메일 주소 또는 ID를 알려주면 된다. 그러면 즉각 받아볼 수 있다.

◎ 행정자치위 2만6천원(520쪽) / 법제사법위 3만원(618쪽) / 보건복지위 4만원(831쪽) / 의무통일위 3만4천원(686쪽) / 환경노동위 4만3천원(869쪽)

【 행사와 동정 】

▶ 근친성폭력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세미나

■ 12.2(목) 오후2시 / 현대투자신탁4층 현대문화센터  
■ 주최: 성폭력예방치료센터

▶ 전북지역 가정폭력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12.3(금) 오후2시 / 현대투자신탁4층 현대문화센터  
■ 주최: 전주여성의전화

▶ 여성에 대한 폭력 추방 및 호주제 폐지를 위한 거리 켈터인

■ 12.4(토) 오후2시 시청 앞 광장  
■ 주최: 전북여성단체연합

▶ (사)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연 및 창립대회

■ 12.4(토) 오후2시 / 전주시청 강당

▶ 개정병원 이사장 구속되전 및 병원정상화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 12.7(화) 오후2시 / 구산 구시청 앞

"전력산업 분할·매각 반대"

'전력 공대위' 명동성당 농성

양대노총과 전력노조비대위 등 21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력산업 분할·해외매각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명동성당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30일로 엿새째를 맞았다.

전력법대위는 농성에 들어가면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기업 민영화 및 해외매각 정책 중단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예관법률 제정과 전기사업법 개정방침 철회 △한국중공업의 졸속적 빅딜과 민영화 정책 철회 △한전기공 즉기매각(민영화) 중단 등을 촉구했다.

99년 국정감사 자료집 발간

상임위 인권관련자료 일목요연하게 정리

후원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아래 계좌로 5천원 이상씩 정기적으로 입금해 주시면 후원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께서는 <평화와인권>을 보내드리고 단체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필요로 하실 경우 제공해 드립니다.

구독문의: 0652-231-9331 /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